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연구진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00년 이후 연평균 총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17년 3월 인구 190만 명 선 붕괴, 데드크로스 발생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인구구조, 농어촌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 인구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지역경제성장 저하 및 활력 침체
 -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시대, 지방의 차원에서 정책혁신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하였음

□ 연구목적

- 인구절벽·지방소멸시대 전남의 지역발전 환경변화 진단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감소시대, 전남의 장기적 지역발전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 혼·출산·양육지원 부문, 일자리(청년·노인·여성) 창출 부문, 인구유입(귀농·귀어·귀촌) 지원 부문, 주거 및 정주여건 지원 부문, 교육·의료·문화 지원 부문 등 부문별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사업발굴에 적용
- 우수사례의 전남 시책 적용방안 마련
 -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전남에 적용 가능한 인구시책 발굴·시행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전남의 인구정책방안 마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인구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우리나라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2005년 제정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국가균형발전정책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정책
- 행정안전부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新지역균형발전방안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전남의 인구실태분석 및 진단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시도로, 2000년 이후 인구증감률이 -1.0% 이하인 시군이 대다수

-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인구 증감률은 전국이 0.5%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전남의 경우 -0.7%로 감소추세

○ 2000년 이후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순천, 나주 2개시와 광양, 무안 2개 군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33.1% 차지

- 반면 2000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목포, 여수 2개시와 담양, 곡성, 고흥 등 16개 군임

○ 대체적으로 전남의 시는 주택, 군은 가족 때문에 인구가 유출하고 있음

- 20대는 직업, 30대 이상은 주택 때문에 유출, 시와 군지역에서 연령대 별 전출사유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 5대 부문으로 구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16~'17)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간하는 우수사례('15~'17)를 대상으로 선정
-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 결혼·출산·양육 부문 : 경북 포항시 ‘하나에서 넷 되기‘ 프로젝트, 대구 ‘더 (more) 행복한 더(the) 미래세대’ 사업, 경기 양평군 ‘민·관이 함께하는 가정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등
 - 일자리·소득 부문 : 부산 남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 전북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 귀농·귀어·귀촌 부문 :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제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충남 홍성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등
 - 주거·정주여건 부문 :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전북 완주군 ‘500원 으뜸택시’운행, 경북 김천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 교육·의료·문화 부문 : 강원 양구군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 뮤직케어링’ 운영,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등

□ 인구변화대응 국외사례 분석

- 5대 부문으로 구분, 전문가, 공무원, 언론 등이 지적하는 인구변화 대응의 모범적인 국외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 결혼·출산·양육 부문 :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등 보육·교육 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제도 등
 - 일자리·소득 부문 : 일본 농의 고용사업, 보라바이트 사례, 독일 겔젠키르헨 시, 고령인구 활용정책 등

- 귀농·귀어·귀촌 부문 : 일본의 정주형 취농프로그램, 급부금 정책,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미국 신규농업인 지원정책 등
- 주거·정주여건 부문 : 일본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독일 드레스덴, 미국 영스타운 등
- 교육·의료·문화 부문 : 일본 생애활약거리, 교육교류사업, 고령자데이 서비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

□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 인구감소·뉴노멀시대 메가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접근방식 수용, 전남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별 여건실태 분석 선행
- 인구감소 속에서도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설정, 인구감소 취약지역 대응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융합추진,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 추진전략

- 인구활력 종합계획시스템 구축
- 중앙부처의 인구사회정책 및 균형발전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 전남형 종합거점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 인구취약지역 진단지표 개발
- 인구취약지역 재정지원체계 마련
- 전남형 인구변화대응 종합시책 추진
- 전남형 인구대응 시범사업 실시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인구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9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1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제도	11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시책	13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	19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특별회계	19
2.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24
제3장 전남의 인구실태분석 및 진단	33
제1절 전남의 인구현황 및 전망	33
1. 총인구현황 및 전망	33
2. 시군별 인구현황 및 증감률	36
제2절 시군별 인구격차분석	41
1. 시군별 인구감소 격차	41
2. 인구증감원인에 따른 시군 유형분석	46

제3절 인구유출 원인분석	49
1. 분석개요	49
2. 시군별 연령대별 인구유출 원인분석	50
3. 지자체 유형별·연령대별 인구유출 원인분석	55
4. 광주광역시 인근 7개 시군의 인구유출 원인분석	60
제4장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67
제1절 분석개요	69
1. 분석목적	69
2. 우수사례 선정기준	69
3. 분석방법	70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71
1. 경북 포항시 ‘하나에서 넷 되기’ 프로젝트	71
2. 대구 ‘더(more) 행복한 더(the) 미래세대’ 사업	72
3. 경기 양평군 ‘민·관이 함께하는 가정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74
4.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76
5. 충남 홍성군 ‘당당한 직장 만들기’ 사업	78
제3절 일자리·소득 부문	80
1. 부산 남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	80
2. 전북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81
3.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83
4. 전북 임실군 ‘임도 공간 연계활용’ 사업	84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86
1.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86
2. 제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87
3.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89
4. 충남 홍성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	91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93
1. 경기 행복주택 ‘BABY2+ 파복하우스’	93
2. 전북 완주군 ‘500원 으뜸택시’ 운행	95
3. 충북 청주시 소나무길 상가활성화 사업	97
4.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98
5. 경북 김천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100
제6절 교육·의료·문화 부문	102
1. 강원 양구군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 뮤직케어링’ 운영	102
2.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104
3. 충남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조성사업	105
4. 전북 순창군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107
5.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108
6.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직’ 사업	110

제5장 인구변화대응 국외사례 분석	113
제1절 분석개요	115
1. 분석목적	115
2. 사례선정기준	115
3. 분석방법	115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116
1. 일본 후쿠이현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	116
2. 일본 이사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 사업	117
3. 핀란드 보육·교육정책	119
4. 스웨덴 보육·교육정책	122
5.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126
6. 영국 출산장려정책	130
7. 노르웨이 대표적 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제도	133
제3절 일자리·소득 부문	136
1. 일본 후쿠시마현 가가미이시정 논아트사업	136
2. 일본 농의 고용사업	138
3. 일본 보라바이트 사례	139
4. 독일 켈젠키르헨 시 사례	143
5. 독일 고령인구 활용정책	147
6. 미국 일자리 혁신전략	149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151
1.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	151
2. 일본 교토부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	152





3. 일본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	154
4.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157
5. 미국 신규농업인 지원정책	159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162
1.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162
2. 일본 나가노현 시모조촌 고용대책집합주택 정비사업	164
3.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166
4. 독일 드레스덴 재활성화 정책	169
5.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	171
6.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	172
제6절 교육·의료·문화 부문	176
1. 일본 생애활약거리 조성사업	176
2. 일본 아키타현 교육교류사업	178
3.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179
4. 일본 치바현 나가레야마시(流山市) 마케팅 사업	184
5. 일본 와지마시 고령자 데이 서비스	186
6. 독일 농촌관광 정책	190
제6장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193
제1절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195

1. 기본전제	195
2. 기본방향	198
제2절 추진전략	202
1. 인구활력 종합계획시스템 구축	202
2. 중앙부처의 인구사회정책 및 균형발전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203
3. 전남형 종합거점시스템 구축	204
제3절 추진과제	205
1. 인구취약지역 진단지표 개발	205
2. 인구취약지역 재정지원체계 마련	206
3. 전남형 인구변화대응 종합시책 추진	207
4. 전남형 인구대응 시범사업 실시	209
참고문헌	211



표 차례

<표 2-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내용	12
<표 2-2>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14
<표 2-3>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원투입 규모 ..	15
<표 2-4> 저출산 고령사회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예산현황(2016)	15
<표 2-5>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책 ..	16
<표 2-6> 기타 중앙부처의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시책 ..	17
<표 2-7>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유형별 예산현황	18
<표 2-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 ..	25
<표 2-9>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유형 ..	27
<표 2-1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결과(2018년)	28
<표 2-1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결과(2017년)	29
<표 3-1> 시도별 인구 및 인구증감률	34
<표 3-2> 전남 시군별 인구 및 인구증감률	37
<표 3-3> 전남 시군별 인구구조변화	40
<표 3-4> 인구감소지역('00~'17)	42
<표 3-5>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인구증감현황('00~'17) ..	42
<표 3-6> 전남의 시군별 소멸위험지수	45
<표 3-7> 인구증감('00~'17)에 따른 전남의 자치단체 유형분류	46
<표 3-8>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인구증감현황('00~'17) ..	48
<표 3-9> 전입신고서 상 전입사유	49
<표 3-10> 전남 지역별 전출사유	50

<표 3-11> 전남 지역별 연령대별 상위 3순위 전출사유	52
<표 3-12> 전남 시지역 연령대별 전출사유	53
<표 3-13> 전남 군지역 연령대별 전출사유	53
<표 3-14> 전출사유 상위순위별 시군	54
<표 3-15> 지자체 유형별 전출사유별 전출건수 및 비중 (2016년)	55
<표 3-16> 유형Ⅱ 연령대별 전출사유	57
<표 3-17> 유형Ⅲ 연령대별 전출사유	57
<표 3-18> 유형Ⅳ 연령대별 전출사유	58
<표 3-19> 유형Ⅴ 연령대별 전출사유	59
<표 3-20>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별 연령대별 1순위 전출사유	60
<표 3-21> 나주시 연령대별 전출사유	61
<표 3-22> 담양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1
<표 3-23> 곡성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2
<표 3-24> 회순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3
<표 3-25> 함평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3
<표 3-26> 영광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4
<표 3-27> 장성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65
<표 4-1> 양평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치사업 운영현황	74
<표 4-2> 제주시 단계별 교육내용	88
<표 4-3> 연도별 영주시 귀농인 증가	90
<표 4-4>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99
<표 5-1> 핀란드 아동수당(2012년 대비 2015년)	121
<표 5-2> 스웨덴의 보육기관 유형	123
<표 5-3> 프랑스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유형	128





<표 5-4> 유럽 주요국의 보육·교육정책 비교	129
<표 5-5> ‘농의 고용사업’의 수급조건과 지원 내용	139
<표 5-6> 청년 취농 급부금의 수급조건과 지원 내용 ..	155
<표 5-7> 회원국별 소농직불제 수혜 농민 비중(2015년) ..	159
<표 5-8> 아이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창구의 실적	167
<표 5-9> 도야마 시 중심시가지지구 및 거주추진지구를 위한 인센티브	174
<표 5-10> 아스나로엔의 데이 서비스 이용 스케줄	188
<표 5-11> DLG인증 대상 숙박시설 및 주요 평가항목 ..	191
<표 6-1> 지역별 자체 균특회계의 세입구성	206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연도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절차	13
<그림 2-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2
<그림 3-1> 시도별 인구증감률 전망('15~'45)	35
<그림 3-2> 전남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00~'17)	38
<그림 3-3> 전남 시군별 인구증감('00~'17)	41
<그림 3-4> 전남 시군별 전출사유 비중	51
<그림 3-5> 전남 지자체유형별 전출사유 비중	56
<그림 4-1> 아기사진 공모전 개최 모습	75
<그림 4-2> 경기도 따복하우스 추진 지구	94
<그림 4-3> 강원도 아동 뮤직케어링 서비스 현황	103
<그림 4-4> 벽진면 문화센터 전경 및 이용사례	109
<그림 4-5> 숲속장터 포레포레	111
<그림 5-1> 핀란드의 육아지원제도	120
<그림 5-2> 일본 가가미이시정의 논아트	137
<그림 5-3> 보바라이트 참가자들의 증가 추이	140
<그림 5-4> 농업 보라바이트의 구조	142
<그림 5-5> 겔젠키르헨시 도시계획	146
<그림 5-6>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 추진체계	153
<그림 5-7>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 정책 개요	156
<그림 5-8> 미국 Start2Farm의 정보제공단계	160
<그림 5-9> 작은 거점마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도	163
<그림 5-10> 일본 생애활약거리 추진현황(2016)	177
<그림 5-11>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로 본 지역 포괄시스템	180
<그림 5-1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183
<그림 5-13> 왕복버스에 타는 아이들	185





<그림 5-14> 슬로건 “엄마가 된다면, 나가레야마시”로 육아에 최적의 환경임을 홍보	185
<그림 5-15> 와자마시의 통근형 데이 서비스 센터 위치 ..	187
<그림 5-16> 아스나로엔의 이용자 활동 모습	189
<그림 6-1>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의 특징	195
<그림 6-2> 저성장시대의 특징	196
<그림 6-3>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트렌드변화	197
<그림 6-4>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20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총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위기, 데드크로스 발생
 -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00년 이후 연평균 총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17년 3월 인구 190만 명 선 붕괴
 - '00년 대비 '16년에 경기도와 제주도 등은 연평균 2.03%와 1.06% 증가한 반면 전남, 부산, 전북 등은 -0.70%, -0.51%, -0.43%씩 감소
 -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와 함께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6월, 광역시·도 최초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발생
 -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량은 '00년 7,666명에서 '13년 -931명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7년에는 -4,442명으로 증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인구구조
 - '17년 전남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1.5%로 전국의 14.2% 대비 1.5배에 달하며, 고령화율은 갈수록 급증
 - '14. 8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이미 20%를 초과하여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 진입
 - 반면 유소년인구는 '00년 대비 '17년에 19.3%에서 12.3%로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도 68.8%에서 66.2%로 감소

□ 농어촌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¹⁾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6곳(72.8%)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
 - 22개 시·군 중에서 나주, 무안, 여수, 목포, 순천, 광양 제외
- 광주전남연구원(2017)에서는 향후 '40년에 전남의 297개 읍·면·동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98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고 예측
 - '40년 이후 소멸가능지역, 140개 읍·면·동을 소멸가능지역으로 분류하게 되면 전체 읍·면·동의 80%가 소멸가능성이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심화

- '00년부터 '16년까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전남의 시군은 총 18개
 -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순천시와 광양시, 무안군의 3개뿐이며, 대부분 군지역은 자연감소, 사회유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
 - 특히, 고흥군은 '00년 대비 30% 이상 총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등은 20% 이상,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신안군은 10% 이상 감소
- 지역의 인구감소가 유발한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초래,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도 심화
 - 반면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은 농어촌 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은 가중시킴

□ 지역경제성장 저하 및 활력 침체

-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생산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 활력을 침체시킴

1)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자료 작성·발표(2016. 9)

-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림수산업 및 전통제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음
-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시대, 지방의 차원에서 정책혁신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했음

2. 연구목적

- 인구절벽·지방소멸시대 전남의 지역발전 환경변화 진단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감소시대, 전남의 장기적 지역발전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 지역격차, 지방소멸,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복지수요 증가,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인구구조변화, 지역변화, 과소군 증가 및 행정환경변화 야기 등
 -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감, 인구유입에서 인구유출을 뺀 사회증감을 구분한 전남의 인구감소 실태 분석
 - 지속되는 인구유출, 자연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인구감소 실태분석 필요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 현재 전남은 “아이와 어른 모두가 살맛나는 전남”이라는 비전 하에서 ’30년까지 인구감소를 ZERO화를 목표로 인구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
 - 출산 위주의 보건정책에서 탈피하여 아동,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자를 고려한 핵심사업 위주로 선택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이에 생애주기별 결혼·출산·양육지원 부문, 일자리(청년·노인·여성) 창출 부문, 인구유입(귀농·귀어·귀촌) 지원 부문, 주거 및 정주여건 지원 부문, 교육·의료·문화 지원 부문 등 부문별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사업발굴에 적용

- 일본의 창생전략, 북유럽의 출산·양육시책 등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전략 분석

□ 우수사례의 전남 시책 적용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위기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남의 인구정책방안 마련
 - 전남의 22개 시·군별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 시책 마련
-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전남에 적용 가능한 인구시책 발굴·시행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전남 인구정책 5개년 계획 반영 및 도내, 시·군 전파하여 브랜드 시책수립에 활용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실태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00년~2017년으로 기준년도는 2017년, 비교년도는 2000년임
 - ※ 우리나라는 '95년 전면적인 행정구역체계 개편으로 인한 도농통합시 출범, '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00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2017년의 기준년도 자료를 가용할 수 없다면 2016년 등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공간적 범위

- 시·군·구 단위의 전남에 속해 있는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구분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내용적 범위

- 전남의 시군별 자연증감과 사회증감 등 인구증감, 인구가동, 인구구조 변화와 특성, 인구유출의 원인분석 등 인구실태분석
- 결혼·출산·양육·교육지원 부문, 일자리(청년·노인·여성) 창출 부문, 인구유입(귀농·귀어·귀촌) 지원 부문, 주거 및 정주여건 지원 부문, 교육·의료·문화 지원 부문별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전남에 적용 가능한 인구시책 적용방안 마련

2. 연구방법

문헌검토

- 인구절벽·지방소멸시대 지역발전 환경변화 관련 문헌조사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지방소멸·경제위기 등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여건 변화 및 대응이슈와 관련되는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지역발전정책 실태 및 제도 관련 문헌조사
 -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등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 연구 검토,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 실태 및 제도에 관한 문헌조사

사례조사

- 국내외 인구절벽·지방소멸대응 우수사례 조사
 - 기존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결혼·출산·양육·교육, 일자리, 인구유입, 주거 및 정주여건, 교육·의료·문화로 나누어 부문별 국내외 우수시책 및 사업 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숍

-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 지역발전 분야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책을 조사하고 대응전략 논의



제 2 장

인구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

KRILA

제 2 장

인구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법제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우리나라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2005년 제정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들 수 있음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
 - 국가는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
 - 지자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저출산정책
 -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정책(제7조)과 인구교육(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육(제8조), 모자보건의 증진(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고령사회정책
 - 고용과 소득보장(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조), 취약계층노인 등(제16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제17조), 경제와 산업 등(제18조),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제19조)의 정책을 규정

<표 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제1조)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대책(제7조~제10조)	- 인구정책(제7조)과 인구교육(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육(제8조), 모자보건의 증진(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고령사회정책(제11조~제19조)	- 고용과 소득보장(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조), 취약계층노인 등(제16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제17조), 경제와 산업 등(제18조),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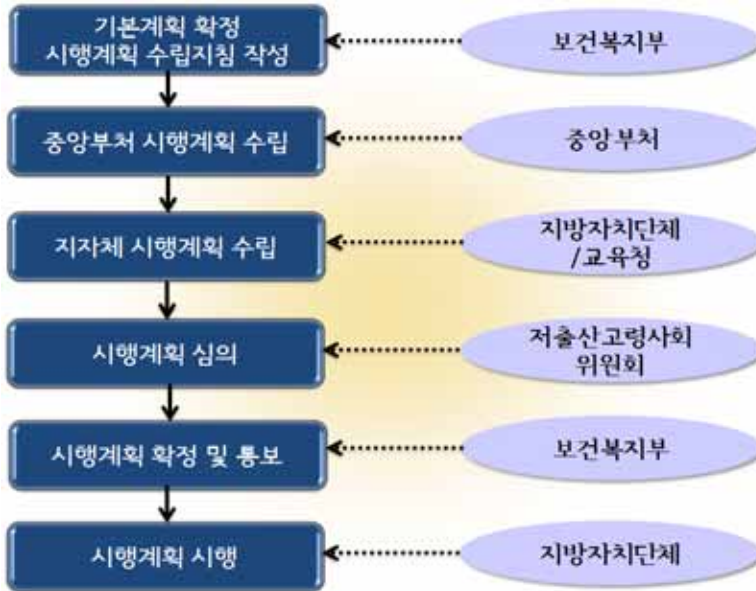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2006~2010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2016~현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자체의 시행계획은 시·도별로 수립되는데, 시·도에 속한 교육청 포함됨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종합하고, 관계 중앙부

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그림 2-1>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절차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p.56.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시책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
 - 저출산 대책의 비전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고령사회 대책의 비전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

<표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추진전략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조성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며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하여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5년 간 예산은 총 197.5조원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54.9%인 108.4조원, 고령사회대책으로 45.1%인 89.1조원이 편성되어 있음

<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원투입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5	제3차 기본계획(16-20)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합계	32.6	34.5	37.4	38.5	42.6	44.5	197.5
저출산	19.3	20.5	21.7	21.8	22.0	22.4	108.4
고령화	13.3	14.1	15.6	16.6	20.6	22.2	89.1

주: 제3차 기본계획상 예산 기준(지방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192

<표 2-4> 저출산·고령사회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예산현황(2016)

(단위: 억 원 %)

구분		과제수			예산		
합계		189			352,517		
저출산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20	10.6	81 (42.9)	36,375	10.3	214,174 (60.8)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2	16.9		11,764	3.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17	9.0		158,460	45.0	
	일가정양립 사각지대해소	12	6.3		7,575	2.1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강화	10	5.3	98 (51.9)	110,351	31.3	138,231 (39.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33	17.5		20,201	5.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29	15.3		5,123	1.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6	13.8		2,556	0.7	
대응기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0	5.3	10 (5.3)	112	0.03	112 (0.0)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 브릿지 플랜 2020의 저출산 시책

-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시책은 크게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아동·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양육·보육·돌봄 지원 사업으로 구분
 -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 의료를 지원해주는 행복출산패키지 사업, 난임 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산모·신생아·여성에게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출생자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
 - 양육·보육·돌봄 지원 사업 중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중일반, 맞춤형,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반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등 임신·출산 후 양육 및 보육과 관련되는 사업
 - 아동·가족 지원 사업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분유를 지원해주거나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 여건을 확충하는 등의 사업으로 넓게 보면 양육·보육·돌봄 부문에 포함

<표 2-5>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시책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보건복지부	임신출산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의료비(행복출산패키지) - 안전한 분만환경조성 - 난임 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지원확대(건강관리) - 임신·출산 사회적 배려강화 - 여성건강증진강화(자궁경부암 등) 	노후소득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국민연금확립(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지원) - 기초연금 내실화 - 노후준비 인프라확충 - 중고령자 취업지원활성화(재정지원 시장형 일자리)
	아동가족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분유지원 - 입양아동 양육지원확대(수당지원) - 아동이 행복한 사회(아동친화도시 인증, 영양플러스지원, 드림스타트) -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청소년 건강관리·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건강의료안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강화 - 고령자 정신건강관리강화(노인 자살예방 시범사업 실시) - 노인의료비 부담경감(인공관절)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 치매 대응체계 강화 - 호스피스 활성화 - 노인 학대 예방 - 노인안심생활지원(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및 제도화)
	양육보육돌봄	-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개편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확충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여가사회참여	-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경로당, 노인복지관 자원봉사클럽) -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재능기부)
교육부	교육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 초등돌봄교실 운영 - 교육고용체계 개편(자유학기제 확산 등) - 다자녀(셋째)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평생교육	- 고령자 교육기반확충(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표 2-6> 기타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시책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국토교통부	주택	-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확대	고령자주택	-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공실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 원스톱 주거지원안내시스템구축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 -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 - 남성육아참여활성화(육아휴직급여)	연금	- 퇴직·개인연금 확산 정착
	청년일자리	-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취업일자리	-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 중고령자 창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일가정양립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내실화,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자체사업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하에서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시책은 공동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 공동사업 중에서 약 44.3%, 자체사업의 약 69.4%를 차지하는 사업은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 임신·출산·보건·양육지원정책에 매몰
 -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정책보다 출산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인구 증대전략이 절실하기 때문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정책과 낙후지역정책과 같은 지역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공동사업과 자체사업 추진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박진경·김상민, 2017)

<표 2-7>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유형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대응기반강화		합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2011	10,800	65.1%	5,182	31.2%	602	3.6%	16,584
2012	18,405	69.6%	6,704	25.4%	1,327	5.0%	26,436
2013	24,948	72.2%	8,033	23.2%	1,594	4.6%	34,575
2014	32,334	77.0%	8,238	19.6%	1,401	3.3%	41,973
2015	26,622	70.2%	10,843	28.6%	470	1.2%	37,935
2016	27,813	69.4%	11,793	29.4%	474	1.2%	40,080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연구」.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됨
 -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 8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어져 오던 낙후지역발전정책이 사업간 유사·중복문제와 소규모 분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자 2004년 참여정부는 균특법 하에서 균형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체계를 정비
 - 60~70년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된 불균형적 국토개발로 지역격차가 심해지자 80년대 이후부터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과 농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공공개발사업을 추진
-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정책²⁾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발전 비전을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로 설정
 - 목표는 ‘혁신 주도형 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화’로서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균형발전정책 추진

2) 이하 박진경·김선기(2017)과 지역발전위원회(2018) 정리.

-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이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공간정책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및 지방 쇠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
-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등을 설정
-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의 5대 세부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정책가치를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가치중립적인 ‘지역발전’으로 전환
- 종전까지 지역발전정책에서 보편화되었던 ‘나누어 먹기식 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제로섬 논리’, ‘중앙집권적 획일성’, ‘닫혀진 내국적 논리’를 지양
-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 ‘지방분권적 차별성’, ‘열려진 세계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신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08년 7월)
- 비전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이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정책³⁾을 추진

박근혜정부의 균형발전정책

- 지역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지역행복(HOPE) 프로젝트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설정

3) 광역경제권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로 설정하였음

- 생활권정책은 주민행복 증진이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에 바탕을 둔 일상생활권 내에서 충족시키려는 전략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슬로건 아래 지역생활권정책의 3대 추진전략을 통해 추진역량 강화 등 시스템을 구축(지역발전위원회 등, 2013)
- 지역위의 지침에 따라 연계성이 높은 지자체들간 자율적으로 63개 지역생활권을 설정

□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

-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분권, 포용,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제시(지역발전위원회, 2018)
 - 공간규모별 복잡·다양한 문제 증가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경제 부문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실현,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혁신성장 촉진
- 비전과 목표
 -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목표를 위해서 사람, 공간, 산업을 위한 3대전략, 전략별 3대 핵심과제 제시

<그림 2-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3대 전략 / 9대 핵심 과제	<p>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p>2. [공간]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p>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실행력 제고 방안	<p>【 법령 】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p> <p>【 조직 】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p> <p>【 예산 】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③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 2),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사람)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과제

-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지역소재 학교지원 및 지역인재 취업 지원
-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 도시 지정·육성,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웰니스(건강·치유)관광클러스터 육성, 관광창업 지원
- ③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및 모델 확산, 지역교통체계 개편

○ (공간)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을 위한 주요과제

- ①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불편 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재생 에너지 보급 등
-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스마트 솔루션 접목), 공공상생상가 지원,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정주여건 개선, 지자체 연계협력으로 상생·협력 벨트 지정, 마을기업·공동체일자리사업 육성·확대

○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주요과제

- ① 혁신도시 시즌2 :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지자체-대학-이전기관 협력클러스터 조성, 구도심 재생과 연계,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
-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 [산업] 증견기업·지역스타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육성,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산단, 새만금, 세종시, [기반] 인력·투자·Glocalization(세계화+지방화) 지원

-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국유재산 총조사, 대부료 인하 등을 통해 국·공유 유희자산을 창업공간·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임산물 클러스터 등

○ 국가균형발전 개념 복원 및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를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복원하는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구성하는 부문별 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한 의견의 효력 강화
- 균특회계 운용시 지자체 자율성 제고, 예산 편성·배분·조정 시 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제출권 강화,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에 따른 지역차등지원 강화
-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의 지역혁신체계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주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정례적 소통 채널로써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간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협업 강화

2.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新지역균형발전방안

- 행정안전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 지방의 청년층 인구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과소화 등 지방의 공동화 및 지방소멸위기 우려
-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약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저하, 주민 삶의 질 악화 등의 문제도 초래할 우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으로 6대 전략 및 25개 실천과제 제시
 -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조성,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안정된 지역 일자리창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제시

<표 2-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

6대 전략	25개 실천과제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 지역인구활력 커뮤니티 앵커 구축,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등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 중심지 계층별 시설의 집중·재배치,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빈집·폐교 등 유희시설 활용, 지역 간 연계·네트워크 지원 등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 청년희망뿌리단 운영,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비농어업인 이주정책 지원, 지역 교류·정착 허브 지원 등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기업유치 지원, 지역 활력산업 지원, 지역순환 금융체계 구축,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성화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활성화, 시설·인력의 공동 활용, 일선 행정기관 기능 조정, 민관협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이동편의점을 활용한 종합생활서비스 제공,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의료시스템 구축 등

자료: 행정안전부(2017. 4. 2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 추진배경

- 이후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급감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

-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지속적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비중은 '70년 총인구의 57.4%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40년 약 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UN, 2015)
- 30년 내 228개 시·군 중 84개(36.8%),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39.7%) 소멸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

○ 추진방향

-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관련부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
- 통합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행자부 관련사업(마을기업, 마을공방, 공동체정원 등) 우선지원 및 관련부처(농식품부, 국토부, 문체부 등)와의 포괄적 협력·지원
- 민간기업(LH, KT, 지역기업 등) 및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특교세 사업으로 특교세 60%, 지방비 40% 매칭
- 사업방식: 시·군·구 공모
- 사업대상: 아래 인구감소지역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시·군·구
- 사업지역: 인구유출 방지가 가능한 다수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다수 마을의 거점마을
- 사업유형: 생활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및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의 5개 사업유형 제시

- 2000-2015년간 인구증감율이 -5% 이하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고령인구비율 20% 이상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20-39세 여성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표 2-9>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내용
생활여건 개선	- 특화마을 조성 및 거점마을 중심의 생활서비스 개선,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관련사업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지자체 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활용, 읍면동 기능개선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개선
지역활력 제고	- 지역의 자원·특산물·전통산업을 활용, 경제자립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민관협업에 의한 지역활력사업
공동체 활성화	-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여성, 농어민, 노인 등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지원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및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	- ICT 기술을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 스마트 타운 서비스 발굴·지원 - 스마트 주민센터 구축을 통해 주민센터 행정의 스마트화, 읍면 협업 네트워크, 온라인 주민총회, 선순환 경제기반 등 조성

자료: 행정안전부(2017. 6),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 공모절차는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 2018년에는 강원 화천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전남 곡성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지역이 선정됨
 - 2017년에는 강원 평창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강진군 등 9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음

<표 2-1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결과(2018년)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강원 화천군	화천형!!! 일자리 & 돌봄 클러스터 구축	1,500+α	- 여성공방 전시실 및 판매장 신축 - 공동돌봄센터, 돌봄클러스터 조성 - VR 체험장 조성
강원 인제군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1,500	- 하추분교 재건축 - 귀농귀촌 교육공간 조성
충남 보령시	약관에서 불혹까지 “곰내줌마아재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	1,883	- 곰내 청장년 희망키움센터 조성 - 줌마아재 희망일터 - 곰내아이꿈터, 줌마카페 조성
충남 서천군	다시 하나된 마을 철길 건너 희망으로	1,500	- 동내마실방 등 동내마실길 조성 - 춘장대역, 기차카페 등 희망으로 조성
전북 김제시	활력충천!! 사람살기 좋은 성산별곡	1,500	- 성산커뮤니티 센터 조성 - 지역공동체 지식나루터 조성 - 청년창업입대몰, 활력충전소 조성
전북 임실군	걱정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2,000	- 생산자 로컬푸드 판매장 건립 - 마을기업 리더교육, 지역주민역량 강화, 운영 컨설팅 등
전남 곡성군	청년들과 여행자의 든든한 ‘비빌언덕 곡성’	1,800	- 청년 관광창업공간 비빌언덕 하우스 조성 - 청년문화관광 비빌언덕, 청년 PD 육성, ICT 구축
전남 보성군	귀농·귀촌인마중물 사업 ‘소멸위기 문덕면 살리기 프로젝트’	2,700	- 귀농귀촌인 마중물 사업 추진 - 맞춤형 기반시설 및 소득창출사업
경북 문경시	聞慶에서 청년의 행복을 캐내다, - 청춘텃밭in 山陽	1,500	- 산양면 냥반마을 브랜딩, 워킹 홀리 데이, 문화따라 피크닉 플레이스 조성 - 지역활력 제고, 청춘텃밭 세어하우 스 건축 등 생활여건 개선
경북 봉화군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1,379	- 행복나눔 공동체 공간조성 - 스토리가 있는 생활사 박물관
경남 함양군	함양 산양삼Welcome 농장 조성	1,500	- 산야삼 주말체험농장 분양 - 시범재배, 산업화 기반 프로그램,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

자료: 행정안전부(2018. 7),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자료.

<표 2-1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결과(2017년)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강원 평창군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4,150	- 지역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관광 활성화 -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축
충북 음성군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2,506	-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 교육, 상담, 복지, 봉사사업
충남 예산군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3,000	-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 노인어르신 문화복지 증축 -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
전북 정읍시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시 조성	3,000	- 동네 레지던시 조성 등 지역활력제고 - 공동체활성화(노인공동식사, 청년유입 등)
전북 고창군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	3,000	-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생태마을) 조성 - 일자리, 창업 등 지역활력제고
전남 강진군	농촌을 두드림! 아이의 울음! 희망이 열림!	3,000	- 지역활력 커뮤니티센터(민관기관) 설립 -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인 소득증대 - 노인공동주거시설 및 아동 돌봄센터 건립
경북 영양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2,342	-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 인구지킴이 민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 육아돌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경남 하동군	유엔유 (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조성	3,000	- 실버귀촌적응센터 복합운영 프로그램 운영 -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등
경남 합천군	참살이 팝&아트 빌리지 조성	3,000	- 폐교를 활용한 참살이 팝빌리지 조성 - 참살이 교육문화센터 조성, 여가창작소 조성

자료: 행정안전부(2017. 6),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제 3 장

전남의 인구실태분석 및 진단

제1절 전남의 인구현황 및 전망

제2절 시군별 인구격차분석

제3절 인구유출 원인분석

KRILA

제 3 장

전남의 인구실태분석 및 진단

제1절 전남의 인구현황 및 전망

1. 총인구현황 및 전망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시도
 - 2017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남의 총인구는 1,896,424명으로 전년대비 약 0.4% 감소함
 - 전남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6.5%), 경북(5.2%), 충남(4.1%) 다음으로 구성비가 높은 편임
 -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인구 증감률은 전국이 0.5%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전남의 경우 -0.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전남 외에 부산(-0.5%), 전북(-0.4%), 서울(-0.3%), 경북(-0.2%), 대구(-0.1%)에서도 인구감소 경향이 보임

- 남녀 성비는 양호한 수준
 - 성비의 경우 여성 100명당 남성 100명으로 남녀가 비슷한 성비를 보이고 있음
 - 전남 외에 대전과 세종시도 남녀 성비가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의 경우 104.1명으로 남성인구가 더 많으며 역으로 울산은 94.4명으로 여성인구가 더 많게 나타남

<표 3-1> 시도별 인구 및 인구증감률

(단위: 명)

구분	인구 (2017)	구성비	성비(명)	인구증감률 ('00~'17)	2045년 인구증감률 전망 ('15~'45)	2045년 인구구성비 전망
전국	51,778,544	100.0%	100.3	0.5%	0.1	100.0%
서울	9,857,426	19.0%	104.1	-0.3%	-11.3	17.3%
부산	3,470,653	6.7%	103.0	-0.5%	-13.7	5.8%
대구	2,475,231	4.8%	101.6	-0.1%	-12.8	4.2%
인천	2,948,542	5.7%	99.3	0.9%	8.8	6.1%
광주	1,463,770	2.8%	101.8	0.4%	-8.6	2.7%
대전	1,502,227	2.9%	100.0	0.5%	-1.2	3.0%
울산	1,165,132	2.3%	94.4	0.7%	-4.4	2.2%
세종	280,100	0.5%	100.5	20.3%	201	1.1%
경기	12,873,895	24.9%	98.8	2.0%	9.1	26.6%
강원	1,550,142	3.0%	98.6	0.0%	3.4	3.1%
충북	1,594,432	3.1%	98.0	0.4%	8.3	3.4%
충남	2,116,770	4.1%	96.7	0.6%	15.1	4.7%
전북	1,854,607	3.6%	101.1	-0.4%	-5.2	3.4%
전남	1,896,424	3.7%	100.0	-0.7%	-3.1	3.4%
경북	2,691,706	5.2%	98.9	-0.2%	-3.3	5.1%
경남	3,380,404	6.5%	98.7	0.5%	-2.3	6.4%
제주	657,083	1.3%	98.6	1.1%	34.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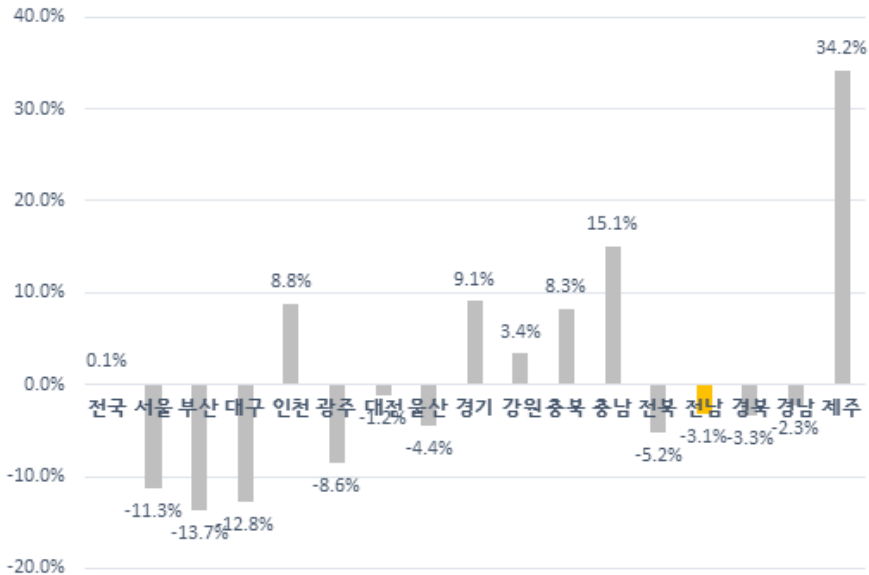
주: 1) 인구증감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2)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의미. 성비=(여성인구/남성인구)*100
 3) 2045년 인구증감률 전망과 인구구성비 전망은 2017년 통계청의 「2015~204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참고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2015~204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45년 전남의 인구는 2015년 대비 약 6만 명 감소 전망

- 통계청의 「2015~204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45년 전국 인구는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남의 경우 2015년 대비 약 6만 명(3.1%)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 2045년 전남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3.7%보다 0.3% 감소할 전망
- 특히 2015~2019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그림 3-1> 시도별 인구증감률 전망('15~'45)



2. 시군별 인구현황 및 증감률

- 2017년 전남의 시 인구는 약 100만 명, 군 인구는 약 83만 명
 - 전남 5개 시 총인구는 1,066,059명으로 전남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군 총인구는 830,365명으로 43.8%를 차지
 - 시 중에서도 특히 여수시(15.1%), 순천시(14.7%), 목포시(12.4%)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중에서는 무안군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해남군이 3.9%로 그 뒤를 따름

- 시지역은 남성부족, 군지역은 여성부족
 - 남녀 성비를 보면 시지역의 경우 여성 100명당 남성이 98.6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군지역은 101.8명으로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남
 - 5개 시 중에서 목포시와 순천시는 여성 100명당 남성인구가 100.7명으로 남성인구가 더 많게 나타났지만 여수시는 97.3명, 나주시는 98.8명, 광양시는 94.1명으로 여성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7개 군 중 11개 군에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더 많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안군의 경우 여성 100명당 남성 88.6명으로 여성대비 남성인구가 가장 낮은 지역임

〈표 3-2〉 전남 시군별 인구 및 인구증감률

(단위: 명)

구분	인구 (2017)	구성비	남	여	성비(명)	인구증감률 ('00~'17)
전남	1,896,424	100.0%	948,290	948,134	100.0	-0.7%
시	1,066,059	56.2%	536,749	529,310	98.6	-0.1%
군	830,365	43.8%	411,541	418,824	101.8	-1.3%
목포시	234,379	12.4%	116,763	117,616	100.7	-0.3%
여수시	286,382	15.1%	145,122	141,260	97.3	-0.7%
순천시	279,331	14.7%	139,167	140,164	100.7	0.2%
나주시	110,110	5.8%	55,396	54,714	98.8	0.1%
광양시	155,857	8.2%	80,301	75,556	94.1	0.7%
담양군	47,285	2.5%	23,746	23,539	99.1	-0.9%
곡성군	30,131	1.6%	14,643	15,488	105.8	-1.8%
구례군	27,525	1.5%	13,392	14,133	105.5	-1.2%
고흥군	66,736	3.5%	32,112	34,624	107.8	-2.4%
보성군	43,755	2.3%	21,153	22,602	106.9	-2.0%
화순군	64,680	3.4%	31,838	32,842	103.2	-1.1%
장흥군	40,136	2.1%	19,499	20,637	105.8	-1.6%
강진군	36,868	1.9%	17,731	19,137	107.9	-1.7%
해남군	73,604	3.9%	35,867	37,737	105.2	-1.7%
영암군	55,616	2.9%	28,502	27,114	95.1	-0.9%
무안군	82,872	4.4%	41,473	41,399	99.8	1.0%
함평군	34,328	1.8%	17,004	17,324	101.9	-1.6%
영광군	54,774	2.9%	27,296	27,478	100.7	-1.6%
장성군	46,111	2.4%	23,300	22,811	97.9	-1.1%
완도군	52,109	2.7%	26,092	26,017	99.7	-1.5%
진도군	31,765	1.7%	15,592	16,173	103.7	-1.7%
신안군	42,070	2.2%	22,301	19,769	88.6	-1.3%

주: 1) 인구증감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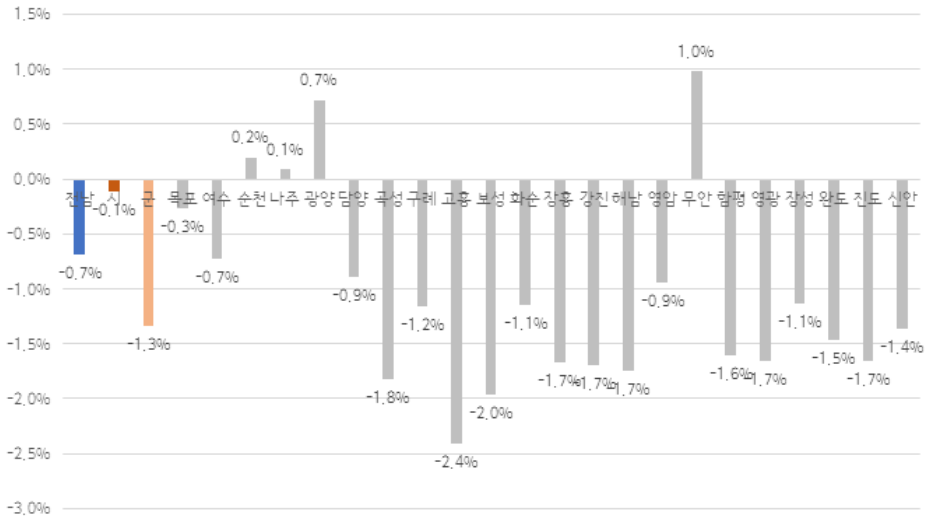
2)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의미. 성비=(여성인구/남성인구)*100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 2000년 이후 인구증감률이 -1.0% 이하인 시군이 대다수

- 전남 시군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시지역 (-0.1%) 보다 군지역(-1.3%)의 인구감소가 더 크게 나타남
 - 2000년 이후 고흥군의 인구증감률이 -2.4%로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보성(-2.0%), 곡성(-1.8%), 강진, 해남 및 진도(-1.7%), 함평, 영광, 장흥(-1.6%), 완도(-1.5%) 등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총 4개 시·군으로 광양(0.7%), 순천(0.2%), 나주(0.1%) 및 무안 (1.0%)임

<그림 3-2> 전남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감률 ('00~'17)



- 2000년 이후 유소년인구 비율은 감소, 고령인구비율은 증가
 - 2000년 이후로 전남의 유소년인구는 7.0% 감소하여 전국 7.8% 감소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 (-8.3%)에서의 유소년인구비율 감소가 군지역(-6.0%)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유소년인구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신안(6.8%), 고흥(7.3%), 곡성(8.0%) 등 10개 군이 해당됨
 - 2000년 대비 2017년 전국 생산가능인구가 0.6% 증가한데 비해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6% 감소함
 - 시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1.0% 증가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7.5% 감소
 - 특히 고흥, 완도, 보성, 진도 및 신안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0%이상 감소했음
 - 2017년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군지역 평균인 60.5% 이하인 지역은 11개 군으로 고흥(54.5%), 보성(56.2%), 진도(58.3%), 함평(58.3%), 강진(58.5), 장흥(59.3), 완도(59.4%), 해남(59.7%), 신안(59.8%), 구례(60.3%)가 해당
 - 2000년 이후 전남의 고령인구비율은 9.6% 증가하여 전국(7.2%)에 비해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7.3%)보다 군지역(13.5%)의 고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고령인구비율이 30%이상인 지역은 모두 10개 군으로 고흥(38.2%), 보성(35.3%), 함평, 곡성 및 신안(33.3%), 진도(32.1%), 강진(31.9%), 장흥(31.6%), 구례(30.7%), 완도(30.2%)가 해당

<표 3-3> 전남 시군별 인구구조변화

(단위: %)

구분	유소년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		
	2000	2017	증감	2000	2017	증감	2000	2017	증감
전국	20.9	13.1	-7.8	72.1	72.7	0.6	7.0	14.2	7.2
전남	19.3	12.3	-7.0	68.8	66.2	-2.6	11.9	21.5	9.6
시	22.4	14.0	-8.3	69.6	70.6	1.0	8.1	15.4	7.3
군	16.0	10.1	-6.0	68.0	60.5	-7.5	16.0	29.5	13.5
목포	22.2	14.8	-7.3	71.7	70.7	-1.0	6.1	14.4	8.3
여수	21.6	13.0	-8.6	70.8	70.1	-0.7	7.7	17.0	9.3
순천	23.7	14.3	-9.4	68.2	71.6	3.3	8.1	14.1	6.0
나주	16.6	13.1	-3.5	68.2	64.9	-3.2	15.2	22.0	6.7
광양	26.6	15.0	-11.7	66.7	73.7	7.0	6.7	11.4	4.7
담양	14.2	8.6	-5.6	70.1	62.6	-7.5	15.7	28.8	13.1
곡성	16.4	8.0	-8.4	65.6	58.7	-6.9	18.1	33.3	15.2
구례	15.3	9.0	-6.3	68.2	60.3	-7.9	16.5	30.7	14.2
고흥	14.2	7.3	-6.9	66.8	54.5	-12.3	18.9	38.2	19.3
보성	14.8	8.5	-6.3	66.4	56.2	-10.2	18.8	35.3	16.5
화순	19.3	10.8	-8.5	68.2	64.7	-3.5	12.5	24.5	11.9
장흥	16.1	9.1	-7.1	66.0	59.3	-6.7	17.9	31.6	13.7
강진	15.9	9.6	-6.4	66.9	58.5	-8.4	17.1	31.9	14.8
해남	16.9	10.6	-6.3	68.0	59.7	-8.3	15.1	29.7	14.6
영암	18.5	11.9	-6.7	67.2	63.4	-3.8	14.3	24.8	10.5
무안	16.1	14.8	-1.3	69.8	65.3	-4.5	14.1	19.9	5.7
함평	13.8	8.4	-5.4	67.8	58.3	-9.5	18.4	33.3	15.0
영광	18.2	10.7	-7.6	68.4	61.9	-6.5	13.4	27.4	14.0
장성	16.1	10.9	-5.2	68.7	61.3	-7.4	15.2	27.8	12.6
완도	15.7	10.4	-5.3	69.7	59.4	-10.3	14.6	30.2	15.6
진도	15.1	9.6	-5.5	68.4	58.3	-10.1	16.5	32.1	15.6
신안	12.8	6.8	-6.0	70.0	59.8	-10.1	17.2	33.3	16.2

주: 유소년인구는 14세 이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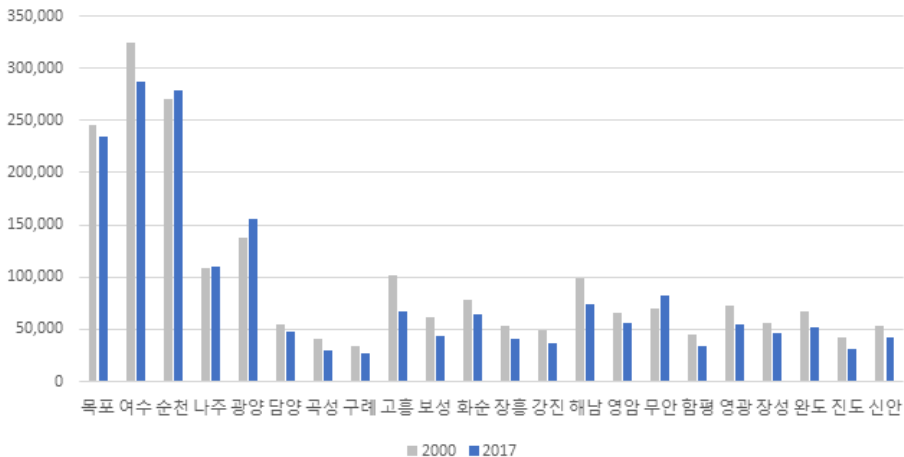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제2절 시군별 인구격차분석

1. 시군별 인구감소 격차

- 2000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한 전남 시군은 총 18개
 - 2000년 이후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순천, 나주 2개시와 광양, 무안 2개 군임
 - 반면 2000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목포, 여수 2개시와 담양, 곡성, 고흥 등 16개 군임
 - 특히 인구가 10%이상 20%미만 감소한 지역은 여수시와 담양, 구례 등 5개 군이 해당되며 20%이상 30%미만 감소한 지역은 10개 군으로 곡성, 보성, 장흥 등이 해당됨
 -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가 30%이상 감소한 전남의 지역은 고흥군으로 인구가 33.9% 감소함

<그림 3-3> 전남 시군별 인구증감('00~'17)



<표 3-4> 인구감소지역('00~'17)

구분	인구증가지역	10%미만 감소	10%이상 20%미만 감소	20%이상 30%미만 감소	30%이상 감소
전남	4개	1개	6개	10개	1개
	순천시, 나주시, 광양군, 무안군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흥군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2000, 2017년 정리

□ 인구증가지역의 인구는 전남의 33.1%

- 인구증가지역의 평균 인구는 약 15만 7천명으로 전남 1개 시·군 평균인구인 8만 6천명의 1.8배에 해당됨
- 인구증가지역의 2017년 인구는 2000년에 비해 약 4만 명, 비중은 5.6% 증가했고 인구증감률은 0.5%로 나타남

<표 3-5>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인구증감현황('00~'17)

구분	인구현황(2017년)			인구증감(2000년~2017년)			
	인구수	인구비중	평균인구	증감량	비중증감률	인구증감률	
전남	1,896,424	100.0%	86,201	-234,190	0.0%	-0.7%	
인구증가지역	628,170	33.1%	157,043	41,214	5.6%	0.5%	
인구감소지역	10%미만	234,379	12.4%	234,379	-11,113	0.8%	-0.3%
	10%이상 20%미만	527,599	27.8%	87,933	-84,855	-0.9%	-0.8%
	20%이상 30%미만	439,540	23.2%	43,954	-145,183	-4.3%	-1.7%
	30%이상	66,736	3.5%	66,736	-34,253	-1.2%	-2.4%

주: 1) 평균인구는 해당 지역별 인구수를 시군 수로 나눈 인구를 의미
 2) 비중증감률은 2000년과 2017년 단일연도의 인구비중의 증감을 의미
 3) 인구증감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2000, 2017년 정리

- 인구감소지역 중 10% 미만 감소한 지역은 목포시 1개로 2017년 인구는 234,379명이며 전남인구의 12.4%를 차지
 - 이는 2000년에 비해 약 1만 1천명이 감소한 수치로 인구증감률은 -0.3%를 기록한 반면 비중은 오히려 0.8% 증가함
- 인구가 10%이상 20%미만 감소한 지역은 총 6개 시군이며 인구는 총 527,599명으로 전남 인구의 27.8%에 해당
 - 해당 지역 평균인구는 약 8만 7천명임
 - 2000년에 비해 약 8만 5천명이 감소했으며 인구증감률은 -0.8%로 나타남
- 인구가 20%이상 30%미만 감소한 지역은 총 10개 시군이며 인구는 총 439,540명으로 전남 인구의 23.2%에 해당
 - 해당 지역 평균인구는 약 4만 3천명임
 - 2000년이 비해 약 14만 5천명이 감소했으며 인구증감률은 -1.7%를 기록함
- 인구가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고흥군으로 2017년 인구는 66,736명이며 전남의 3.5%를 차지함
 - 2000년 대비 약 3만 4천명이 감소했으며 인구증감률은 -2.4%로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 심각

- 한국고용정보원(2016)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2014)의 「지방소멸」 지표를 차용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산정한바 있음
 -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대비 20~30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을 의미
 - 소멸위험지수가 1.0이라는 것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2.0)이 유지되고 인구유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임
 -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일 경우 감소폭이 클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커진다고 예측

-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 1.18로 양호하였으나 2017년 0.43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특히 군지역은 2000년 이미 0.74로 소멸위기에 놓여있었으나 2017년 0.22로 소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
 - 2017년에 소멸위험지수가 1.0 이상인 시군은 광양시(1.23)가 유일하나 2000년 2.60에 비해 1.37 감소한 것으로 소멸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소멸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고흥군 0.11, 보성군 0.14, 신안군 0.16 순으로 나타남
 - 나주시를 포함하여 17개 시군이 2000년부터 이미 소멸위험지수가 1.0이하였으며 이 중 영암군은 2000년 0.91에서 2017년 0.30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00년 지수가 1.0이상이었다가 2017년 1.0이하로 떨어진 지역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이며 이들 지역의 감소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전남의 시군별 소멸위험지수

구분	출산지수			자녀지수			소멸위험지수		
	2000	2017	증감	2000	2017	증감	2000	2017	증감
전국	7.5	6.0	-1.6	39.5	31.3	-8.2	2.51	1.01	-1.50
전남	8.6	7.1	-1.4	42.8	36.0	-6.8	1.18	0.43	-0.75
시	8.5	6.6	-1.9	45.6	36.1	-9.5	2.02	0.76	-1.26
군	8.7	8.1	-0.6	39.2	35.9	-3.3	0.74	0.22	-0.52
목포시	8.0	6.4	-1.6	43.1	37.4	-5.7	2.80	0.81	-2.00
여주시	8.3	7.1	-1.1	43.7	34.5	-9.2	2.07	0.58	-1.49
순천시	8.2	5.8	-2.4	47.8	35.4	-12.4	2.07	0.89	-1.18
나주시	9.0	7.0	-2.0	39.4	37.9	-1.5	0.82	0.54	-0.28
광양시	10.1	7.5	-2.6	53.7	36.9	-16.8	2.60	1.23	-1.37
담양군	8.4	7.4	-0.9	32.8	29.9	-3.0	0.79	0.27	-0.53
곡성군	7.1	6.2	-0.9	42.1	29.5	-12.6	0.67	0.17	-0.50
구례군	8.0	6.8	-1.2	36.7	32.9	-3.8	0.73	0.21	-0.52
고흥군	7.4	6.4	-1.0	37.3	31.5	-5.8	0.56	0.11	-0.45
보성군	8.3	7.8	-0.5	38.0	35.4	-2.5	0.58	0.14	-0.44
화순군	10.7	5.3	-5.3	42.3	32.4	-9.9	1.24	0.32	-0.92
장흥군	8.5	5.2	-3.3	41.4	32.3	-9.1	0.61	0.18	-0.43
강진군	7.8	9.1	1.3	39.7	35.6	-4.1	0.67	0.19	-0.48
해남군	8.7	12.9	4.2	41.5	40.9	-0.7	0.79	0.21	-0.58
영암군	11.1	10.3	-0.8	44.6	39.6	-5.0	0.91	0.30	-0.61
무안군	8.5	6.8	-1.7	37.7	43.2	5.5	0.85	0.64	-0.21
함평군	7.6	8.1	0.5	35.9	32.3	-3.6	0.57	0.17	-0.40
영광군	9.1	8.3	-0.8	42.6	35.8	-6.7	0.96	0.24	-0.72
장성군	8.5	9.3	0.7	37.1	38.1	1.1	0.85	0.27	-0.58
완도군	8.8	9.5	0.7	39.2	38.9	-0.3	0.75	0.20	-0.55
진도군	8.6	7.8	-0.7	39.2	37.4	-1.7	0.64	0.17	-0.47
신안군	6.8	7.8	1.0	32.6	28.0	-4.5	0.53	0.16	-0.37

주: 1) 출산지수는 출생아수/젊은 여성(20~30대)인구수×100으로 구하였음

2) 자녀지수는 0~9세 인구수/20~30대 인구수×100으로 구하였음

3)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소멸위험지수 = 20~30대 여성인구비중/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인구증감원인에 따른 시군 유형분석

전남의 인구증가지역은 4개, 인구감소지역은 18개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인구증감과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총 6가지의 자치단체유형을 도출함
 - 총인구증감량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17년 전체인구에서 2000년 전체인구를 빼서 구하였으며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은 2000년 이후 가장 최근까지 누적된 순자연증감량과 순이동자수를 구하여 적용하였음
 - 누적 순자연증감량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출생자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을 합하여 구했으며 누적 순이동자수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값을 합산함⁴⁾

<표 3-7> 인구증감('00~'17)에 따른 전남의 자치단체 유형분류

구분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유형	개수	해당 시군
총인구 증가지역	+	+	유형 I	0	-
	+	-	유형 II	2	순천시, 광양시
	-	+	유형 III	2	나주시, 무안군
총인구 감소지역	-	-	유형 IV	14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유형 V	4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
	-	+	유형 VI	0	-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2000, 2017년 정리

4) 2000년과 2017년을 단일년도로 비교하였을 때, 자연증감이 (+), 사회증감이 (+)인데 인구가 감소하거나 자연증감이 (-), 사회증감이 (-)인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발생하여 각 연도별 순 자연증감량과 순이동자수를 구한 다음 누적하여 유형을 구분함

- 인구가 자연적, 사회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유형Ⅳ가 14개 군으로 가장 많으며 자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유형Ⅴ가 4개 지역으로 나타남
 - 자연적 증가가 사회적 감소보다 더 많아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Ⅱ가 2개 시, 자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사회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Ⅲ이 2개 시군으로 총 4개 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진행됨
 - 유형Ⅰ과 유형Ⅵ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유형Ⅳ 14개 군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
- 2017년 총인구수 및 비중을 보면 유형Ⅴ가 약 64만 명으로 전남인구의 33.8%차지하여 가장 큼
 - 그 다음으로 유형Ⅳ가 약 63만 명으로 33.1%를 차지하며 유형Ⅱ는 약 44만 명(22.9%), 유형Ⅲ은 약 19만 명(10.2%)으로 나타남
 - 그러나 평균인구를 보면 유형Ⅱ가 약 22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다음으로 유형Ⅴ가 약 16만 명, 유형Ⅲ이 약 9만 6천명, 유형Ⅳ가 약 4만 5천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유형Ⅳ의 경우 해당지역은 14개 군으로 가장 많지만 각 지역별 평균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유형Ⅱ가 약 2만 7천명이 증가했고 유형Ⅲ은 약 1만 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인구증감률은 유형Ⅱ가 0.4%로 유형Ⅲ 0.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유형Ⅳ는 2000년에 비해 2017년 인구가 약 20만 명 감소하였고 유형Ⅴ는 약 7만 2천명이 감소하였음
 -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보면 유형Ⅳ가 -1.6%로 유형Ⅴ -0.6%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함

<표 3-8>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인구증감현황('00~'17)

구분		인구현황(2017년)			인구증감(2000년~2017년)		
		인구수	인구비중	평균인구	증감량	비중증감률	인구증감률
전남		1,896,424	100.0%	86,201	-234,190	0.0%	-0.7%
인구증 가지역	유형Ⅱ	435,188	22.9%	217,594	26,903	1.4%	0.4%
	유형Ⅲ	192,982	10.2%	96,491	14,311	0.8%	0.5%
인구감 소지역	유형Ⅳ	627,197	33.1%	44,800	-203,178	-10.7%	-1.6%
	유형Ⅴ	641,057	33.8%	160,264	-72,226	-3.8%	-0.6%

주: 1) 평균인구는 해당 지역별 인구수를 시군 수로 나눈 인구를 의미
 2) 비중증감률은 2000년과 2017년 단일연도의 인구비중의 증감을 의미
 3) 인구증감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2000, 2017년 정리

제3절 인구유출 원인분석

1. 분석개요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전입·전출자수와 전입·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받아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음
- 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6년 통계를 바탕으로 세대주의 전출 원인을 분석함

<표 3-9> 전입신고서 상 전입사유

전입사유	상세내용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문화·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시군별 · 연령대별 인구유출 원인분석

□ 시는 주택, 군은 가족 때문에 유출

○ 이 중 30.6%(64,602건)가 가족에 의한 전출이었고 그 다음으로 29.6%(62,529건)가 주택에 의한 전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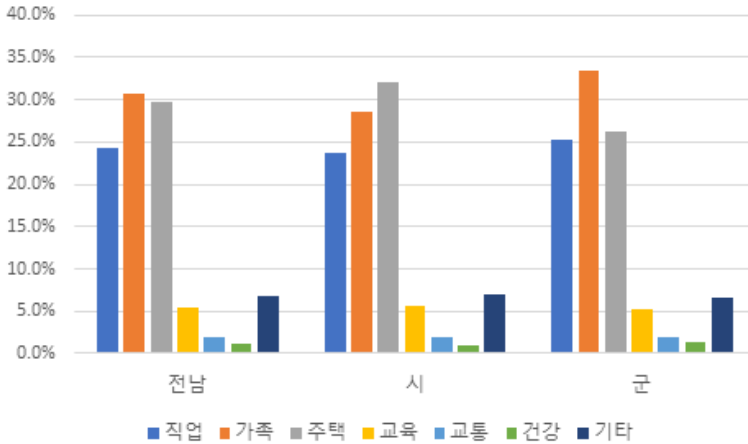
- 시지역의 경우 1순위 전출사유는 32.0%(39,391건)인 주택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 28.6%(35,234건), 직업이 23.7%(29,154건)로 나타남
- 군지역의 1순위 전출사유는 33.4%(29,368건)를 차지한 가족이며 그 다음으로 주택이 26.3%(23,138건), 직업이 25.2%(22,151건)로 나타남

<표 3-10> 전남 지역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남		시		군	
	전출수	비율	전출수	비율	전출수	비율
직업	51,305	24.3%	29,154	23.7%	22,151	25.2%
가족	64,602	30.6%	35,234	28.6%	29,368	33.4%
주택	62,529	29.6%	39,391	32.0%	23,138	26.3%
교육	11,469	5.4%	6,943	5.6%	4,526	5.1%
교통	4,165	2.0%	2,388	1.9%	1,777	2.0%
건강	2,478	1.2%	1,266	1.0%	1,212	1.4%
기타	14,496	6.9%	8,665	7.0%	5,831	6.6%
합계	211,044	100.0%	123,041	100.0%	88,003	100.0%

<그림 3-4> 전남 시군별 전출사유 비중



□ 20대는 직업, 30대 이상은 주택 때문에 유출

- 세대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와 7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을 1순위 전출사유로 들고 있으며 20대는 직업,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로 뽑았음
- 19세 이하의 2순위 전출사유는 교육이며 20대, 30대,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가족, 40대는 직업, 75세 이상은 주택을 2순위 전출사유로 들고 있음
- 10대와 30대 및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의 3순위 전출사유는 직업이며 9세 이하와 75세 이상 연령층은 기타, 20대는 주택, 40대는 가족으로 나타남

<표 3-11> 전남 지역별 연령대별 상위 3순위 전출사유

지역	전출 사유	전연령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이상
전남	1순위	가족	가족	가족	직업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가족
	2순위	주택	교육	교육	가족	가족	직업	가족	가족	주택
	3순위	직업	기타	직업	주택	직업	가족	직업	직업	기타
시	1순위	주택	가족	교육	직업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가족
	2순위	가족	교육	가족	가족	가족	직업	가족	가족	주택
	3순위	직업	기타	직업	주택	직업	가족	직업	기타	기타
군	1순위	가족	가족	가족	직업	가족	주택	주택	주택	가족
	2순위	주택	교육	교육	가족	직업	가족	가족	가족	주택
	3순위	직업	기타	직업	주택	주택	직업	직업	기타	기타

□ 시와 군지역에서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다소 차이

- 상위 3개 전출사유가 시와 군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연령대는 10대, 30대와 40대임
 - 10대는 시지역의 경우 교육이 1순위, 가족이 2순위, 주택이 3순위였으나 군지역은 1순위가 가족, 2순위가 교육, 3순위가 직업으로 차이가 남
 - 30대는 시지역은 주택, 가족, 직업이 상위 3개 전출 사유인 반면 군지역의 경우 가족, 직업, 주택으로 나타남
 - 40대의 경우 1순위 전출 사유는 시와 군지역 모두 주택을 들었으나 2, 3순위는 차이가 나는데 시지역은 직업과 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지역은 가족이 직업보다 우선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전남 시지역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29,154	38	449	10,147	7,454	5,891	4,632	466	77
가족	35,234	1,465	1,735	7,355	8,442	5,574	6,434	2,207	2,022
주택	39,391	94	309	4,284	9,514	9,772	10,849	3,023	1,546
교육	6,943	1,158	1,744	2,082	869	857	203	21	9
교통	2,388	28	81	504	515	467	489	161	143
건강	1,266	16	14	108	179	232	398	158	161
기타	8,665	222	248	1,474	2,062	1,953	1,783	518	405
합계	123,041	3,021	4,580	25,954	29,035	24,746	24,788	6,554	4,363

<표 3-13> 전남 군지역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22,151	25	376	7,284	5,345	4,436	4,197	382	106
가족	29,368	1,278	1,757	4,924	5,773	4,550	5,760	2,197	3,129
주택	23,138	78	206	2,365	4,761	5,019	6,820	2,365	1,524
교육	4,526	842	1,160	1,119	579	631	169	15	11
교통	1,777	18	70	308	297	300	385	176	223
건강	1,212	10	25	48	114	208	336	188	283
기타	5,831	140	207	918	1,058	1,130	1,340	426	612
합계	88,003	2,391	3,801	16,966	17,927	16,274	19,007	5,749	5,888

○ 그 외 연령대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이 상위 3개 전출사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9세 이하는 시와 군지역 모두 가족, 교육,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시와 군지역 모두 직업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과 주택 순이었음

-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시와 군지역 모두 주택, 가족, 직업을, 65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주택, 가족, 기타를 상위 3개 전출사유로 들고 있음
-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시와 군지역 모두 가족, 주택, 기타 순으로 전출사유를 들고 있음

□ 상위 3개 전출사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뉨

- 전출사유로 가족, 주택, 직업이 상위 3순위인 지역이 12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가족, 직업, 주택인 지역이 6개 군, 주택, 가족, 직업인 지역이 4개 시 순으로 나타남

<표 3-14> 전출사유 상위순위별 시군

전출사유			해당시군	
1순위	2순위	3순위	개수	지역명
주택	가족	직업	4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가족	주택	직업	12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가족	직업	주택	6	구례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신안군

3. 지자체 유형별 · 연령대별 인구유출 원인분석

인구증감 원인에 따른 지자체유형별 전출사유 분석

- 제2절에서 총인구 증감,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을 모두 고려하여 분류한 지자체 유형별로 2016년 전출사유를 분석함
- 인구감소지역인 유형 V의 전출건수가 1,257,2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 IV의 전출건수가 1,003,055건으로 많았음
 - 반면 인구증가지역인 유형 II는 49,416건, 유형 III은 7,344건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비해 전출이 많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인구증가가 자연적 인구감소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유형 III의 전출건수가 가장 낮게 나옴

<표 3-15> 지자체 유형별 전출사유별 전출건수 및 비중(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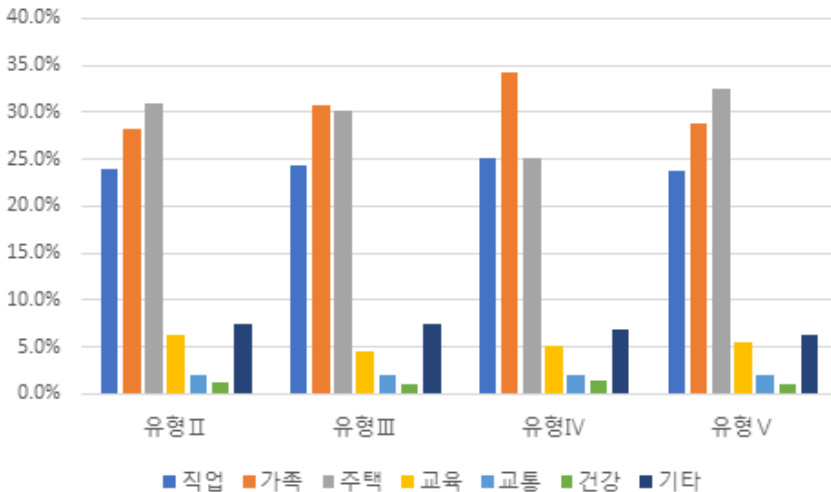
구분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	
	전출수	비율	전출수	비율	전출수	비율	전출수	비율
직업	11,820	23.9%	5,576	24.3%	16,252	25.2%	17,657	23.8%
가족	13,981	28.3%	7,065	30.8%	22,167	34.3%	21,389	28.9%
주택	15,295	31.0%	6,914	30.1%	16,226	25.1%	24,094	32.5%
교육	3,075	6.2%	1,041	4.5%	3,323	5.1%	4,030	5.4%
교통	991	2.0%	453	2.0%	1,283	2.0%	1,438	1.9%
건강	573	1.2%	212	0.9%	921	1.4%	772	1.0%
기타	3,681	7.4%	1,703	7.4%	4,399	6.8%	4,713	6.4%
합계	49,416	100.0%	7,344	100.0	1,003,055	100.0	1,257,279	100.0

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1순위 전출사유는 주택과 가족

- 유형 II 과 유형 V의 경우 주택이, 유형 III과 유형 IV는 가족이 1순위 전출사유로 나타남
 - 유형 II와 유형 V의 경우 2순위와 3순위도 가족과 직업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유형Ⅱ와 유형Ⅴ는 총인구 증감에 따라 유형이 나뉘었을 뿐 모두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출 사유별 비중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유형Ⅳ의 경우 자연적, 사회적 모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가족이 가장 큰 전출사유이며 직업과 주택은 비슷한 비중을 보임
 - 건수를 보면 직업이 16,252건으로 주택 16,226건보다 다소 높음

<그림 3-5> 전남 지자체유형별 전출사유 비중



- 유형Ⅱ는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이 가장 큰 전출사유
 - 인구증가지역이며 해당 유형 지역은 모두 시인 유형Ⅱ의 연령대별 전출사유를 보면, 9세 이하와 7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을 1순위 사유로 들고 있고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로 들고 있음
 - 10대의 경우 교육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직업이 4,322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6> 유형Ⅱ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1,820	16	166	4,332	2,899	2,412	1,807	165	23
가족	13,981	579	715	3,003	3,349	2,265	2,585	752	733
주택	15,295	40	124	1,648	3,734	3,987	4,321	919	522
교육	3,075	426	833	969	381	370	88	7	1
교통	991	8	30	213	219	198	213	49	61
건강	573	9	5	51	83	127	179	58	61
기타	3,681	77	100	615	889	885	804	177	134
합계	49,416	1,155	1,973	10,831	11,554	10,244	9,997	2,127	1,535

□ 유형Ⅲ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이 가장 큰 전출사유

- 인구증가지역이며 시와 군이 모두 존재하는 유형Ⅲ의 연령대별 전출사유를 보면, 9세 이하와 6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을 1순위 사유로 들고 있고 2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로 들고 있음
 - 10대의 경우 교육이 1,614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7> 유형Ⅲ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5,576	72	1,614	1,586	1,170	1,023	95	9	77
가족	7,065	364	1,337	1,608	1,137	1,349	466	557	2,022
주택	6,914	66	665	1,831	1,715	1,726	584	315	1,546
교육	1,041	249	232	175	178	45	3	4	9
교통	453	11	72	90	107	97	37	34	143
건강	212	2	10	28	37	76	26	30	161
기타	1,703	52	237	428	375	344	103	122	405
합계	22,964	816	4,167	5,746	4,719	4,660	1,314	1,071	4,363

- 유형Ⅳ는 4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이 가장 큰 전출사유
 - 인구감소지역이며 해당 유형 지역은 모두 군인 유형Ⅳ의 연령대별 전출사유를 보면, 9세 이하, 10대, 30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이 가장 많으며 4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로 들고 있음
 - 20대의 경우 직업이 5,520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8> 유형Ⅳ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6,252	18	274	5,520	3,800	3,150	3,128	282	80
가족	22,167	1,002	1,373	3,698	4,150	3,357	4,389	1,709	2,489
주택	16,226	59	149	1,756	3,066	3,360	4,966	1,742	1,128
교육	3,323	622	879	842	423	420	116	13	8
교통	1,283	12	49	212	200	203	282	144	181
건강	921	9	24	33	77	156	262	150	210
기타	4,399	107	155	705	725	828	1,035	340	504
합계	64,571	1,829	2,903	12,766	12,441	11,474	14,178	4,380	4,600

- 유형Ⅴ는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이 가장 큰 전출사유
 - 인구감소지역인 유형Ⅴ의 연령대별 전출사유를 보면, 9세 이하와 10대 및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이 1순위 전출사유였으며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로 들고 있음
 - 20대의 경우 직업이 5,965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9> 유형Ⅴ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7,657	22	313	5,965	4,514	3,595	2,871	306	71
가족	21,389	915	1,040	4,241	5,108	3,365	3,871	1,477	1,372
주택	24,094	61	176	2,580	5,644	5,729	6,656	2,143	1,105
교육	4,030	797	943	1,158	469	520	123	13	7
교통	1,438	21	61	315	303	259	282	107	90
건강	772	5	8	62	105	120	217	112	143
기타	4,713	136	148	835	1,078	995	940	324	257
합계	74,093	1,957	2,689	15,156	17,221	14,583	14,960	4,482	3,045

□ 지자체유형별 연령대별 상위3개 전출사유 비교

- 30대와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이 상위 3개 전출사유가 전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9세 이하의 경우 가족, 교육, 기타 순이며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가족, 주택, 기타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전 유형에서 직업이 1순위, 가족이 2순위, 주택이 3순위로 나타남
 -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의 상위 3개 전출사유는 전 유형에서 주택, 가족,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전 유형에서 주택, 가족, 기타로 나타남
- 30대와 40대의 경우 유형Ⅳ를 제외한 전 유형에서 상위 3순위 전출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남
 - 30대의 경우 주택, 가족, 직업 순이며 40대는 주택, 직업, 가족 순임
 - 유형Ⅳ의 경우 30대는 가족, 직업, 주택 순이고 40대는 주택, 가족, 직업 순임

4. 광주광역시 인근 7개 시군의 인구유출 원인분석

- 광주광역시 주변 6개 군 및 1개 시의 1순위 전출사유는 가족
 -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으로는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및 장성군의 인구유출 원인을 분석함
 - 9세 이하의 경우 화순군을 제외하고 전 시군에서 가족을, 10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든 시군이 가족을 1순위 전출사유로 들고 있음
 - 함평군과 장성군의 경우 20대, 30대, 40대의 1순위 전출사유가 직업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3-20>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별 연령대별 1순위 전출사유

시군	전연령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이상
전남	가족	가족	가족	직업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가족
시	주택	가족	교육	직업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가족
군	가족	가족	가족	직업	가족	주택	주택	주택	가족
나주시	가족	가족	가족	직업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가족
담양군	가족	가족	가족	직업	가족	가족	주택	주택	가족
곡성군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주택	주택	가족
화순군	가족	가족교육	가족	직업	가족	주택	주택	주택	가족
함평군	가족	가족	가족	직업	직업	직업	가족	가족/주택	가족
영광군	가족	가족	가족	직업	가족	가족	주택	가족/주택	가족
장성군	가족	가족	가족	직업	직업	직업	주택	주택	가족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연령대별 시군별 전출사유(2016년)

- 나주시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순
 - 9세 이하와 10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이 가장 많았음
 - 20대의 경우 직업이 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848건으로 2위를 차지함

<표 3-21> 나주시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3,223	3	41	892	942	664	610	65	6
가족	4,330	138	185	848	978	695	863	286	337
주택	4,244	4	32	407	1,127	1,075	1,070	357	172
교육	542	75	117	120	100	96	28	3	3
교통	285	3	5	45	56	61	61	30	24
건강	113	2	1	6	15	14	41	18	16
기타	1,068	26	28	142	282	247	200	67	76
합계	13,805	251	409	2,460	3,500	2,852	2,873	826	634

□ 담양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순

- 9세 이하, 10대, 30대, 40대 및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이 가장 큰 전출 사유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직업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304건으로 2위를 차지
 - 주택을 1순위로 한 연령층은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임

<표 3-22> 담양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082	1	14	350	242	204	236	31	4
가족	1,710	68	113	304	327	259	340	141	158
주택	1,284	1	14	137	221	248	414	154	95
교육	220	39	50	61	30	24	14	2	-
교통	111	1	4	25	13	20	21	16	11
건강	54	-	2	3	5	9	14	10	11
기타	273	-	10	60	61	44	52	23	23
합계	4,734	110	207	940	899	808	1,091	377	302

□ 곡성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순

-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족이 1순위 전출 사유로 나타남
 -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이 가장 큰 전출사유였음

<표 3-23> 곡성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679	2	13	232	131	132	156	10	3
가족	1,140	27	110	271	159	156	235	71	111
주택	715	1	5	93	124	129	241	83	39
교육	147	20	42	44	21	16	2	1	1
교통	65	-	5	9	9	10	14	9	9
건강	32	-	-	1	2	6	14	4	5
기타	183	1	13	26	32	36	46	16	13
합계	2,961	51	188	676	478	485	708	194	181

□ 화순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순

- 화순군은 전 연령에서 가족이 2,419건, 주택이 2,232건, 직업이 1,627건으로 상위 3개 전출사유로 나타남
 - 9세 이하의 경우 가족과 교육이 모두 80건으로 공동 1순위 전출사유였음
- 10대, 30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4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을 1순위 전출사유로 들고 있음
 - 20대의 경우 직업이 4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 396건, 주택이 164건으로 나타남

<표 3-24> 화순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627	3	30	498	354	370	318	41	13
가족	2,419	80	115	396	492	443	478	172	243
주택	2,232	5	8	164	412	554	666	266	157
교육	342	80	69	88	33	60	11	-	1
교통	209	1	11	46	35	34	48	18	16
건강	120	-	-	8	16	20	28	13	35
기타	368	5	14	66	66	77	80	32	28
합계	7,317	174	247	1,266	1,408	1,558	1,629	542	493

□ 함평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직업, 3순위 주택 순

○ 함평군은 2순위가 844건으로 직업이며 그 다음으로 주택이 758건

-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와 10대, 50세 이상 64세 이하,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이 가장 큰 전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경우 가족과 주택 모두 91건으로 나타남

-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직업이 가장 큰 전출 원인으로 나타남

<표 3-25> 함평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844	2	10	292	215	167	146	10	2
가족	1,152	57	78	185	205	148	246	91	142
주택	758	4	6	89	129	152	229	91	58
교육	179	30	51	39	25	25	8	-	1
교통	66	-	3	21	10	3	13	4	12
건강	59	-	1	2	6	4	20	10	16
기타	243	5	15	46	35	33	52	18	39
합계	3,301	98	164	674	625	532	714	224	270

□ 영광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순

- 영광군은 2순위가 1,496건으로 주택이며 직업이 1,457건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9세 이하, 10대, 30대, 40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이 가장 큰 전출 사유였으며 20대는 직업이 525건으로 가장 많았음
 -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이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가족과 주택 모두 159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3-26> 영광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457	1	24	525	360	270	255	13	9
가족	1,971	105	179	301	373	321	326	159	207
주택	1,496	9	13	161	330	316	416	159	92
교육	377	91	94	71	57	44	17	1	2
교통	126	2	4	20	20	14	23	14	29
건강	125	4	6	7	10	21	26	23	28
기타	382	6	15	68	83	70	80	21	39
합계	5,934	218	335	1,153	1,233	1,056	1,143	390	406

□ 장성군 전출사유는 1순위 가족, 2순위 직업 3순위 주택 순

- 장성군은 2순위가 직업으로 1,479건이며 주택이 1,173건으로 3순위로 나타남
 - 9세 이하, 10대, 75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이 가장 큰 전출사유이며 5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은 주택이 1순위로 나타남
 - 20대, 30대, 40대의 전출사유는 직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주택 순임

<표 3-27> 장성군 연령대별 전출사유

(단위: 건)

구분	전연령	~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74	75세~
직업	1,479	-	20	538	392	270	227	25	7
가족	1,628	66	78	262	300	260	345	131	186
주택	1,173	10	10	120	203	237	360	135	98
교육	205	37	53	57	19	28	9	2	-
교통	100	-	6	10	17	21	27	8	11
건강	52	-	1	2	5	6	18	6	14
기타	347	9	9	54	43	73	96	31	32
합계	4,984	122	177	1,043	979	895	1,082	338	348

제 4 장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제3절 일자리·소득 부문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제6절 교육·의료·문화 부문

KRILA

제 4 장

인구변화대응 국내 우수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1. 분석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 사회적 인구유출 등 전남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 발굴에 활용
- 국내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전남에 적용 가능한 인구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우수사례 선정기준

- 저출산 시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16~'17)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저출산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모사업 우수시책을 선정해오고 있음
 -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저출산정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저출산 대책 T/F를 설치하여 시책을 지원하고 있음
- 기타 사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간하는 우수사례('15~'17)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3. 분석방법

- 우수사례는 결혼·출산·양육·교육 부문, 일자리 및 소득부문, 인구유입(귀농·귀어·귀촌) 부문, 주거 및 정주여건 부문, 교육·의료·문화 부문의 5대 부문으로 구분
 -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실현사례도 각 부문별로 포함
-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등의 인구대응 및 지역발전시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우수시책 및 사업 조사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1. 경북 포항시 ‘하나에서 넷 되기’ 프로젝트

□ 추진배경

- 청년층의 비혼 및 만혼 증가 추세
 - 결혼 및 주거비용 부담, 청년층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감으로 청년층의 결혼 기피현상 발생
-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가사 및 육아 노동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출산 기피
 - 육아 및 사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심각

□ 추진내용

- 두근두근 미혼남녀 오작교 캠프
 -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단체 미팅, 요리 교실 등을 운영하여 만남의 장 제공
- 나만의 작은 결혼식 문화 조성
 - 포항시 거주하는 예비부부 2쌍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혹은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소규모 결혼식 진행
-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 아빠와 5~7세 자녀 1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힐링캠프 실시
 - 아빠들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 및 아이와의 소통 시간 제공
-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등 4개소에 카시트, 보행기, 유모차 등 24종의 육아용품 1,239개를 구비

- ‘아이사랑 대축제’ 개최
 -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대축제 개최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두근두근 미혼남녀 오작교 캠프, 성혼 21쌍
 - 2010년부터 총 24회 실시하여 1,394명(697쌍)이 참여했으며 240쌍의 커플이 맺어짐
 - 이 중 21쌍이 결혼에 성공
- 나만의 작은 결혼식 문화 조성,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실시
 - 나만의 작은 결혼식 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 6월 희망자 모집하여 3쌍이 지원했으며 10월 1일 및 14일 2쌍의 커플이 결혼식 실시
 -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는 연 2회 진행하여 약 180가족이 참석
- 육아용품 지원센터 상시운영, 2016년 6,500여점 대여
 - 2012년 10월에 여성문화관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남구보건소 등 3개소가 추가 개소
 - 총 회원 수는 5,774명, 대여실적 2016년 6,500여점

2. 대구 ‘더(more) 행복한 더(the) 미래세대’ 사업

임신·출산·육아 지원 절실

- 출산 코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 지원 추구
-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 시급

추진내용

- 「임신·출산·육아」가 즐거운 행복프로그램 운영
 -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순풍 임산부 요가교실’, ‘굿바이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임신부 산전·산후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는 1차 보건소에서 실시한 후 고위험군은 2차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검사 및 회복 실시
- ‘Happy Mom 만들기 출산준비 교실’, 모유수유교육 실시
- ‘멋진 남편 최고 아빠 되기’ 육아교실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가정 프로그램 연계
 - 대구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즐거운 임신·출산·육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임신부 배려문화 조성 지원 확대
 -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7년, 총 1,183명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요가교실, 우울증 예방교실, 우울증·스트레스 알기: 5기, 610명
 - 출산준비교실, 아빠육아교실: 4기, 271명
 - 모유수유 교육: 302명
- 조례 제정
 - 출산장려지원 조례(2017년 7월),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조례(2017년 9월) 제정
- 출산·양육은 함께할 때 고통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
 -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 및 확대

3. 경기 양평군 ‘민·관이 함께하는 가정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 추진배경

- 2016년 양평군 지방소멸도지수⁵⁾ 0.42로 향후 30년 이내 소멸될 지자체 76위
 - 2014년 노인인구 비중이 22.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 2016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농촌지역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로 여전히 자녀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절대적임
- 출산장려금, 보육료, 양육비 지급 등 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었음

□ 추진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치사업으로 4가지 이벤트성 프로그램과 3가지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
-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가족사랑 동요제를 통해 가족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환기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표 4-1> 양평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치사업 운영현황

사업명	운영횟수	운영방식(민간)
출산친화 가족사랑 동요제	6회	관내 어린이집, 각급 사회단체
아기사진 공모전	2회	양평 청년회의소
가족힐링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	3회	관내 체험마을
일·가정 양립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날 운영	1회	기관·단체 기부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기부	지속	기관·단체 기부
다자녀 우대카드(가맹업체 확대)	지속	관내 자영업자
가정친화 인식개선 교육	지속	전 군민

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산정한 지수로 출산가능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 출산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기사진 공모전을 진행함
 - 총 100여개의 작품을 양평시장 내 물맑은 쉼터에 전시해 당일 관람객 투표로 1등부터 3등까지 순위를 선정하여 시상
 - 공모전과 함께 다자녀상, 상품 추천, 가족화합놀이 등 이벤트도 진행하여 약 1,500명의 주민이 행사장을 방문함

<그림 4-1> 아기사진 공모전 개최 모습



사진: 양평군

- 아빠는 요리왕 프로그램은 양평군보건소가 주관하고 여물리체험마을이 주최했으며 이미 준비된 요리재료로 아빠가 직접 요리를 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
 - 품평회를 마친 후에는 체험마을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와 고구마캐기, 땅콩 캐기, 가족 그림 그리기, 가족 대상 전통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됨
-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 휴기를 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날을 운영
 -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날
 - 양평군 홈페이지에 리뷰(엄마가 사랑하기)를 통해 ‘이달의 슈퍼맨’ 시상
- 양평군 새마을회, 양평군약사회 등 기관과 양평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축하금 및 교육발전기금 등 출산장려 성금 기부 독려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을 확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는 외식, 음식점, 미용실, 문화·공연·박물관, 안경점, 병·의원 등 가맹점에서 각 업체 별 할인율에 따라 할인(10~20%)을 받을 수 있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저출산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통해 2016년 합계출산율이 증가
 - 감성을 터치하는 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형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
- 기존의 관 주도형 사업에서 벗어나 민과 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환
 - 각종 교육, 행사, 캠페인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효과적
 - 민관 협력을 통해 수평적 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와 같이 주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모든 사업에 응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갈 수 있음
 - 양평군 사회·문화가 유사한 자치단체에 전파 가능
 - 모범 사업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

4. 충남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사업

□ 추진배경

-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복지 증진, 여성 및 다문화 지원, 노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함
- 부여군은 5개 분야 32개 사업을 통해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 인구증가 등 지원조례 개정,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생아·노인 등 복지 및 다문화 토탈케어서비스 지원, 정주환경 조성, 귀농·귀촌인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

□ 추진내용

- 출산·육아·보육·일자리·주거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공간 구축
 - 총 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원스톱 복지행정 통합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가족행복센터 건립 추진
 - 가족행복센터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센터, 청년창업 지원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취업센터), 임신·출산관리 서비스 센터 등이 배치될 예정임
 - 다양한 센터뿐만 아니라 교육공간, 상담실, 장난감 도서관, 돌봄공간, 카페 및 쉼터 등을 설치하여 군민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또한 2017년 11월 29일 가족행복재단을 설립하여 가족행복센터에서 제공되는 출산·육아·보육 등 관련 서비스의 운영 통합 추진
 - 가족행복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역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가족 중심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통합화 추진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복지예산 증가와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에 맞추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문제를 분석하고 복지시책 개발 가능

5. 충남 홍성군 ‘당당한 직장 만들기’ 사업

□ 추진배경

- 홍성군의 인구 및 가구수는 2010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5년간 출생아 및 아동수도 2013년 말부터 매년 평균 5%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홍성군 인구수는 88,078명에서 2017년 6월 101,290명으로 증가
 - 2013년 말 출생아수 569명에서 2016년 말 682명으로 증가
- 2017년 7월 1일 홍성군 조직개편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속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과 추진을 전담하고 있음
- 특히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직장 문화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출산·육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직장 내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모

□ 추진내용

- 당당한 직장 만들기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으로는 ‘휴가 무조건 가기’, ‘유연근무제 적극 이용하기’, ‘정시 출퇴근에 눈치보지 않기(퇴근 시 인사하지 않기)’, ‘육아 휴직을 남·녀 반반씩 사용하기’ 등이 있음
-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 우수부서 시상을 진행
 - 1위 부서에게 150만원, 2위는 100만원, 3위는 50만원의 부상을 지급하여 활발한 참여를 도모

- 이와 함께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직원 교육, 아빠교육, 파더스쿨 등을 진행
 - 직원교육은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
 - 아빠교육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육아참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 파더스쿨은 아이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스킨십 놀이 등 아이와 아빠가 함께 놀이시간을 갖으면서 애착형성을 도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당당한 직장 만들기 사업의 중간조사 결과 2016년 1일 평균 휴가 사용률이 20.7%에서 2017년 25.3%로 4.6% 증가함
 -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직장 문화가 바뀐다면 육아를 위한 휴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한 원활한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더스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66%, 만족이 33%로 99%가 만족했으며 재참여 여부 조사 결과 ‘네’라고 응답한 비율이 99%로 성공적이었음
 -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돌보는 역할분담이 당연한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소통 방법을 잘 몰라 육아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 아빠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육아방법을 교육하여 아빠도 함께 육아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

제3절 일자리 · 소득 부문

1. 부산 남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 부산시 남구는 2017년 인구가 273,854명으로 전년대비 4,925명이 감소, 10년 전인 2008년 대비 21,657명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남구의 합계출산율은 0.987명으로 전년 1.048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2010년 1.067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2016년 부산 전체 합계출산율인 1.10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출산·육아·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이 어려워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일자리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추진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이며 교육대상은 부산시 거주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 주민임
 - 남구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며 취업 확정자를 우선으로 선발함
 - 2017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 8천만 원을 활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 교육특전으로 수료 후 산모 바우처 사업처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비를 무료로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함
-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아가마지 등 7개 기관과 협약(MOU)를 맺어 취업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 개설
 -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아가자미’에서 출장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로 채용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남구 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2017년 40명, 2018년 80명으로 총 120명에게 교육기회 제공
 -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게 양질의 산후 서비스 제공
-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통해 2016년까지 총 700명 교육 이수, 176명이 국립 부산과학관 등 7개 과학관에서 활동
 - 경력단절 이공계 학위 소지자에게 지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함

2. 전북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 추진배경

- 전북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도내 전체 가구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 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직장인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을 겪게 됨
- 전북연구원의 2016년 「일·가정 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전북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하루 42분인 반면 여성은 188분으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2분 늘었고 여성은 17분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임

-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남녀 간 근로시간 격차가 큰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그 격차가 13.5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주 수혜자인 여성, 정규직, 대기업뿐만 아니라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으로 수혜자를 확대해야하며 유연근로제와 정시퇴근 준수 등 근로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2017년부터 완주군의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까지 연계해 저출산 극복 통합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 상담공간과 전문 인력을 갖춰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과 창업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6년 5월에 개관한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인근에 건물 1동(49평)을 공동육아 나눔터로 리모델링하여 육아정보 교류의 장소로 운영 중이며 향후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신축 계획
- 2015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속 운영
 -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2016년에는 7개의 여성친화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취업 여성 지원 서비스 실시
 - 산업체 맞춤형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및 구인구직 채용 연계지원 사업 진행
 -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과정과 같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필요한 과정을 개설했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성격검사, 직업정보제공, 자소서·이력서 코치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공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는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기업문화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여성 및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협약을 맺은 여성친화기업에서 2017년 약 20명 채용

3. 대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벨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도시인 대전이지만 시의 외곽에는 비옥한 평지가 있어 농업이 공존
 - 첨단과학기술과 농업이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지역민간의 소통 부제로 공동체 활성화가 어려움
 - 소득, 학력 및 문화 격차 존재
- 농산물 생산자는 판로 발굴이 어려운 한편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 먹거리 권리에 대한 요구 향상

□ 추진내용

- 로컬푸드 인증제 ‘바른유성찬’ 도입
 - 유성구와 사회적 협동조합인 품앗이마을은 2015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바른유성찬’은 유성구가 인증한 안전한 로컬푸드로 품앗이마을이 각 생산자들과 함께 계획생산 및 품질관리 담당
-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 2015년부터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먹거리 교육과 취업·창업 교육 실시
- 지역 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교육 실시
-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먹거리’ 교육 실시 차원으로 농촌체험여행, 어린이 텃밭학교, 찾아가는 로컬푸드장터 등 운영

사업효과 및 시사점

- 4개 로컬푸드 매장, 52명 고용, 누적매출 113억 원
- 유성구 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중간에 퇴출되는 농가가 있었지만 인증제도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 도모
 - 현재 120개 농가가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성구 이외 타 자치구 농가에서도 참여 희망
 - 유성구 내 먹거리 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여 사업실시 이후 작목의 다양성 확대
- 가공식품 개발 교육을 통해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 매장 운영,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정착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
- 민간영역의 아이디어와 관의 행정능력의 시너지 효과
 - 민간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차원에서 조례 제정, 생활권별 사업관리, 인증제도 실시 등 민간영역 지원

4. 전북 임실군 ‘임도 공간 연계활용’ 사업

추진배경

-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수암마을은 섬진강 댐으로 인해 육상통로가 물에 잠겨 배를 타고 통행해야 해 생활에 큰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음

- 2014년에야 강진면 수방마을로부터 운암면 수암마을 간 1.4km의 도로가 개설
- 임도(林道)는 임업 경영과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어 개설한 길로 산불이나 조난 사고 등 위급시 빠른 이동을 목적으로 함
- 전라북도는 임도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지역 관광자원 창출을 도모
- 기존 임도를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개발 및 주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임도설치 5개년(2016~2020) 계획 기획

□ 추진내용

-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옥정호 주변 섬진강 다슬기 축제, 임도 걷기 체험 사업 등 실시
- 물이 맑은 섬진강 상류 지역에 풍부한 다슬기를 잡고 민물고기도 잡아보는 자연체험 행사 개최
-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 임실을 포함, 5개 지역의 임도를 정비하여 하나의 노선을 완료 예정
- 고립되어 있는 각 시군을 지리적, 사업적으로 연계하고 교류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53년간 고립되어 있던 마을에 임도 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킴
-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 유도하며 이웃 시도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 모색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1. 경남 거창군 ‘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 유서 깊은 마을이 많은 거창군이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 노령화, 주민 공동체 의식 약화로 마을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100여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
 - 그러나 행정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 주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효과가 미미했음
- 민·관 전문가와 행정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주민의 역할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 마을사업 통합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을 5대 핵심 사업으로 재분류 하고 총괄 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과 신설
- 5대 마을만들기 핵심 사업에는 로컬푸드, 귀농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 문화복지공동체가 있음

□ 추진내용

- ‘거창한 마을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리더 육성
 - 역량강화 리더교육, 마을공동체 창업교육, 마을운영자 교육, 지역 CEO 교육 등 4단계 프로그램 진행
- ‘거창한 마을박람회’ 매년 개최하여 마을사업 참여 유도
 - 각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사업성과 홍보, 토론 및 발표대회 진행을 통해 마을 간 정보 공유 도모

- ‘거창한 마을이야기’ 소식지, 마을만들기 안내 팸플릿, 마을만들기 사례집 등 발행
 - 홍보 책자를 통해 마을사업을 접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 잡지’를 창간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거창한 마을대학 2015년까지 총 162명 수료
 - 지금까지 거창한 마을대학을 수료한 75개 마을 중 90%(68개 마을)가 연계 사업 추진
- 2007년 이후 거창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4,330명
 - 거창군의 청년 취농 유입인구가 증가할 전망
 - 거창에서 농사짓는 청년, 지역 언론협동조합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청년, 귀향한 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거창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이 2012년 25,500명에서 2015년 33,993명으로 꾸준히 증가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지자체의 방문도 증가

2. 제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제주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
 - 제주 귀농귀촌 인구는 2014년 8,361명에서 2015년 11,00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 및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 사업 진행

□ 추진내용

- 기존 진행하고 있는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향 설정,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운영
 -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

<표 4-2> 제주시 단계별 교육내용

구분	주요내용	주관기관
1단계	- 기초 포괄 교육 (제주의 생활문화, 역사, 작목현황, 소득창출 방안) - 부동산, 세무, 법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원
2단계	- 작목 기초 교육 및 실습 및 현장 위주의 체험교육 - 각 기술센터별 특성화 작목에 따라 선택 가능 - 귀농이 아닌 귀촌만을 바라는 1단계 수료자의 경우 별도의 정착지원사업 진행(목공, 천연염색, 바리스타 등)	농업기술센터
3단계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매칭 프로그램	품목별 농인 연구회

- 제주농업기술원 하 4개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 센터별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가능
 -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도시근교농업을,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과수, 아열대농업을,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원예작물에 특화되어 있음
-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직장인들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야간 귀농교육 개설
 - 1단계 교육에 한해 30시간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제주살기’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
- ‘귀농귀촌 종합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시행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단계별 교육과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선도농가와의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정착 성공률
 - 특히 선도농가와의 매칭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2011년도 대비 교육이수자 2013년 113% 증가
 -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에서 ‘영농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95%, 교육지속 희망자가 97%로 나타남
-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에도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

3. 경북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추진배경

- 은퇴 후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의 생활양식이 다르고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귀농·귀촌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정보부족과 경험부족으로 귀농·귀촌이 어렵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One-Stop 지원 센터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교육 제공
 - 이를 통해 대도시의 예비 귀농인 유치 및 전입 유도

추진내용

- 전국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조성
 - 위치 : 영주시 창진로 299-31(아지동)
 - 사업비 : 80억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28억원)

- 건립기간 : 2015. 1. 5 ~ 2016. 4. 30
- 사업부지 : 29,900m²
- 주요시설에는 귀농희망자가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교육관(사무실, 세미나실 등), 텃밭 30개, 실습농장, 비닐하우스3동, 퇴비장, 농자재 보관소, 농기계 등 구비
- 원룸형(27m²) 18세대, 가족형(56m²) 12세대, 총 30세대
- 단기숙소 : 20명(5개소×1실/4명)/ 5,000원(1일 기준)
- 귀농인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및 이론과 실습(현장)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백산 귀농드림대학’ 운영
- 연간 30가구(가구원수 45명)가 입주할 수 있으며 총 10개월 과정 진행
- 또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귀농인 유치
- 대기업, 금융기관, 관공서 퇴직예정자 유치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 수도권중심 중앙부처, 기업체, 향우회,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귀농 프로그램 제공
- 총 10회,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당일과정,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 등 일정에 맞춘 교육과정 진행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술을 교육하여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귀농인 증가

<표 4-3> 연도별 영주시 귀농인 증가

(단위: 가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농가수	279	350	359	689
가구수	485	581	604	1,158

4. 충남 홍성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홍동면은 1950년대 전국 최초 대안학교 풀무학교 설립 및 풀무생협, 풀무신협 등을 조직하면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작
- 또한 1990년대 오리농법을 전국최초로 도입한 유기농업 마을로 잘 알려짐
 - 친환경농산물 소비 등 ‘교육’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입
- 문당리 발전 100년계획(’00)을 수립하며 주민주도형 장기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리’ 단위를 넘어 ‘면’ 단위의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고민

□ 추진내용

- 지역의 인적자원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민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율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필요한 행정사업을 신청하고 활용
 - 우리동네의원, 생각실천창작소, 동네술집 뜰 등
 -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 운영이나 재단사업 공모 등 사회적자본을 적극 활용
 -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문화, 교육 서비스를 스스로 확충하여 유입인구 지속 증가
- 행정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진행
 -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친환경농업지구(’02~), 한우클러스터사업
 - 정주기반 및 소득시설 조성: 문당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3~’08), 전원마을 조성, 보행환경개선사업, 유기농업가공지원(’16)
 - 농촌관광: 정보화마을(’02), 녹색농촌체험마을(’03~)
 - 사회적농업지원: 교육농장, 돌봄농장, 청년귀농교육농장 지원 등
 - 중간조직지원: 마을활력소(’10 마을기업),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특히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년활동가 지원,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 생생아이디어 공모,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
 - 홍성군 내 귀농·귀촌인들로 이루어진 5인 이상 학습동아리나 단체를 대상으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견학비 등 50만원 한도 내 지원(8개 단체)
 - 귀농·귀촌인들의 동아리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에 120만원 한도 내 지원(비용 중 10%이내에서 다과 및 식비 계상 가능, 5개 단체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홍성군내 타 읍면 대비 청년농업인(20~39세)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적음
-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을 통해 원활한 귀농·귀촌을 돕고 새로운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의식 형성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며 홍성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음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1. 경기 행복주택 ‘BABY2+ 따복하우스’

□ 추진배경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총인구, 노인 인구, 다문화 인구 등이 최다이며 대도시와 경기도간 전입·전출이 활발함
 - 지역별로는 출산율과 노인인구 수 등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군별 특성화 정책이 필요함
- 도농 복합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역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함
-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저출산 정책을 실시했지만 저출산의 실질적인 원인에 근거한 대응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
 - 현재 20·30대는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 출산장려책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저출산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 지역내 총생산,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자리와 주거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동육아와 같이 육아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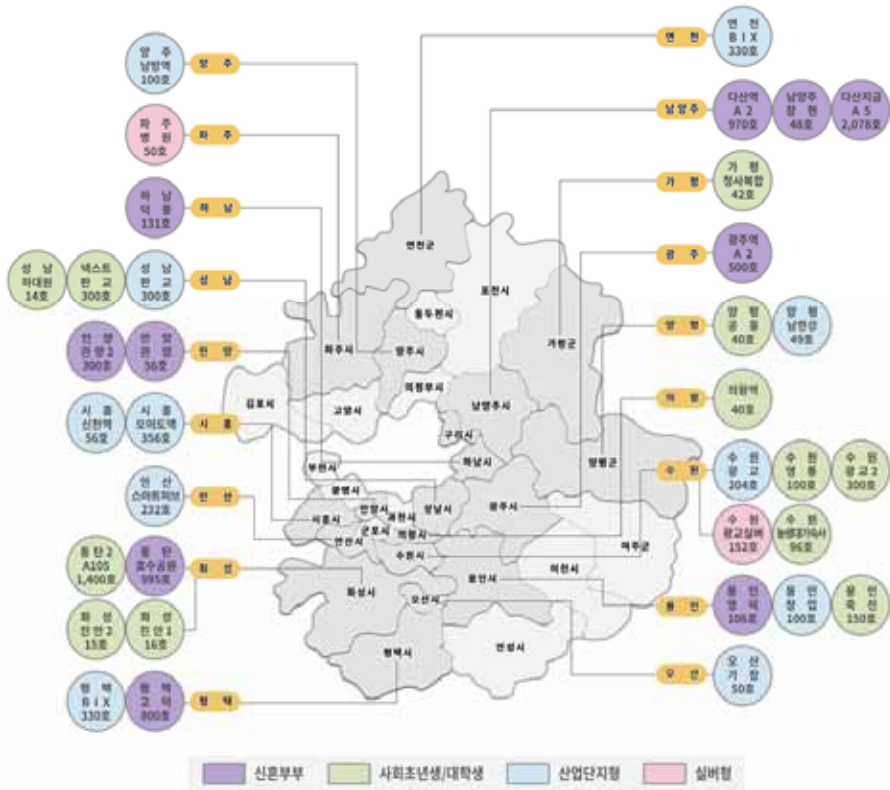
- 경기도 행복주택인 ‘BABY2+ 따복하우스’는 임대료지원과 신혼가구 전용 공간 확대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 도모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 따복하우스 외 다양한 지역 편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

- 행복주택과 동일한 사업추진 방식과 입주자 모집 기준 활용
- 현재 경기도 내 18개 시·군, 35개 사업지구에서 총 10,605호 공급 예정

<그림 4-2> 경기도 따복하우스 추진 지구

따복하우스 추진 지구

- 경기도내 18개 시·군, 35개 사업지구, 10,605호



○ 지역별로 인구 특성에 맞춘 설계 제공

- 예를 들어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의 경우 신혼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과 공동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을 위한 업무 공간, 피트니스센터, 공유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 계획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5천호를 포함,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만호를 2020년까지 공급할 예정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경기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전북 완주군 ‘500원 으뜸택시’ 운영

□ 추진배경

-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지역 주민들은 읍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차나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야함
 - 인근 버스정류장까지도 1km를 걸어 나와야 해서 대중교통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특히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임산부와 고령인구는 콜택시를 이용해 읍내까지 나오려면 왕복 교통비 1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함
-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군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 추진내용

- 2014년 11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500원 으뜸택시’는 현재 9개 읍·면, 45개 마을에서 운영 중
 - 시내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500m 이상인 산간, 오지, 벽지 마을과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
 - 택시를 타는 주민이 1인당 500원을 내면 추가비용은 완주군이 매월 택시 운송 업체에게 일괄 정산

-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에 나와 일을 마친 후 함께 귀가하는 방식으로 운행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행복콜 버스’ 운행

- 지역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동상면, 이서면 등 48개 마을에서 운행 중으로 하루 20명이 이용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희망콜’ 운영

- 외부활동이 어려운 1~3급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으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
-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약자의 교통편의 증진
- 2015년 4,168건에서 2017년 9,023건으로 이용건수가 2배 이상 증가

○ 통학택시, 안심 택시 등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 201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500원에 택시 운영
- 2015년부터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누적이용객 950명, 2018년 1학기 관내 11개 중·고등학교에서 130명이 이용 중
- ‘완주 안심택시 앱’을 개발하여 승객이 택시에 탑승할 때 탑승한 차량번호 및 승·하차 시간을 미리 지정한 가족과 친구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5년~2016년 500원 으뜸택시의 총 이용건수는 5만 3천 347건으로 월평균 약 2천명이 이용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며 택시업계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 주민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

3. 충북 청주시 소나무길 상가활성화 사업

□ 추진배경

- 1990년대부터 청주 중앙동 외곽지역이 발달하고 고속터미널 등 주요시설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중앙동의 상권경쟁력 하락
 - 거주인구 및 활동인구 감소로 쇠퇴
- 2000년대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힘
 - 2004년 중앙로 일부에 소나무길을 조성했으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으나 가게운영과 주차문제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2014년부터 주민위원회, 청주시, 충북대가 협력하여 중앙동의 정체성을 문화·예술 1번지로 고착시키기 위해 노력
 -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마련

□ 추진내용

- 소나무길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 소나무길은 친환경 거리 조성을 위해 30m 높이의 소나무 15그루를 심었지만 환경이 맞지 않아 한 그루를 제외하고 모두 고사한 자리에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심고 물길을 내어 녹색환경 조성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명, 벤치, 길거리 화단을 조성하여 골목환경을 개선한 사례
 - 2016년부터 소나무길에서 청년 창업자들과의 연계로 프리마켓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7시 버스킹공연 ‘청춘버스킹’ 실시
- 건물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은 중앙시장 2층 상가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길 아트페이’ 프로그램 시행

- 빈 점포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건물주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개최함
- 건물 수리, 미술 전문가 초청, 운영위원회 구성 등 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 초기 실패에 가까웠던 차 없는 거리는 소나무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 소나무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끌린 유동인구가 오히려 차 없는 거리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가게의 매출 향상에 기여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 입주
 - 기존 버려져있던 건물에 화실, 문화공간, 커피숍 등이 입주
 - 2016년 소나무길 프리마켓 판매 참가자 1,353명
 - 청춘버스킹, 2016년 총 17회 공연, 약 2천여 명이 관람했으며 이를 통해 유발된 유동인구는 연간 약 3만 6천명으로 추정
 - 2014년 빈점포 215개에서 216년 124개로 91개 감소, 빈 주택도 5개에서 0개로 감소
-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운영
 - 건물 무상임대, 사비 부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 주민-시청-대학의 균형 잡힌 연계
-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중앙동 청년 유동인구 증가

4. 강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육아비용·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 추진내용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주거비용 지급
 - 총예산은 3천 4백만원이며 3,060명에게 혜택 제공
 - 지원자격은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신청년도 기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임
 - ※ 단, 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원 ~ 12만원 차등 지원
 - (추가지원) 아내 타시도 전입 시 월 2만원 추가 지원
 - (제외/중지) 국제결혼·주거수급자 [제외]
부부 타시도 전출 또는 이혼 [중지]

<표 4-4>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기준율	기준중위 소득	지원금액
100%이하	~2,814	120
100%초과 150%이하	2,815~4,222	80
150%초과 200%이하	5,223~5,628	50

- 최초수급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함
 - 현금급여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자(아내) 계좌에 입금 가능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수급권자·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 가능함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7년 강릉시 158쌍에게 1억 8천 648만원 지급
-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신혼기간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문제 및 저출산 극복의 극대화와 효과성을 전개하여 사회분위기 전환에 기여

5. 경북 김천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생산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속적 인구감소 초래
-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회복운동 추진
- 특히 90년대 이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필요

추진내용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구도심의 위상회복을 위해 재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2013년 9월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 내 우선 활성화지역 3개 지구와 예비활성화지역 8개 지구 지정
 - LH 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16년 12월 자산동에 있던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김천대 창업보육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함

- 현재 평화동 근린재생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 자산동 새뜰마을사업, 황금동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 우선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 시행
 - 평화동은 구 김천시 청사, 법원, 검찰청사 등 공공기관이 밀집하고 교통과 물류, 행정, 상업의 중심지이며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90년대 이후 주요 관공서가 외곽으로 이전되면서 쇠퇴
 - 평화동 근린재생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김천역 앞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지역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 특화가로 조성, 평화시장 활성화 등 사업 추진
 - 자산동 새뜰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 추진하며 무허가 주택이 많고 국공유지가 많이 정비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소방도로 개설, 위험 축대 정비 공사, 골목길 정비,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강
 -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차량통행이 잦고 황금시장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황금시장 특화가로 조성, 주거지역 보행환경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등 환경개선 실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유동인구와 정주민구를 늘리고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음

제6절 교육 · 의료 · 문화 부문

1. 강원 양구군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 뮤직케어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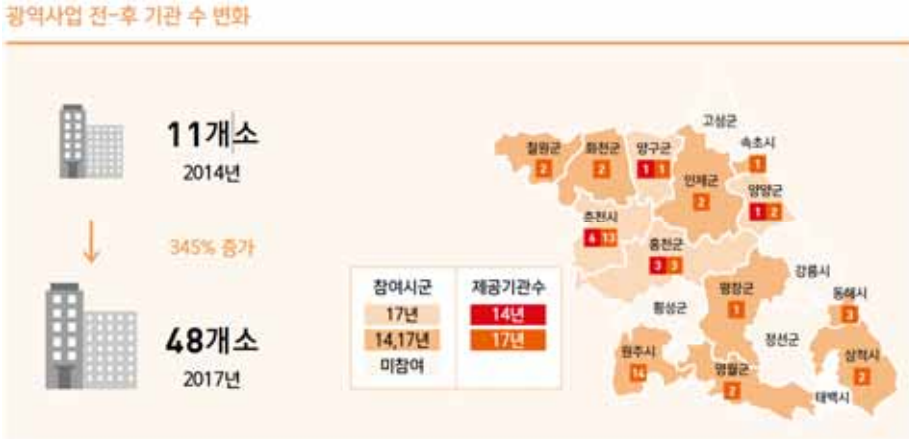
□ 추진배경

- 14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 감소 지속, 2010년 이후 20~29세 청년인구가 총 2만 1천명 이상 유출
 - 청년 실업률 2배 이상 증가, 2015년 전국 청년실업률 1위
-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이 타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자아존중감이 전국 대비 약 7% 낮음
- 사회복지부문 세출은 많으나 도민의 행복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도 향상과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 추진내용

- 2013년 김성준 대표가 제안한 ‘잠재력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사업으로 시작
 - 강원도 출신 음악 전문가 김성준 대표가 2010년부터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
 - 누구나 음악을 하고 악기를 배워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 2013년 시범운영사업으로 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4개 지역으로 확대, 2017년 13개 지역, 2,290명이 참여하는 광역사업으로 성장
- 2017년 6월, 뮤직케어링 제공기관 48개로 확대
 -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단을 통해 철저한 등록절차와 교육을 이수해야 함

<그림 4-3> 강원도 아동 뮤직케어링 서비스 현황



출처: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발전위원회, 2017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p.91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시·군 사업에서 시작하여 시·도 사업으로 광역화 한 사례
 - 양구군 산촌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의 불평등 해소에서 강원도 전체로 확산
- 중간조직인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원활한 사업진행 역량
-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춰 사업지침을 조정하여 적용
 - 복지부 표준안을 강원도 현실에 맞춰 조정
- 도내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015년 151명에서 2016년 246명 고용으로 95명(62.9%) 증가
- 문화예술교육의 불평등 해소 및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에 큰 효과
 - 2016년 이용자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결과 아이들의 자존감은 10%, 불안도는 15% 개선

2. 부산 사상구 아동전문 보건지소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

□ 추진배경

- 부산시 사상구는 2017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총 인구수는 229,219명으로 2008년 260,897명에 비해 대비 약 3만 명이 감소했음
 - 지난 10년 동안 사상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만 7세 이하의 영유아 인구도 2008년 16,471명에서 2017년 12,837명으로 3,634명이 감소했으며 사상구 전체 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도 2008년 6.3%에서 2017년 5.6%로 감소하였음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와 엄마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 도입

□ 추진내용

-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된 행안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
 - 시·구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내년 복합 주민센터로 이전이 예정된 현 모라1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전문 보건지소로 조성
 - 건강검진, 예방접종, 육아상담 등 제공하며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실 등 아동 성장단계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 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 아이♡맘 원스톱 센터는 맞춤형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을 운영하고 각종 보육상담 및 정보공유 공간 제공
 - 구 보건소 내에서 임신·출산·보육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혼인·출생신고와 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연계

- 혼인신고 시 ‘혼인-산전-산후 서비스’ 연계로 결혼 적령기 건강검진, 산전·산후 임신부 관리,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
- 출생신고 시는 ‘출산-보육 서비스’를 연계하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 시기별 예방법종 안내, 다자녀 혜택 정보 등을 지원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영유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여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 가능
- 임신부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

3. 충남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조성사업

추진배경

- 충남 서천군의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총인구는 55,175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60,507명에 비해 약 5천명이 감소
 - 서천군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600명씩 감소하였음
-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5,288명(25.3%)에서 2017년 17,931명으로 약 2천 6백명이 증가함
 - 200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5년 30.7%로 30%를 넘어섰고 2017년은 32.5%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반면 영유아 인구인 7세 이하 인구수는 2008년 3,144명에서 2017년 2,202명으로 약 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총인구 대비 2008년 5.2%에서 2017년 4.0%로 감소하였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유아인구 감소는 군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군 자체의 존폐 위협요소임

-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인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추진내용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를 연계한 저출산 극복 통합 서비스 제공
 - 노인 일자리지원 및 건강관리, 어린이 보육·육아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여가 및 교육 공간 제공
 - 지역순환경제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간적으로 통합
 - 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키즈 카페 등 설치
 -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과 실버카페 설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취업센터) 입주
 - 돌봄공간, 상담실, 교육공간, 쉼터 등 설치
- 2017년 행안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억 5천만원과 2018년 충남도 예산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가족누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서천역사 부지 내 3,144㎡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예정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용객이 활발하게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삼대(三代)가 공존하는 공간 구축
- 아이를 키우기 좋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천으로 만들어 삼대가 공존하는 상생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4. 전북 순창군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전북 순창군의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총인구수는 29,698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30,920명에 비해 약 1,200명이 감소함
 - 특히 7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는 2008년 1,931명에서 2017년 1,530명으로 약 400명이 감소했으며 총인구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도 2008년 6.2%에서 2017년 5.2%로 감소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08년 8,473명에서 2017년 9,286명으로 약 800명이 증가했으며 전체인구대비 비율도 2017년 31.3%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2.017명으로 전국 1.172명이나 전북 1.251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07년 순창군 1.703명, 전북 1.371명, 전국 1.250명으로 전국이나 전북은 10년 전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순창군은 오히려 증가함
-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농촌의 특성상 출산과 육아 관련 시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과 이용률이 낮음
 - 향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절실함

□ 추진내용

-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신(Pregnancy), 출산(Childbirth), 양육(Nurture)을 위한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 임신-육아-교육-일자리를 연결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 창출
- 구(舊)보건의료원 (3층)을 리모델링하여 산모쉼터, 키즈카페, 아이돌봄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청소년 가상직업체험관 등을 설치

- 산모쉼터에서는 산모요가와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병행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입주하여 민관이 함께 출산율 향상을 위한 노력 도모
- 아이돌봄방을 설치하여 시간제 보육 진행
-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동안 부모는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상담 진행
- 농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지원센터 입주
-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직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직업체험관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출산·양육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임신-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층과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5.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배경

- 성주군 벽진면은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참외 재배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 소재지 인구 1,050명이며 가구수는 300가구임
- 병원, 약국 등 기본적인 의료·건강시설, 목욕탕,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열악한 정주여건이었음
 - 이와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들은 성주읍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느낌

-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했고 2011년 사업이 선정되어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수립
 -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 동안 벽진면 수촌리 일원에서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
 - 총 95억 원(국비 65억 5천만, 지방비 2억 8,500만)을 투입하여 4개 분야, 총 6개 사업 진행

□ 추진내용

- 벽진면 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도 주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운영에 참여
 - 주민 숙원사업인 문화센터 내 목욕탕 건립 건의
 - 운영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불허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례분석, 유지관리비 타산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민 설득
 - 주민 스스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로 하고 공공목욕탕 대신 샤워장과 사우나 시설 설치로 사업계획 변경
 - 벽진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소득사업이 없어 주민회 원제를 시행하여 회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그림 4-4> 벽진면 문화센터 전경 및 이용사례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6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p.261, 270

- 문화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 명절마다 노인을 대상으로 샤워시설 무료 개방
 -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운영
 - 바둑, 요가, 캘리그래피, 탁구, 한지공예 등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별도의 소득창출 없이 주민 스스로 문화와 건강복지사업 진행
 - 주민들이 문화센터 신축 계획에서부터 건축 후 유지관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
 -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 사업진행 시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와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
 - 공공목욕탕 설치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포럼(아이스 브레이킹, 벽진면 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마을지도 그리기 등) 실시

6. 경기 수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반 청년창직’ 사업

추진배경

- 경기도내 문화예술 관련 55개 대학의 386개 학과, 35,000여명의 재학생의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
 -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이 힘들고 관련 직종에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힘든 문화예술 청년들이 마음 놓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난 13년 동안 방치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활용 (총 268,487㎡, 81,350평)

□ 추진내용

-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 2016년 6월부터 경기도내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생업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 등 운영
 -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종사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 경기상상캠퍼스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기생활문화센터, 어린이 책 놀이터, 문화허브 카페, 생활예술공방 등 캠퍼스 내 다양한 시설 안내 및 시민참여 유도
 - 새로운 문화예술 작업을 실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창의랩 오픈스튜디오’ 운영
- 다양한 이벤트 개최
 - 플랫폼형 청년문화 축제 ‘청춘불판’은 스트릿컬처, 출판 등을 주제로 각 단체들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선보이며 경기청년문화창작소의 활동 홍보 및 참여 유도
 - 숲 속 장터 ‘포레포레(forêt forêt)’는 캠퍼스 내의 숲 속에서 입주 단체들의 창작 상품과 지역 주민의 생활 소품 판매
 - 지역장인, 지역판매자, 청년입주단체, 생활공방 등이 참여하여 모든 세대가 교류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그림 4-5> 숲속장터 포레포레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7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p.79

○ 청년창직 지원 프로그램 ‘광/합성 프로젝트’

- 광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직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문화예술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총 38개 팀 지원, 최종 7팀 선정
- 합성 프로그램은 예술청년의 모임 지원

○ ‘그루버 멤버십’ 운영

- 경기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가 캠퍼스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교류하며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 대학, 예술경영지원센터, 영국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체계 형성

○ 우수 청년문화공간 형성으로 타 기관의 롤모델 마련

○ 청년플랫폼 축제 개최 및 다양한 인큐베이팅 성과 도출

- 판매·체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총 116개 팀 지원, 1,500명 관람객 유치

○ 다양한 문화예술 청년인재발굴 및 육성에 기여

- 지속적으로 경기권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를 기획·발굴, 입주 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 유관기관, 입주단체, 창작소 간 교류협력 관계 형성

제 5 장

인구변화대응 국외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제3절 일자리·소득 부문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제6절 교육·의료·문화 부문

KRILA

제 5 장

인구변화대응 국외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1. 분석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 사회적 인구유출 등 전남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 발굴
- 국외사례를 활용하여 전남에 적용가능한 인구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사례선정기준

- 전문가, 공무원, 언론 등이 지적하는 인구변화 대응의 모범적인 국외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3. 분석방법

- 국외사례는 국내사례와 마찬가지로 결혼·출산·양육·교육 부문, 일자리 및 소득부문, 인구유입(귀농·귀어·귀촌) 부문, 주거 및 정주여건 부문, 교육·의료·문화 부문의 5대 부문으로 구분
-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등의 인구대응 및 지역발전시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우수시책 및 사업 조사

제2절 결혼·출산·양육 부문

1. 일본 후쿠이현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

□ 추진배경

- 2014년 후쿠이현이 실시한 「결혼·육아에 관한 요구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3명으로 실제로 키우고 싶은 자녀수, 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육아비용이 많이 든다는 대답이 70% 이상을 차지
- 2010년 추진한 일본 국세조사에서는 후쿠이현의 경우 여성 취업률과 맞벌이 세대비율이 각각 50.9%와 56.8%로 일본에서 가장 높았음
 - 일-육아 양립을 비롯한 육아환경 및 육아지원사업 필요
- 2013년 후쿠이현 근로자 취업환경 기초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1.7%에 불과했음
 - 후쿠이현은 남성도 육아를 분담하거나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등 온가족이 다함께 육아를 돕는 환경만들기 추진 필요

□ 추진내용

- 신 후쿠이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
 -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 2016년부터 셋째 이후의 아이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보육소의 보육료(유치원 포함)와 일시 보육 및 병아보육 이용료 무료화 추진
- 0세 육아휴직 응원기업 장려금 사업
 -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기업에게 장려금(20만엔) 지급(과거 3년 이내 해당자가 없었을 경우)

○ 후쿠이의 아이 응원금 지급

- 단시간 근무(첫 아이가 3살 되기까지)를 하면서 다음 아이를 출산, 아이가 1살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풀타임 근무시의 육아휴직비와의 차액 지급

○ 부친·조부모의 육아휴직 등 촉진 장려금 제도 도입

- 직원(부친과 조부모)이 육아를 위한 휴가를 10일 이상 취득할 경우 기업에게 장려금 10만엔 지급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각종 장려금을 이용해서 아이가 1살이 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으로 가정에서 육아를, 1~2살에는 단시간 근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육아 양립을 지원함

- Life Stage마다 육아세대가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 2006년부터 시작된 후쿠이의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선도하고 있음

- 2005년 1.50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60까지 증가하였고, 2005년 15.4%이었던 셋째 출생률은 2013년 18.0%까지 증가

2. 일본 이시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 사업□ 추진배경⁶⁾

○ 지역내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자체 시책 필요성 증대

- 이시카와현에서는 소자녀화가 계속되어 육아나 아이의 성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2005년(헤세이 17년) 3월에 차세대육성지원대

6) 이삼식(2007)을 바탕으로 정리

책추진법에 의거하여 “이시카와 엔젤플랜 2005(Ishikawa Angel Plan 2005)”를 제정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시책들을 전개

□ 추진내용

○ Premium Passport 사업

- 「육아 친화적 기업추진협의회(Premium Passport Enterprise)」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Premium Passport 사업을 2006년 1월부터 추진
- 동 협의회는 이시카와 아동양육지원재단(Ishikawa Foundation for Supporting Child-rearing)에 의해 운영
- 셋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는 패스पोर्ट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패스포트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년 신청
-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와 상점들은 패스포트 소지자에게 특별할인(예를 들어 10%)과 서비스를 제공
- 회사는 연간 5,000엔을 납부하고 참가 표시로 심벌 마크를 받음
- 서비스는 기업부담이며 이시카와현 측은 패스포트 발행과 가맹점 모집 등을 담당
- 이시카와 아동양육지원재단에서는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그림책 작성, 스타트 기념 이벤트 개최, 육아지원 메시지 참가 사업 등을 추진

○ 주간육아센터 프로그램(My Daycare Center Program)

- 주간육아센터는 고마수시(Komatsu-shi), 나나오시(Nanaoshi), 히쿠이시(Hakui-shi), 와지마시(Wajima-shi), 하쿠산시(Hakusanshi), 슈바타시(Tsubata-machi), 나카노토시(Nakanoto-machi)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 임신한 여성은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영아양육방법을 교육받음
- 출산 후 산모는 상담서비스와 3회의 무료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긴급 육아지원 네트워크(Emergency Support Network)

-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초과근무나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 등록된 구성원이 대신해서 유아를 돌보기 위한 육아지원체계
- 후생노동성은 긴급지원센터(coordinator)에게 연간 천만 엔(₩)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부부나 취업 중인 한부모
-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현 내 9개 센터 중 한 곳에 연락하면 조정관은 아동을 돌볼 사람을 지정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
 -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한 출산 및 자녀양육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정책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
- 이시카와현의 저출산 대책은 특히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특성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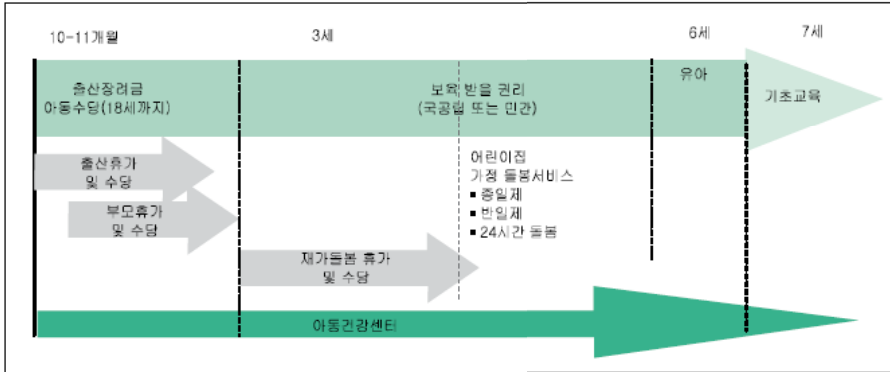
3. 핀란드 보육·교육정책

□ 추진배경

-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특성을 지니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주요 목표로 삼아 오고 있음
- 특히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특성은 영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낮은 특성과 연결되는데, 따라서 육아휴직, 가정양육수당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부모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발달

- 영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영아기 가정 양육지원 정책 기반이 강하다는 특징

<그림 5-1> 핀란드의 육아지원제도



자료: 권미경(2017), 유럽국가의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p.9

□ 추진내용

-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94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 월 100유로이며, 자녀수가 많아지면 증가하나, 부모 소득을 반영한 차등은 두지는 않음
- 6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 권리 보장
 - 핀란드는 6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 당 최고 월 283유로(헬싱키시 기준)까지 보육비용을 부모 소득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
- 재가돌봄 휴직 및 가정양육수당(home careleave & allowance)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가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막내 자녀가 3세 가 될 때까지 이용 가능한 제도로 지자체별로 차이 있으나,

아동 당 월 606유로~790유로(헬싱키 기준)를 지원

- 핀란드는 1985년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공보육 시설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사 이용 시에도 지원됨

○ 영유아 돌봄지원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지원으로 다음의 3가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립 뻘아바꼬띠 또는 공립 가정보육사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뻘아바꼬띠 또는 민간 가정보육사
 -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부모가 집에서 양육
- 가정보육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자녀를 포함하여 약 5명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로 부모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월급과 근로연금이 지급됨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전액 무상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 아동 수에 따라 비례하여 차등 부담하며 공립 어린이집(뻘아바꼬띠) 이용 시 가구 소득 대비 이용료 부담비율은 약 12% 이내임

<표 5-1> 핀란드 아동수당(2012년 대비 2015년)

(단위: €/월)

구분	2012년	2015년
첫째 아이	104.19	95.75
둘째 아이	115.13	105.80
셋째 아이	146.91	135.01
넷째 아이	168.27	154.64
다섯째 아이 이상	189.63	174.27

출처: 이윤진 · 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p.32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핀란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휴직 가능기간과 높은 소득 대체율(소득의 약 70~75% 수준), 부성 휴가의 장려 등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부모권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녀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공
-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보육서비스(빠이바꼬띠)의 확충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이용하며 보육과 교육에의 공공성 기반이 강함
- 아동수당을 제외한 보육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핀란드 육아지원 제도들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음
- 핀란드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특성을 지녀 영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보육·교육기관에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부모참여가 활성화된 특징을 보임
 - 예를 들어 답임교사의 가정방문이나 처음 2주간 부모가 시설에서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소프트 비기닝(soft beginning) 등의 제도가 운영

4. 스웨덴 보육·교육정책

□ 추진배경

- 스웨덴 가족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도 북유럽 국가들이 보이는 양성평등,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데 초점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육아기에 다양한 휴가나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스웨덴 정책의 특징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가족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임

- 부모에 의한 가정양육이 강점을 지니는 영아 시기에는 육아휴직급여(육아 휴직)와 양육수당을 이용할 수 있고, 복직 후 대리양육이 필요한 시기에는 공적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어 있음

□ 추진내용

○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과 더불어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 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
- 1998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아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3시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보육 이외에도 육아지원 제도들을 꾸준히 추진
- 스웨덴의 보육·교육 기관인 피르스콜라(förskola)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이나 종일제 보육·교육시설의 특징을 가짐
- 기관이용 시 비용 지원은 부모부담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며,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 수 및 맞벌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짐

<표 5-2> 스웨덴의 보육기관 유형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피르스콜라	피르스콜라 (pre-school)	만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부모 이용 기능이 원칙 - 미취업 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 연중무휴 종일제(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균 3학급 정도로 구성, 학급당 인원은 15~24명 정도로, 3명의 교직원 배치 -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형식적 기관으로, 2009년부터 Family daycare에서 pedagogical care로 명칭변경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하는 경우(만 1~12세 이용 가능, 보통 만 1~5세 이용)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개방형 포르스콜라 (open pre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취업/학업중에만 이용가능 - 지자체별로 비용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만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비형식적 기관 - 기관(포르스콜라)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부모/양육자와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제 (정기적 등록 필요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을 이용 - 주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함 - 학기중-시간제위주, 방학중-전일제 위주로 제공됨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		만 6세 (취학 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으로 초등학교 내 위치, 반일+방과후보육으로 구성됨 - 높은 이용률(99%)로 준 의무교육에 해당함 - 연간525시간이 무상으로 제공됨
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여가활동 센터	만 6~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 -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가 휴일인 경우 아동을 보육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발달을 지원함 -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하는 경우에 해당 -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가능 -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자료: 백선정(2016),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p.9

- 2002년부터 모든 3~6세 유아는 주당 15시간(1일 3시간, 연간 525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비취업 부모의 경우 그 이상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함

- 취업/학업 부모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 가구소득, 이용 시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책정됨

○ 육아휴직

- 스웨덴은 최장 16개월(480일)의 육아휴직을 어머니나 아버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3개월까지는 8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며, 특히 2개월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기를 권고
- 2012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그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Gender equality bonus)

- 2008년 부모 간 자녀양육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양성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가 도입
- 이는 부성 육아휴직 수급과 연계 지급되는 세금감면 혜택으로 자녀 한명당 최대 SEK 13,500(약 1,570유로)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스웨덴은 자녀를 기르는 가족지원을 위해 임신수당(pregnancy benefit),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주거 수당 등도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스웨덴의 보육·교육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영유아교육에 초점을 두고, 공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제시
-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연동하여 일찍부터 공보육 체계 확충을 통해 노동권을 중시하면서도 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유급출산휴가 등) 통해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유아기에는 무상 공보육·교육을 통해 기관 이용 장려하는 방향

- 스웨덴은 육아지원 정책의 조합과 배치, 그리고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과 차등지원의 설계가 특징임
 - 보육료 지원 기준은 부모의 여건을 반영하여 취업(학업)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되지만 그보다는 가구소득, 자녀 수(출생순위), 실제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책정됨
 - 취업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비취업모 대상 육아지원센터의 지원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기도 함
- 특히 관련 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간 최적 조합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즉 모두가 일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육아에 대한 가치부여,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회 전반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경제 발전의 지속, 근로복지의 구현이 출산율 회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5. 프랑스 보육·교육정책

□ 추진배경

- 프랑스는 일찍부터 수당 중심 지원체제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 수립
 - 국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 방법으로 1939년부터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필두로 지원 범위, 대상,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육·교육정책은 주로 영아를 위한 보육과 유아의 교육이라는 이원화체제로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공립으로 보육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
- 이민자 가정, 동거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 1999년부터 시행된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la Solidarité)에 따라 동거가족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세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

□ 추진내용

○ 출산휴가

- 프랑스의 출산 휴가는 16주이며(셋째 자녀 이상 26주, 쌍둥이는 최대 34주), 그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100% 또는 최대 월 3,000유로가 제공됨

○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 프랑스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며, 첫째를 제외하고 자녀가 14세가 되면 월 64.67유로의 할증 금액이 지급됨
- 2015년 7월부터 가구 소득에 따라 가족수당액과 연령 할증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하며, <https://www.service-public.fr>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매달 약 120유로에서 430유로에 해당

○ 출산수당(Prime à la naissance) 및 영아양육수당(PAJE)

- 출산 시 둘째자녀부터, 308유로에서 923유로까지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영아양육수당은 태어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72유로를 지급

○ 가족보조금(특별수당)

- 이는 보편적 지원이기 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보조금으로 자녀가 만 21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층 부모,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
- 이외에 최저소득층 부모에게 초등 이상의 자녀 학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개학수당과 한부모 가정 가족부양수당 등도 있음

○ 아이돌보미(à la garde d'enfant) 보조금

-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월 87.19유로에서 460.93유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상위 20% 소득수준 가정을 분류하여 보조금을 삭감

○ 육아휴직제도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첫째자녀인 경우에는 두 부모가 모두 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보장

- 둘째자녀부터는 주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6개월의 휴직을 신청하면 두 부모의 총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보장
- 영유아 보육·교육 유형
 -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체계가 확고하게 정립
 -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유아원(Ecole Maternelle)은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 2~3세 아동은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
 - 보육료는 무상이 아니며 이용하는 보육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맞벌이 여부보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수당과 보육료를 차등지원 또는 부담함이 특징적
 -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는 보육모의 집에서 1~4명의 영유아를 돌보며, 하루 9시간, 주당 45시간 동안 돌봄
 - 영유아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내 보육모(garde à domicile)도 있음

<표 5-3>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유형

	보육사	보육시설			공립유치원
명칭	Assistantes maternelles	Crèche	Halte -garderie (일시보육)	Jardin d'enfants (시간제)	École maternelle
나이	통상 6세 이하	2개월~ 3세	6세 미만	2~6세 혹은 방과 후 아동	3-5세 전부 및 2세 중 일부

자료: 권미경(2017), 유럽국가의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p.19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출산휴가부터 가족수당 제공, 세제지원에 이르기 까지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짐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이 특징
 -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가족수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계층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2015년부터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함
- 유치원은 모두 공립이며, 전체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공립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공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부모인 경우에도 27%가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가능
 - 아버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발견 가능

<표 5-4> 유럽 주요국의 보육·교육정책 비교

구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배경	합계출산율	1.71	1.88	1.98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6	61.3	51.6	
	GDP 대비 가족지원 비율	3.2%	3.6%	3.7%	
가족지원	아동수당	- 18세 미만 - 자녀수에 따라 증가	- 16세 미만 - 자녀수에 따라 증가	- 20세 미만 - 차등 지원	
	육아휴직	유급	17주 소득대체율: 78.5%	8.6주 소득대체율: 77.6%	16주 소득대체율: 93.5%
		가능전체	161주 소득대체율: 26.5%	60주 소득대체율: 63.4%	42주 소득대체율: 44.7%

구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세제지원	-	있음 (부성 육아휴직 수급과 연계)	GDP 대비 0.8%
보육· 교육 지원	비용지원	6세 의무 교육 6세 미만 차등 지원	3~6세 무상 지원 (주당 15시간) 부모부담 비용 상한제 차등 지원	3세- 무상교육 (주당 24시간) 보육료 및 방과 후는 차등 지원/부담
	공공성 정도	높음(90% 이상)	높음(70% 이상)	높음 (보육시설 70%)

자료: 권미경(2017), 유럽국가의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p.13, <표 12>를 토대로 정리

6. 영국 출산장려정책⁷⁾

□ 추진배경

- 생산체제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불안감과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합계출산율 하락을 주도
 - 대량생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불안정 등 경제불안감이 커지고 여성들의 출산 지연 및 소가족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해져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
 - 1997년 노동당 집권 후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율이 점차 회복됨
 - 또한 1998~2007년 전문기술인력 및 비숙련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IT와 의료보험부문 등에서 이민정책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가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침
-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이민정책으로 출산율 향상 주도

7) 권미경(2017), 고승연(2014)를 참고로 정리

□ 추진내용

○ 고용과 연계된 인센티브

- 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형태의 경제적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 39주과 유급 모성휴가로 39주를 제공
- 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

- 2013년 이전에는현금지원 정책의 일종인 아동수당제도가 활성화되어 부모 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
- 2013년부터는 재정절감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이 6만 파운드 미만 가구에 한하여 자녀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형태의 현금지원으로 제공
- 첫째 혹은 외동자녀의 경우 매주 20.70파운드(한화 약 30,000원) 지원, 그 외 자녀는 매 자녀 1명 당 13.70파운드(한화 약 20,000원)가 지원되며, 이에 대해서는 부모(16~64세)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총액에 대한 제한(benefit cap)이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가격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단위 세액공제

-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제가 발달되었는데, 이는 일부 기업에서 계약을 통해 급여와 함께 제공
-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는 모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로, 소득과 보육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를 보임.

- 근로세액공제(WTC: Working Tax Credit)는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통한 보육비용 지원으로 모 취업여부에 따른 별도의 명시된 기준보다, 모의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세금납부의 세액공제를 통해 모 취업 여건과 근로시간이 보육료 지원에 반영되는 형태

○ 무상보육지원 확대

- 2015년 7월 발표된 확대방안은 2017년 9월 이후 3~4세 자녀를 둔 근로가정(주당 근무 시간이 16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드(약 1억 5,000만 원 정도)이하인 가정)의 경우, 주당 최대 30시간(연간 38주)의 무상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아동관련 수당 및 세액 공제 제도는 늘어나는 사회부조비용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
- 또한 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근로시간과 연계한 세금공제 형태의 지원이 특징
 - 영국의 육아지원제도는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되어 수당지원과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함에 있어,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세금납부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근로시간이 보육료 지원에 반영되는 형태
 - 이러한 지원 형태는 다른 경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근로시간과 연계한 세금공제 형태의 지원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7. 노르웨이 대표적 출산장려정책: 육아휴직제도⁸⁾

□ 추진배경

- 198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족 부양책임을 지는 남녀 근로자의 기회와 대응의 평등에 관한 협약(156호), 권고(165호)’를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1980-90년대 성평등을 위한 중요 도구로 육아 휴직제도 시행 강조
- 노르웨이의 육아 휴직 제도는 단순히 출산장려만을 도입 되었다기보다는 1970년대 이후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 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육아휴직 제도의 목표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직장가 가정의 양립
 - 출산 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 평등의 제고
-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육아 휴직 기간 중의 일부를 남성들에게 할당하는 제도(대디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사용

□ 추진내용

- 육아휴직을 세 부분(공동 기간, 모성할당 기간, 부성할당 기간)으로 구분
- 공동기간(Shared period)
 -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모성할당 기간과 부성할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18주(100% 급여의 경우), 혹은 28주(80% 급여의 경우)
 - 부모들의 협의에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동 기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경우, 어머니는 이 기간 중 반드시 유급 근로에 임하거나 이에 상당한 활동을 하여야 함

8) 이정원·이세원(2013), 기획재정부(2010)를 바탕으로 정리

○ 모성할당(Maternal quota)

- 어머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으로서, 어머니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14주
-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는 바로 6주를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8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언제라도 사용 가능
- 어머니가 질환이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 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일 때는 아버지가 이 기간(모성할당)을 청구 가능
-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휴직 전 임신 10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고, 소득이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연간 기본 급여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부성할당(Paternal quota)

-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으로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14주
- 부성할당의 목적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으며, 아버지가 부성할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은 소멸
- 부성할당기간동안 자녀의 어머니는 근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활동을 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선택
- 부성할당 기간에 부모는 최대 육아휴직급여의 150%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어머니가 적어도 50%의 근로를 할 때에만 적용

○ 모성할당과 부성할당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14주를 연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

- 단,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후 3년 이내에만 가능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세계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확립

-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녀 간 균형 잡힌 양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 양성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 참여를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로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보장
- 1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제3절 일자리 · 소득 부문

1. 일본 후쿠시마현 가가미이시정 논아트사업

□ 추진배경

- 일본 시정촌 중에서 정(町)의 시책 ‘역에서 내려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마을 만들기’의 메인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하토리댐(羽鳥湖ダム)의 파이프라인 파손으로 논의 약 80%가 경작할 수 없게 됨
 - 이후 파이프라인의 복구와 함께 2012년부터 ‘관광자원 창출’과 원전사고의 ‘소문불식’, ‘지역생산·지역소비(地産地消)’와 ‘6 차산업’ 등 다면적인 전개 를 지향하며 시작
- 가가미이시정은 후쿠시마현 나카도리의 중앙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호쿠 도로와 국도 4호선 등의 간선도로와 JR 도호쿠혼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근대 낙농발상지로 여겨지는 ‘이와세목장(岩瀬牧場)’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스포츠레저시설 등이 있으며 쾌적한 전원도시가 확산되어 있음
 - ‘논아트’ 사업 등을 통한 농업·관광 연계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 추진내용

- ‘논에서 아트다!’ 논아트 사업
 - 물감 대신 색이 다른 벼를 이용하여 논을 1 장의 캔버스처럼 보이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논아트’사업 추진
 - 가가미이시정의 지역성을 활용하여 JR 도호쿠혼선 가가미이시역 동쪽으로 조성

- 가가미이시정 도서관 4층에서 바라보는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림책, 또 하나의 도서관’을 컨셉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아는 동요와 동화를 테마로 논아트 추진
- 논카페와 농업체험행사 추진
 - 풍년기원 모심기 축제 등 농업체험행사
 -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절정시기에는 도서관 부지내에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논카페’를 운영하고, 가가미이시정의 PR활동과 특산품 판매
- 2016년부터는 논아트 LED 일루미네이션을 ‘반짝반짝 아트’로 추진

<그림 5-2> 일본 가가미이시정의 논아트



<논아트 “우라시마타로”(2015)>



<반짝반짝 아트>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2년 첫 회 관람자수는 5,613명, 2016년에는 22,436명으로 늘어나 매년증가
 - 사용 중인 벼는 7종류(검정, 노랑, 빨강, 흰색, 주홍, 녹색, 짙은 녹색)로 향후 논아트 면적을 확대시켜 더욱 교류인구를 확대하고자 함
- 논아트를 계기로 기타 다른 소프트사업으로의 파급효과를 도모하여 더 많은 교류인구 확대

2. 일본 농의 고용사업

□ 추진배경⁹⁾

- 청년 신규 취농을 장려하는 일이 농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임에도 직업교육훈련, 취농 초기 단계의 생계, 영농기반 등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 부재
- 일본 정부는 청년층의 주요 취농 경로로 부각되고 있던 농업법인 등을 통한 고용 취농을 활성화하고자 2008년부터 농업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연수경비를 지원(연간 최대 120만엔 한도)하는 ‘농의 고용사업’을 도입

□ 추진내용

- ‘농의 고용사업’은 고용 취농자 육성형과 법인 독립 지원형으로 구성
- 고용 취농자 육성형은 농업법인 등이 취농 희망자를 새롭게 고용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대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까지 지원
- 법인 독립 지원형은 농업법인 등을 설립해 독립하려는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4년까지 농업법인 설립 및 독립과 관련된 연수에 대하여 지원
 - 단, 법인 독립 지원형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심사를 다시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또한 3년째부터는 연간 최대 지급액을 60만 엔으로 제한하는데, 이 경우 연수생에게 급여 명목으로 최대 월 48,000엔을 지급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법인 및 선도농가에 연간 최대 24,000엔(월 환산 2,000엔) 지급

9) 김종인·김정섭(2016) 참조

<표 5-5> ‘농의 고용사업’의 수급조건과 지원 내용

	고용 취농자 육성형	법인독립지원형
요건	고용자 채용 시 연령이 만 45세 미만	고용자 채용 시 연령이 만 45세 미만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3~4년째에는 연간 최대 60만 엔 지원

자료: 全国農業會議所 홈페이지(www.nca.or.jp/Be-farmer/nounokoyou/original).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농의 고용사업’이 도입된 이후 신규 고용 취농자가 점차 늘어나, 2006년에 6,510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 8,920명에 이르렀다가 2013년부터 약 7,000명 수준을 유지
-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전체 신규 취농자 감소율이 18.3%에 달했으나, ‘농의 고용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신규 취농 지원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6년 간(2008~2014년)의 연평균 감소율은 0.7%로 크게 완화
- 농업 분야에 고용 취농자가 증가한 데에는 정부의 고용 대책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농업법인이 증가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즉 농업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용효과 창출에도 기여

3. 일본 보라바이트 사례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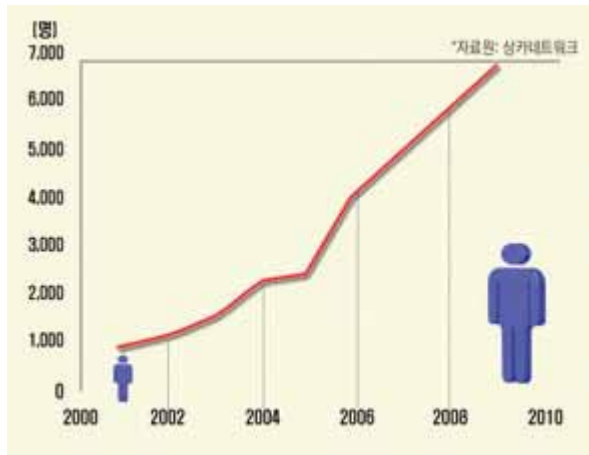
추진배경

- 보라바이트는 Volunteer(자원봉사)와 Arbeit(아르바이트)의 일본어적 합성어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며 비영리적 목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함

10) 정명희(2010)를 중심으로 정리

- 불황에서 고용창출이 어려운 일본에서 “직업체험”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회적 기업 등의 붐을 타고 개념화되고 있는 트렌드임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면서 비영리적 목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가 보라바이트가 됨
- 보라바이트는 원래 무상인 자원봉사에 “사례”가 오가는 중간 개념으로 종래의 자원봉사적인 시민운동을 비즈니스 적으로 체계화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유래

<그림 5-3> 보라바이트 참가자들의 증가 추이



-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진 취업난에 20, 30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준비단계로 농사일에 경험을 쌓고자 하면서 보라바이트라는 새로운 구직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 볼런티어와 아르바이트로 합성된 보라바이트는 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회경험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시 및 봉사욕구나 자기실현욕구 충족에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아르바이트와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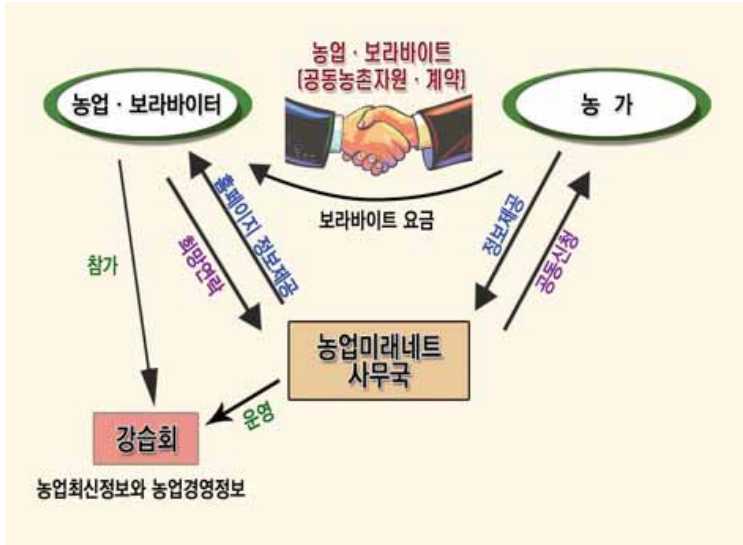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특히 메마른 도시환경을 떠나 농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 준비단계로 보라바이트 경험을 쌓고 있음
- 지역 농가와 젊은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초기에는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NPO단체로 점차 확대 되고 있음

□ 추진내용

- 농번기의 낙농가, 캠프장, 장애복지시설, 성수기의 숙박시설 등 일손이 부족한 직종을 보조, 자연체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취업경험이나 지식·기술·경험을 하거나, NPO단체나 봉사활동단체의 임시 스텝으로 일함
 - 노동시간은 당일치기, 1개월 이상의 입주식 장기고용 등 다양
 -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보라바이트는 하루 8시간 전후로 수당은 시간당 300~700엔 전후이며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라바이트 운영사례: NPO법인“농업 미래 네트”
 - 농업 보라바이트이란, 농업(Agriculture)과 보라바이트(Volunteer+Arbeit)를 조합한 신조어임
 - 즉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과“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를 받아들이고 싶은 농가”를 위한 협동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 시사점이 큼
 - 법인명 : 특정비영리활동법인“농업 미래 네트”
 - 설립 : 2008년 3월 28일
 - 설립 목적 : 일본의 농업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농인구의 증가 및 국내 농생산물의 소비향상 운동에 관한 사업을 통하여 식량자급률 높이는 공익사업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 농산어촌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 식량자급률 향상 운동에 대한 계몽사업

- 농산어촌 활성화에 관한 조언 및 지원사업
- 농산어촌 상황에 관한 간행물 사업 등

<그림 5-4> 농업 보라바이트의 구조



자료: <http://www.nou-mirai.org/beginner.html>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보라바이트 일은 수당은 적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직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한 노하우·기술 등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음
- 또한 구직형태로 대가보다는 직업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 등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손님이고, 보라바이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함

- 보라바이터와 지역 농가의 니즈가 일치하여 과소지역이나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라바이터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은 순기능이 적지 않음
- 미국이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화봉사단을 통해 국제봉사활동에서 찾았다면, 국내에서는 국제적 봉사활동보다 국내 봉사활동에서 이러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독일 켈젠키르헨 시 사례¹¹⁾

□ 추진배경

- 독일 서부 Ruhr 협곡에 있는 도시인 켈젠키르헨은 1800년대 중반부터 석탄과 제철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1897년부터 1919년 광산 노동자를 위한 300개의 주택이 건설되는 등 도시가 발전함
- 그러나 1950년대 이후로 광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광산이 2000년에 폐업하면서 1960년대 약 4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약 26만 명으로 감소함
 - 광산이 폐쇄되고 제철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부터 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특히 1987년의 실업률은 15%로 독일 평균의 2배에 달했음
 - 인구 감소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졌으며 광산 및 공장 등의 생산시설과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방치되어 도시경관이 파괴됨
- 또한 청장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민자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
- 1960년대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는 철강공업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음

11) Dieleman (2016)와 신동호(2015)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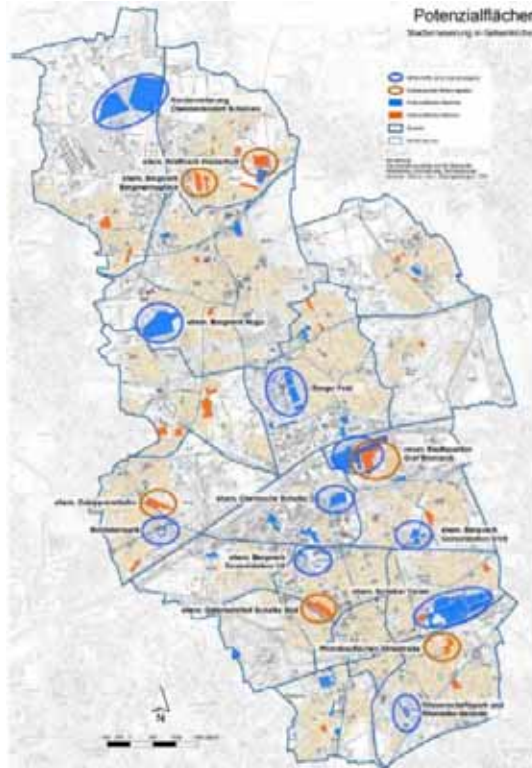
- 1980년대 말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주목받게 되면서 쾰젠키르헨시도 태양도시(Solar City)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 쇄신을 추구함

□ 추진내용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무한 쾰젠키르헨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에 회의적이었으나 1989년 국제건축전람회(IBA,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에서 쾰젠키르헨 비스마르크(Bismark) 지역에 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안됨
 - 시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 방향을 ‘미래 에너지’로 설정하고 “천개의 굴뚝을 천개의 태양으로 바꾼다”는 슬로건 하에 태양에너지 사업을 시작함
- 기존 광산회사 본사 부지를 과학단지로 재개발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중심이 되는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 건물을 건설함
 - 기술센터 지붕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1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건물 앞에는 인공호수를 조성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 개발을 유치 및 지원
- 기술센터 완공 이후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점차 활기를 되찾음
-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태양광발전용 셀(Solar cell), 태양열 집열기, 지열 펌프, 풍력 발전기 부품, 바이오에너지 생산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클러스터에 참여하면서 태양에너지 도시로서 변모
- 1997년 주거지 개발에 첨단 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태양에너지 주택 지구를 조성
 - 과거 석탄채굴 부지의 일부를 72세대의 에너지저감주택으로 건설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이 진행되었고 오염된 토양과 건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침

- 주택 지붕에 태양열 집열기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난방 및 취사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함
- 2000년에는 기존 광부 거주지였던 린덴호프(Lindenhof) 주택 지구에 2차 태양에너지 주택 지구를 조성함
 -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개보수하고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사용료와 임대료가 저렴하도록 함
 - 총 224세대의 주택이 개조되었으며 m²당 CO₂ 발생량이 85%, 에너지 비용은 60%까지 저감할 수 있었음
- 2004년에 겔젠키르헨 태양에너지 조합(Solarstadt Gelsenkirchen e.V.)을 결성했으며 2007년 지역의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건설회사 및 수공업자협회가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태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함
- 2007년 겔젠키르헨시는 통합적 개발,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
 - 인구 구조 및 산업 변화에 맞추어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한 지역에 대해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을 통해 유연한 토지이용을 추구함
 - 근린과 주거지 보존 및 도심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 및 생태계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건설을 추진함
 - 노후 된 주택은 선택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공용공간의 재개발을 통해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 네트워크, 스타트업 지원, 직업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추구
 - 가족, 고령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 향상

<그림 5-5> 겔젠키르헨시 도시계획



자료: Dieleman (2015), p.18.

-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럽연합, 독일 연방정부 및 Ruhr주정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각 구역에 필요한 통합적 도시재생 솔루션을 제시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태양에너지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정부와 주정부의 긴밀한 협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부정적이었던 도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음

- 2006년 실업률이 20.1%에서 2012년 14.3%, 2014년 14.7%로 감소했고 이주율도 2006년 -0.06%에서 2012년 0.32%, 2014년 0.21%로 증가함
- 독일의 도시랭킹인 ‘Städteranking’에 의하면 쾰른시는 독일에서 69번째로 큰 도시로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도시에 비해 젊은 인구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비즈니스 등록 건수도 더 높게 나타남

5. 독일 고령인구 활용정책¹²⁾

□ 추진배경

- 독일 경제사회 전망 보고서인 “Deutschland Report 2030”에 따르면 2050년 독일 인구는 7,400만 명으로 2006년 8,260만 명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일 것임을 경고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20~65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
 - 이민자가 유입되긴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55~64세 연령층의 고용비율은 1996년 38%에서 2004년 42%로 증가했지만 30년 전 50%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고령인력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OECD 국가의 고령인구 경제활동 비율은 평균 51%이며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은 평균 70% 인 것을 고려하면 독일의 고령인구 고용활성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었음

12) 이정언(2007)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추진내용

- 독일 정부는 2006년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인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기간도 연장하고자 함
-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인력의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Initiative 50Plus 정책을 도입함
 - 총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는데 1)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 참여율 50%까지 향상 및 2012년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 달성, 2) 55세 이상 또는 고령인구의 조기퇴직 감소, 3) 고령인구를 위한 결합임금제 도입 및 고용보조금 지급, 및 4) 직업교육 확대가 그것임
- 고령자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아 재취업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임금제를 도입하여 재취업 고령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재취업 고령자의 임금이 예전 임금보다 적을 경우 고용 첫 해는 차액의 50%, 둘째 해는 30%를 보전 받을 수 있음
-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령자를 1년 이상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음
 - 고용주는 최소 1년 최대 3년 동안 임금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05년 55~64세 연령층 고용률이 46%였던 것에 비해 2014년 66%로 증가 (독일연방통계청, 2016)
- 2012년 정년을 67세로 단계적 연장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 65~69세의 고용률이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7%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정년연장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독일연방통계청, 2016)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2년까지 1위가 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유럽연합 평균 5.3%을 넘는 5.8%로 중상위권에 머무름

- 1위는 포르투갈로 11.7%이며 그 다음으로 루마니아 10.8%, 에스토니아 10.5%, 영국 10.1%로 나타남(독일연방통계청, 2016)

6. 미국 일자리 혁신전략¹³⁾

□ 추진배경

- 미국은 4차 산업 육성 목표로 미국 주도의 산업 플랫폼 형성과 표준화를 설정하고 특히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통합, 클라우드를 적용한 제조업 및 사이버 현실 구현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에서 2009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인재육성과 산업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고 2015년 혁신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 추진내용

-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은 총 6가지 핵심요소를 설정하고 각 요소별 실행방안을 제시함
 - 1) 혁신 구축을 위한 블록 투자: 연구 및 교육,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조성
 - 2) 민간부문 혁신 원동력 확보: 연구 및 실험 세금 공제 강화, 혁신적 기업가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개발 지원 등
 - 3) 혁신적 국가 역량 강화: 인센티브 표준화 등
 -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고급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 5) 국가 우선순위를 위한 혁신적 촉매: 혁신적 의료 서비스, 스마트 시티, 교육 혁명 등

13) 김건위 외(2014)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6) 국민을 위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톨킷 개발, 사회 혁신 주도 등
 - 이와 같은 혁신전략 하에 일자리 육성방안으로 2014년부터 무료 특허등록 (Patent Pro Bono)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약지역의 혁신을 지원함
 -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들이 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봉사를 통해 무료로 특허 신청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3배 이하여야하는데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또한 특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신의 발명품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¹⁴⁾
 - 이 프로그램은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봉사자(변리사)와 특허신청자(주민 등)의 매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TechHire Initiative 전략을 통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함
 - TechHire은 기술 분야 커뮤니티, 교육자 및 고용자의 전국 네트워크로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직업교육 및 훈련과 기술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무료 특허등록 서비스를 통해 미국 내 취약지역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촉진시켜 자국민의 혁신 잠재력을 향상시킴
 - TechHire Initiative를 통해 12개 지역에 12만개 이상의 기술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5년 8월 10개 커뮤니티로 시작했던 것이 2018년 현재 72개 커뮤니티, 237개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자, 1,300명의 고용파트너가 참여하고 있으며 4천개 이상의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함

14) US Patent Pro Bono 홈페이지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using-legal-services/pro-bono/patent-pro-bono-program>)

제4절 귀농·귀어·귀촌 부문

1. 일본 이로가와지구 정주형 취농프로그램¹⁵⁾

□ 추진배경

- 일본 이로가와 지구는 광산 폐쇄, 농림업 쇠퇴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었음
 - 지역주민조직인 ‘경인사’에서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주형 농업실습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영농정착을 유도

□ 추진내용

- 경인사에서 추진한 3개의 취농 적응프로그램
 - ① 체험형: 벼재배, 밭일, 산나물채취, 차따기 등 2박 3일의 체험메뉴 실시
 - ② 실습형: 3일간의 실습 준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후 다양한 기간의 농업실습을 제공
 - 1주에서 1년간의 농업실습을 실시
 - 실습생은 삼림조합, 차업조합, 유기농우회, 무농약 야채출하 협동조합 및 개인농가 등에서 실습
 - ③ 정주형 : 이주희망자들에 한하여 5일간의 정주체험을 제공
 - 체험이 끝나고 이주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정주 촉진반이 공가 및 농지 등을 소개해 줌
 - 정주희망자의 입거기간은 1년
 - 그 기간 동안 농가 경영 및 농촌 적응을 하고 농지나 주택을 구매
- 자발적 농지 가옥 등록제도 시행
 - 지역 청년회가 1992년에 창간한 지역소식지에 휴경지와 빈집을 등록하면서 등록된 농지와 가옥정보를 귀농 귀촌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함

15) 오은주·박진경(2015) 참조.

- 지난 30년간 신규 귀농자는 57세대 약 150으로, 이곳 주민의 1/3에 해당

사업효과 및 시사점

- 1977년 유기농업 이주 가구인 5개 가구가 지역 조직으로 설립된 ‘경인사’와 이로가와 지역진흥추진위원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
 - 1991년 이로가와 지역진흥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인사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음
- 사업부지는 지역 내 폐교를 개조하여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1995년 지역내 폐교를 개조하여 바구니 고향 원(籠ふるさと塾)을 만들어 이용하고, 중산간 집락기능 강화 등 촉진사업을 적용하여 국가 및 현으로부터 60%의 보조를 받음

2. 일본 교토부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¹⁶⁾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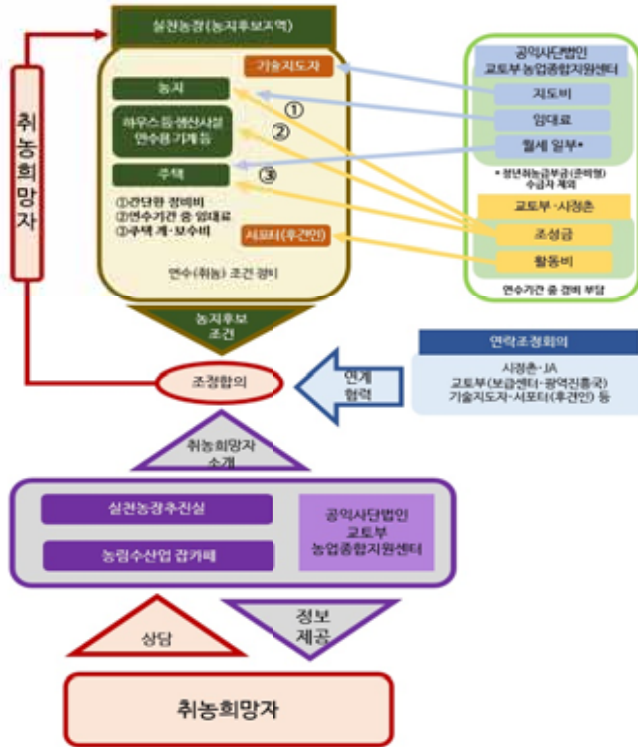
-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은 새로운 농업인 확보·양성을 희망하는 지역과 농업경영(생산)을 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농지확보에서부터 농업기술습득, 농업경영까지 일괄 지원하는 교토부의 독자적인 취농지원제도임
 - 이 제도는 2012년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120개소의 실천농장이 설치되었으며, 2017년 7월 기준 독립경영 94명, 연수중 10명, 이농·연수중지자가 16명임

추진내용

- 실천농장사업은 2년 이내의 연수를 지원하는 ‘취농준비형’과 취농준비 없이 바로 취농하는 사람을 1년간 지원하는 ‘경영개시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 2016년 기준, 실천농장 사업을 통한 취농정착률은 88%로, 90명 중 79명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음

16) (사)농정연구센터, 이슈와비평 (2017-7-17) 참조.

<그림 5-6> ‘농업인양성실천농장’ 사업 추진체계



자료: 공익사단법인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agr-k.or.jp/~kyoto-j/agriculture/agri3.html>)

- 우선 취농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취농상담을 시작으로 실천농장 설치와 기술 지도자에게 농업기술 연수를 받은 후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진행
 - 취농희망자들에게 농업체험 활동을 연계시켜 자기평가를 통해 실전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취농에 필요한 조건이 일정수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농지후보지역을 소개하여 연수용 농지를 찾고, 이후 시정촌·교토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 후 실천농장을 설치

- 이후 기술지도자와 교토부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지원을 통해(2년 이내) 농업기술 연수를 받음
- 이외에도 농촌생활에 대한 조언, 지역에서 신뢰관계 형성을 돕는 서포터(후견인)를 선정하고 활동비를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교토부의 실천농장 사업은 농림수산성의 다른 신규취농지원사업에 비해 88%의 높은 정착률을 기록
-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연계를 들 수 있는데, 농림수산성(중앙정부)의 국가적 농업정책 프레임 안에서 교토부(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교토부,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개량보급센터,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광역 및 지자체단위에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3. 일본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¹⁷⁾

□ 추진배경

- 일본 정부는 신규 취농자 정착 목표를 매년 2만 여 명으로 설정하였는데, 농의 고용사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따라서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경험하는 취농 초기의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해주는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을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

17) 김종인·김정섭(2016) 참조

- 특히 2012년에 새롭게 체계를 갖춘 신규 취농 지원제도에는 이러한 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생활비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이렇듯 생활비 지원이 강조된 것은 2010년 일본 전국농업회의소가 전국의 신규 취농자들을 대상(표본 1,410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인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 취농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 낮은 소득(전체의 34.1%)이라고 인식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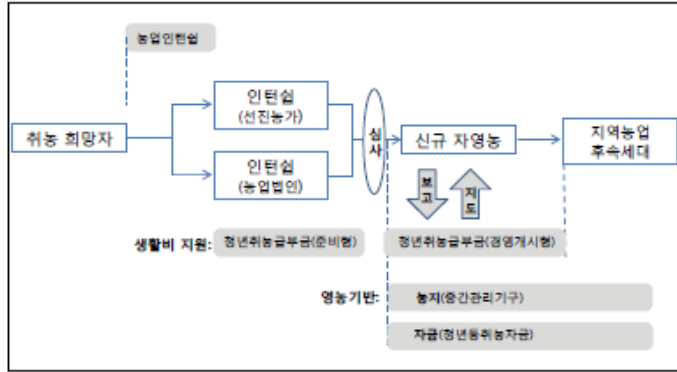
- 청년 취농 급부금(경영개시형)
 - 농업경영을 개시하는 신규 취농자들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
- 청년 취농 급부금(준비형)
 -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은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우만이 아니라 취농 전에 연수를 받는 취농 희망자도 함께 대상화
 - 농업대학, 선진 농가, 선진 농업법인 등을 연수처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는 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거친 후 취농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실태를 반영한 결과임

<표 5-6> 청년 취농 급부금의 수급조건과 지원 내용

	청년 취농 급부금(준비형)	청년 취농 급부금(경영개시형)
요건	취농 시 연령이 만 45세 미만이며, 정부가 인증한 곳에서 농업 연수를 받는 자	취농 시 연령이 만 45세 미만이며, 독립적으로 영농을 실시하는 인정 신규 취농자
지원내용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 간 지원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 간 지원

주: '인정 신규 취농자'란 신규 취농한 자 중 해당 지자체에 자신의 향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자를 의미

<그림 5-7>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 정책 개요



출처: 김종인 · 김정섭, 2017, p.120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농의 고용사업과 함께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규 취농자 중에서 39세 이하의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9.5%에서 2014년 26.5%로 높아짐
-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 정책으로 고용 취농자와 신규 참가자가 점차 늘어나고, 비농가 출신의 신규 취농자가 늘어나는 등의 성과 창출
 - 급부금(준비형) 수령자 가운데 비농가 출신인 비중이 60% 이상이고, 경영개시형의 경우도 50% 가까운 신규 취농자가 비농가 출신
- 우리나라에서도 귀농 후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오는 비율이 5~10% 내외로 추정되는 등 귀농자들의 정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마상진, 2016), 정착률을 높이려면 지역에 뿌리내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
- 일본의 농의 고용사업 및 청년 취농 급부금 정책과 같이 초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4. EU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¹⁸⁾

추진배경

- 195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1957년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발의함
 - 이 정책은 지역 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물을 고정가격으로 무제한 구입하며 과잉생산량은 해외에 팔 수 있도록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
 - 수입농산물은 지역 내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수입 부과금을 매김
 - 그러나 1980년대 유럽연합 예산의 70%를 과잉생산물 구매와 수출보조금에 소비하면서 다른 산업 및 국가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유럽연합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작동원리에 맡기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함
- 1992년 직불제(Direct Payment)를 도입하여 농장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농장직불과 지역직불로 이원화되어있던 제도를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로 통합하고 환경성(greening) 강화와 실제 경작여부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
 - 수령액에는 상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구조
-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국제시장에 맞추어 유럽 공동농업정책은 2014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도입함

추진내용

- 2014년부터 소농직불제(Small farmers direct payment) 실시
 - 경작 규모가 작아 기존 직불제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의 액수가 작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

18) 마상진·김종인(2016)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연간 500~1,250유로를 일괄지급하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직불제 예산의 최대 10%를 소농직불제로 전용할 수 있음
 -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회원국별로 다른데 영국과 덴마크는 5ha 이상,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4ha이상이며 1ha미만인 국가로는 이탈리아(0.5ha), 그리스(0.4ha), 포르투갈(0.3ha), 루마니아(0.3ha), 및 폴란드(0.5ha) 등이 있음
- 18~40세 젊은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 동안 ‘청년농업인 직접 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지급
- 1980년대 중반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금(installation aid) 형식으로 지원해왔으나 신규 농업인의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도입
 - 5년 동안 기존 직불금의 125%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만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액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국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25ha로 제한함
 - 또한 회원국별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국의 의무조항임
 - 직불금은 농기계, 농산물 가공설비, 또는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동물 등의 자산(asset)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조기은퇴제도를 실시하여 청년농업인이나 신규 취농인에게 은퇴 예정자의 농장이나 토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조기은퇴 대상자는 55~66세 농장주로 청년농업인(18~50세)에게 농장을 인수할 경우 조기 은퇴자는 평균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장려금을 지급
 - 조기은퇴 농장주에게는 매년 1만 8천 유로씩 총 18만 유로를 지원하며 조기은퇴 농장 근로자에게는 매년 4천 유로씩 총 4만 유로까지 지원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소농직불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농장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소농이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보조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음

<표 5-7> 회원국별 소농직불제 수혜 농민 비중(2015년)

국가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비중	15.7%	10.0%	11.8%	47.2%	43.6%	20.1%	53.2%	25.5%
국가	헝가리	몰타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비중	29.1%	90.4%	23.8%	55.6%	48.6%	80.7%	3.2%	

자료: 오현석 외(2017), p. 16.

- 2015년 직불금 수혜자는 약 700만명으로 유럽연합 대부분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고 있음(오현석 외, 2017)

5. 미국 신규농업인 지원정책¹⁹⁾

□ 추진배경

- 미국은 2002년 농업법 제정을 시작으로 신규농업인 지원정책을 실시해왔음
- 2013년 신규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무산됨

□ 추진내용

-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Start2Farm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19) 마상진(2016)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이 시스템은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국립 농업도서관과 협력하여 구축한 것으로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 아래 그림과 같이 총 4가지 단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1단계는 농업 입문으로서 취농시 고려해야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2단계는 취농 계획단계로 사업계획 작성과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3단계는 자원에 대한 정보로 농지 및 노동력 확보, 자본 및 위기관리, 세금 및 보험, 시장 및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식품 안전 및 농가 안전 등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 4단계는 농무부 종합 서비스 센터,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농촌지도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함

<그림 5-8> 미국 Start2Farm의 정보제공단계



자료: 마상진(2016), p.20

- 10~20세의 농촌청소년들에게 최대 5천 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가축이나 종자, 농기계 구입, 농업관련 기구나 장비 구입, 임차, 수리 또는 프로젝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금리는 고정이며 인구 5만 명 이하의 도시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4-H와 같은 농업인조직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금 상환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축이나 농산물을 키울 경우 가축이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임

- 신규 농업인 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을 진행하여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농가에게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
 - 의사결정 방법, 자금교육, 현장실습, 봉사활동 및 기술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신규농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10년 이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함
 - 신규농업인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을 실시
 - 신규농업인이 3천 달러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두 배를 (6천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9천 달러를 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정훈련 과정을 이수해야하고 저축계획을 세워야하며 저축액은 반드시 영농관련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음
 - 15개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임
 - 농장연계 프로그램(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을 통해 미국 농장への 접근성을 높여 젊은 신규농업인의 원활한 취농을 지원함
 -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농업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Start2Farm은 직접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은 부재하지만 신규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농업 연합회를 조직하여 취농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함
 - 신규농업인이 취농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함

제5절 주거·정주여건 부문

1. 일본 오카야마현 신조촌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²⁰⁾

□ 추진배경

- 오카야마현의 신조촌의 생활서비스는 버스로 약 40분(하루 6편)이 소요되는 인근 마니와시에 대부분 의존
 - 마을 내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었고, 고등학교나 식품판매소 등의 통학과 쇼핑도 마니와시에 의존
- 신조촌의 중심부, 이즈모 거리는 기차역 마을로써의 역사적인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
 - 오카야마현 신조촌은 내각부의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마을 내 생활기능을 집약화시킴

□ 추진내용

- 2017년 지역재생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작은거점”을 형성²¹⁾시키고, 장래 지역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목표: 2020년까지 ① 지역주민의 활동·교류·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약의 장으로써 마을거점을 형성하는 마을 개소수 1,000개소 형성 ② 마을거점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한 주민의 지역운영조직 3,000단체 형성

20) 이병기(2017)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21)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즉 의료·간병, 복지, 교육, 쇼핑, 공공교통, 물류, 연료공급 등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서비스를 일정지역에 모아 주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

- 4대 기본전략과 재정지원방안: ① 마을거점 내 진료소, 어린이집, 공민관, 상점, 주유소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집약 ② 우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는 농림수산업 진흥 ③ 마을거점과 마을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 및 배송 시스템 구축 ④ NPO 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담당 주체 확보 ⑤ 중앙부처의 마을거점 형성을 위한 재정지원
- 지방공공단체는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담은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시정촌은 사업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한 평생활약마을 형성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작성에 의해 법령의 특례조치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9> 작은 거점마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도



자료: 일본내각부(2016), “国における 小さな拠点づくりの取組”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 빈집을 활용한 마을 내 생활서비스 기능 집약화
 - 내각부 사업: 텔레워크를 위한 공동시설 정비와 고령자용 생활지원 시설 정비를 통한 마을 내 기능 집약
 - 마을단독사업: 기차역 주변 신선식품 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식품소비를 촉진시키고, 마을 내 순환을 위한 차량정비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인근 마니와시로의 인구유출 및 상업·교육시설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 정비
 -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시설과 고령자용 생활지원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능을 집약화하고, 마을순환버스로 연계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내각부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활용
 - 지역교류 거점에서는 육아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매기능, 고령자 교류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2. 일본 나가노현 시모조촌 고용대책집합주택 정비사업

추진배경

-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중산간지역의 젊은층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젊은층의 도시부로의 인구유출은 중산간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를 가속화 시킴
- 중산간지역에 해당되는 시모조촌(下條村)의 인구는 1950년 6,410명, 90년 3,859명으로 격감(40년간 약 40% 감소)

- 92년에 취임한 촌장이 주민에게 위기감을 호소하며 인구증가로 연결되는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 추진내용

- 청년정주촉진주택(임대주택) 정비사업
 -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村)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10동(棟) 124호(戶) 정비
 - 건축비 : 1동에 약 1억1,000만엔(국비 미사용)
 - 입주자격: ① 어린이가 있는 세대 또는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②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나 소방단에 참가
 - 집세를 인접시의 민간아파트의 반액 정도로 억제한 결과, 마을밖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많이 입주
- 분양택지 조성
 - 청년정주촉진주택(임대주택)입주자를 영주시키기 위해서 추진
- 고용대책집합주택 정비사업
 - 촌내에서 일하는 촌외(村外) 거주자(독신자)을 위하여 집합주택을 2008년에 1동 정비
 - 고용주의 법인과 마을(村)이 계약하며, 법인은 임대주택의 형태로 종업원에게 제공
- 2015년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제도 도입
 - 보조액수: 주택건설비의 10%(상한 100만엔)
 - 택지구입·조성비의 50%(상한 100만엔)
 - 대상: 45세 이하
- 보육료 인하와 고교 3학년까지 의료비 무료화
 - 2007년부터 보육료를 인하(둘째는 반액, 셋째아이부터는 무료)하고, 고교 3학년까지 의료비 무료화

- 출산축하금 및 입학축하금제도 창설
 - 둘째 출산시 5만엔,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엔의 출산 축하금 지급
 - 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초등학교 입학시 3만엔, 중학교 입학시 5만엔 증정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청년정주축진주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마을(村) 정책에 부합한 입주조건 마련
 - 특히, 주민자치조직이나 소방단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어 입주자가 지역에 융화되도록 함
- 청년정주축진주택에의 입주자가 결혼, 출산과 같은 라이프 스테이지의진행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교육과같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주축진을 꾀함

3.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 정주지원사업

□ 추진배경

- 아야베시는 교토부 북부 산간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 1950년에 54,055명이던 인구가 2016년 9월 현재 35,503명으로 감소하는 등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
- 귀농·귀촌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교류, 정주, 지역 진흥에 관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
 - 제5차 아야베시 종합계획(2011~2015)년에는 2020년 인구 3,3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추진내용

○ 아야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 창구 설치

- 정주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정주 서포트 종합창구를 설치
- 주택, 취농·취직, 지역 관습 등 정주에 관한 각종 상담 실시
- 빈집 정보, 농촌도시 교류 이벤트 개최 안내, 지역 정보 등 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

〈표 5-8〉 아야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창구의 실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희망 등록자(2014년 9월) 578명 • 정주실적(2008~2013년) 117가구 272명(2014년 기준 126가구, 295명) • 빈집 등록 수(2008~2013년) 123호 • 연간 평균 상담 건 수: 약 200건(전화, 메일, 방문) |
|--|

○ 빈집 유동화 보상금

- 빈집 등록제도(빈집뱅크)에 등록된 물건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정주자와 매매,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금 5만 엔을 지급
- 2010~2013년까지 이용실적 55건이며, 빈집 확보에 일부 효과를 발휘

○ 주택 취급 등 자금 알선 사업비

- 젊은 세대 정주 희망자에 대하여 빈집 구입·수리금으로 300만 엔 한도로 용자 알선

○ 빈집 매개 사업자 소개 사업

- 빈집 유동화에 필요한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농지법 등의 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야베 상공회의소를 통해 택지 건물 공인 중개자와 연계

○ 빈집 견학 투어 개최

- 정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겨울에 빈집 견학 투어를 개최

- 2008~2013년까지 총 9회를 개최하여 136가구가 참여하였고, 이중 12가구가 정주

○ 정주자 교류 모임 개최

- 네트워크 형성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교류회 개최

○ 정주지원주택정비사업

- 빈집을 활용하여 정주 희망자에게 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주 지원 주택 (정주를 위한 공영주택)을 설치
- 아아베시가 빈집을 10년 간 빌려 300만 엔 예산 한도에서 화장실 등 10개 지구에 각 1동씩 정비
- 연령제한: 입주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입주기간: 3년 간
- 임대료: 월 3만 엔(보증금 9만 엔)
- 시와 건물 소유자와의 임차기간 10년간(무상)

○ 빈집 활용 정주 지원 사업 보조금

- 아아베시는 빈집을 활용한 정주 촉진 방안으로 빈집의 구입을 지원하거나 빌린 주택의 개수 공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시행
- 주요 구조부, 화장실, 욕실, 주방 등에 필요한 개수 공사 등
- 보조율은 2/3 이내이며 보조액 상한은 100만엔 이내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취촌 인구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시책을 추진

- 특히 아아베시 정주 서포트 종합 창구를 설치하여, 귀농·취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역내 활용가능한 자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희망자들의 귀농·취촌 관심이 실제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지역 내 빈집 활용 정보 및 정주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
 - 특히 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주자 교류 모임 등도 개최함으로써, 실제 귀농·귀촌자들이 초반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배타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4. 독일 드레스덴 재활성화 정책²²⁾

□ 추진배경

- 독일 작센주(Saxony)의 주도인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되었고 독일 통일 이전에는 발전이 더딘 도시였음
- 독일의 급작스러운 통일 이후 10년 간 경제 침체에 의해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교외화 및 출산율 감소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었음
-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 드레스덴시는 도시 개발전략, 도심 비전, 교통정책을 주로 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구 52만 명 유치라는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음
 - 5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과 약 7km²의 신규 상업지역, 약 3km²의 업무지역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오히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약 1만 9천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2000년 주택 공실률이 20%에 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건축과 공실, 미개발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의 구조 변화와 불균형을 고려하여 2002년 드레스덴 통합도시개발 전략(INSEK)²³⁾을 수립함

22) 정윤희(2013)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23) INSEK: Das Integrierte Stadtentwicklungskonzept der Landeshauptstadt Dresden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Concept of the City of Dresden)

□ 추진내용

- 드레스덴 통합도시개발전략은 인구구조 변화, 사회통합, 자원보호 및 글로벌화 등 도시가 당면한 이슈를 고찰하고 향후 20년 간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서임
- 개발 목표는 유럽형 압축도시로 매력적인 도심, 압축적 개발을 통한 토지소요 감소, 안정적 인구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함
- 또한 1992년 계획이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여 기반시설과 주택을 과도하게 계획했던 것을 반성하고 2015년 드레스덴의 인구를 48만 명으로 현실성 있게 예측함
- 1992년 계획과 달리 기존 주택 재고가 미래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신규주택 공급은 따로 계획하지 않음
- 이미 개발된 필지의 일부를 녹지로 계획하고 6천호의 주택이 철거된 지역에 녹지나 1인 가구 주택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둠
- 마이크로전자공학,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산업이 개발지역에 입지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760개 이상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입지하고 2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 됨
- 기업입지와 직업 창출로 인해 드레스덴으로 이주하는 입주자와 이민자가 증가했으며 출산율도 높아짐
 - 인구 성장 및 공가 철거로 평균 공실률이 감소하고 도심 주변에 주거지 형성
- 드레스덴과 같이 인구 및 경제적 쇠퇴가 함께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국가와 지역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
-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보다는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공간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었음
 - 인구 및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 예측에 의존하기 보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함

5. 미국 축소도시 영스타운²⁴⁾

□ 추진배경

- 미국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과도한 성장 및 스프롤, 산발적 재개발을 지양하는 방향임
 - 미국의 축소도시는 유럽과 다르게 도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교외지역은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임
- 영스타운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도 같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됨
 - 1960년대 약 16만 6천명이었던 인구는 2007년 절반인 약 7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음
 - 인구감소와 함께 상점, 오피스 및 주택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1980년의 공가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3.4%를 기록함(구형수 외, 2016)
 - 인구규모에 비해 너무 큰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미국의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의 한계를 깨닫고 ‘영스타운 2010’을 수립함

□ 추진내용

- ‘영스타운 2010’은 통합적 도시계획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함
 - 1) 영스타운이 축소도시임을 인정하고 중간 사이즈 도시의 롤모델로 도약
 - 2)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영스타운의 역할 재구성
 - 3) 영스타운의 이미지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추구
 - 4) 달성 가능하고 실행중심의 계획 수립
- 이 계획은 새로운 주거지나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브라운 필드에 새로운 공원과 녹지 조성, 건강, 교육, 행정 및 문화 분야의 기존 지역 비즈니스를 강화 추구

24) Wiechmann & Pallagst (2012)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이를 위해 개발지와 미개발지를 알 수 있는 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주거지역의 30%, 상업지역의 16%를 축소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구형수 외, 2016)
- 압축도시 형성을 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하는 정책 실시(구형수 외, 2016)
- 지역 정부는 지역 간 협력, 공원과 녹지 형성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 환경 제공, 마호가니 강(Mahogany River) 재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영스타운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 성장에서 스마트 축소로의 패러다임 전환
 -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 개조(urban conversion)’을 추구함
-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계획은 성장 중심의 계획이었던데 비해 영스타운의 도시계획은 최초의 축소도시 사례로 알려져 있음
 - 2007년 미국계획가협회(APA)의 공공부문 국가계획상을 수여(구형수 외, 2016)

6. 일본 도야마시 대중교통중심 압축도시²⁵⁾

추진배경

- 일본 도야마 현의 중심도시인 도야마 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산된 도시구조로 인해 행정비용 상승,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CO² 배출량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왕건 외, 2016)
 - 인구가 2005년 2.2만 명에서 2040년 3.9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령인구비율이 2005년 14%에서 2040년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음

25) 구형수 외 (2016) 정리요약

- 인구집중지구(DID, Densely Inhabitant District) 면적의 경우 1970년 5.4km²에서 2005년 4.3km²로 증가한 반면에 인구밀도는 1970년 9.9명/ha에서 2005년 40.3명/ha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
- 1975년부터 2006년까지 도야마시의 도심지역은 인구감소를, 교외지역은 인구증가가 나타남
 - 특히 철도역이 없는 교외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철도역을 개발거점으로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교외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일인당 재설, 도로청소, 공원 및 배수 시설 유지관리 등의 행정 비용이 향후 20년 간 약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외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 도심은 급격한 쇠퇴를 겪었는데 도심 인구, 중심상업지구의 매출액 및 도심 상점가의 보행자 수가 모두 감소했음
 - 도심 인구의 경우 지난 40년간 약 50% 이상 감소했으며 중심상업지구의 매출액은 1994년부터 2004년 동안 약 40%가 감소
 - 보행자수는 1996년 약 7만 6천명에서 2009년 약 2만 3천명으로 70% 감소
- 또한 1970년 이후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1989년에서 2004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1/3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감소하고 배차간격이 넓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됨
 - 특히 도야마 시에 8km의 도야마코(Toyamako) 철도노선이 있는데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이용자수와 수익이 감소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임
- 이에 대응하여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을 따라 형성된 핵심지역에 주요 시설을 집적하는 방향의 도시개발 전략을 추진함

□ 추진내용

-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철도노선이 많은 도야마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노선을 ‘축’으로,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핵’으로 하여 다핵 압축도시 조성 추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심과 대중교통노선 인근 지역으로 거주 유도, 및 도심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함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야마코 철도노선을 활용하여 ‘도야마 경전철 (TLR, Toyama Light Rail)’과 시내전차환상선을 건설함
 - 경전철 및 시내전차환상선 노선을 따라 거주,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 도시의 거점시설을 집적시킴
 - 또한 민간 교통업체와 협력하여 시내 어디서든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심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100엔의 요금할인을 제공함
- 도심과 대중교통노선 인근 지역으로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중심시가지지구’와 LRT역 주변 ‘거주추진지구’를 선정하고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표 5-9> 도야마 시 중심시가지지구 및 거주추진지구를 위한 인센티브

구분	지원 내용	
중심시가지지구	건설사업자	- 아파트 건설: 100만 엔/호 -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 50만 엔/호 - 오피스/상업건물을 아파트로 리모델링: 100만 엔/호 - 아파트단지 내 상점 및 의료복지시설 건설: 2만 엔/㎡
	주택임대/구매자	- 주택/아파트 구매 대출: 1만 엔/달(최대 3년) - 외부지역에서 지구 내 임대주택으로 전입시 70만 엔
거주추진지구	건설사업자	- 공동주택 건설: 70만 엔/호 -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 공용면적 비용의 2/3
	주택임대/구매자	- 주택/아파트의 건설/구매: 30만 엔/호 - (추가지원) 2세대(고령자와 동거세대) 주택: 10만 엔/호 - (추가지원) 외부지역에서 전입: 10만 엔/호

자료: 구형수 외(2016), p. 105

-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상업거점 형성 추진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심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다이와 (Daiwa) 백화점 및 그랜드 플라자(Grand Plaza) 조성 추진

-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간호서비스, 교육 및 훈련,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시설 건설 시 보조금 지급
- 도심의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공동체보호센터 시범사업 추진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비전설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마을회의와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과정과 결정 내용을 지역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냄
 - 이를 통해 지역 구성원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음
- 개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단 유도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시행한 인센티브가 큰 효과를 봄
 - 중심시가지지구와 거주추진지구 인구가 2005년 총인구의 28% (약 11만 7천명)에서 31% (약 13만 2천명)로 증가
- OECD(2012)의 ‘콤팩트 시티 정책(Compact City Policies)보고서’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다섯 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이왕건 외, 2016)
 - 경전철(LRT) 이용인구(2006년) 역시 평일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2.1배, 주말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3.6배 증가함

제6절 교육 · 의료 · 문화 부문

1. 일본 생애활약거리 조성사업²⁶⁾

□ 추진배경

- 일본의 생애활약거리는 단순히 요양이나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님
 - 중·고 연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지역사회에 동화되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 만들기·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
 - 의료·간호·예방·주거·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지역포괄관리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함
-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시니어가 원하는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역할과 보람을 느끼며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최대한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실현된다면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

□ 추진내용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업실시
 - 생애활약거리 사업은 민간기업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학, NPO, 건설회사(제3섹터) 등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와 고령자 수요 모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 커뮤니티에서의 적절한 인구구성 유지

26) 이병기(2017)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함.

- 중장기적으로 여러 세대가 교류하면서 활기 있는 커뮤니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의 적절한 인구구성 유지

<그림 5-10> 일본 생애활약거리 추진현황(2016)



자료: 일본내각부(2016), 「生涯活躍のまち」構想に関する手引き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중·고령자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그 지방에서 활약
- 이주한 시니어는 지역의 소비수요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다양한 연령층과 협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창출

2. 일본 아키타현 교육교류사업

□ 추진배경

- 고령화 및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아키타현(秋田縣)에서는 타 도시로부터 교육유학으로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교류인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배움을 목적으로 아동과 학생들이 아키타를 찾아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가족을 이주·정주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추진내용

- 아키타(秋田)형 교육교류사업은 체험형과 정주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체험형은 단기간 일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체험활동을 해서 아키타가 좋은 지역임을 느끼도록 함
 - 체험형을 바탕으로 현내 학교에 전교하고, 정주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
- Order-made형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개발
 - 유학을 희망하는 아동·학생이 체류 기간을 자유로 정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더메이드형으로 추진
 - 거점시설에서의 숙박과 민박을 자유롭게 조합
- 아키타(秋田)의 지역성을 살린 체험 활동도 중시
 - 아키타현은 풍부한 자연에 혜택을 받고 있어 학습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체험 활동도 풍부하게 준비
- 배움과 체험을 종합적으로 코디하는 사회교육 주사(主事) 배치
 - 거점 시설에서 배우거나 체험을 종합적으로 코디하는 사회교육 주사가 배치되어, 유학의 상담이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학생교류를 통한 아키타현의 아이카와(合川) 초·중학교의 교육정보교류 및 지역주민의 활력 증대
 - 유학생을 받아들인 아키타현의 아이카와(合川) 초·중학교의 아동·학생은 교류를 통해서 다른 현의 정보를 취득하고, 유학생을 받아들인 민박처의 주민은 활력 생성
- 일본 전국지사회 “선진정책뱅크”에서 우수 정책상 수상

3.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 추진배경

-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사회대책대강을 개정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
 -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와 함께 ‘(국민이 생애에 걸쳐)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존중되고 지역사회가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성된 사회’를 이념으로 제시
 -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확립을 강조
 - 이는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로 지역 안에서의 결합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권역 내에서 의료·개호·예방 등의 생활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안심,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개호·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주택을 거점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지역 체제’를 지칭
 - 즉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자립하면서 일상생활에 영위하도록, 의료·개호·예방·주거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된 체제

- 이는 그동안 병원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했던 ‘의학모델’에서 생활의 질에 의해 규정되는 ‘생활모델’로의 이행을 의미
 - 지역포괄케어가 제시하는 고령자의 돌봄 모델은 병원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가능한 한 생활을 지속하여 당사자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향
 - 이러한 생활모델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역할에 기반
- 한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시에 있어 각종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임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심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5-11>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로 본 지역 포괄시스템



자료: 김미진(2017, <https://50plus.or.kr/org/detail.do?id=45146>)

□ 추진내용

- 각 지역에 따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시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돌봄에 미치는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 ① 안심시키미 역할 : 고립이나 배제의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그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보기
 - ② 발견 : 고령자의 생활환경의 변화나 생활과제를 발견하기
 - ③ 종합상담 : 고령기 생활과제의 상담이나 과제를 접수
 - ④ 연결하기 : 생활환경의 변화나 생활과제를 다음의 지원으로 연결하는 기능
 - ⑤ 지원 : 사회자원들을 조정하여 구체적인 생활지원 제공
 - ⑥ 권리옹호 :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리침해의 제거와 예방
 - ⑦ 고충처리 : 당사자나 지원자의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도모
 - ⑧ 개발·제언 : 부족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거나 계획과 시설 등의 수정 및 보수, 정책제언
 - ⑨ 평가 : 지원 제공 주체의 설치나 운영, 제공되는 지원의 질을 체크, 평가하는 기능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 ① 장기돌봄(介護状態)매니지먼트사업
 - 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허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자(특정고령자)가 그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며, 서비스는 장기돌봄사업이나 기타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며 포괄적·효율적으로 업무가 실시되도록 필요한 원조를 행함
 - 장기돌봄사업은 시·정·촌 책임 아래 수행되는 사업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파악과 장기돌봄계획작성 사업실시에 따른 모니터링과 사업실시기관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역할 담당
 - ② 종합상담지원사업

- 종합상담지원사업은 지역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인간답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 관계기관 및 제도의 이용과 연결 등의 지원을 함
- 사업내용은 초기단계, 상담대응 및 전문적·계속적인 상담지원,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고령자의 상황과 실태파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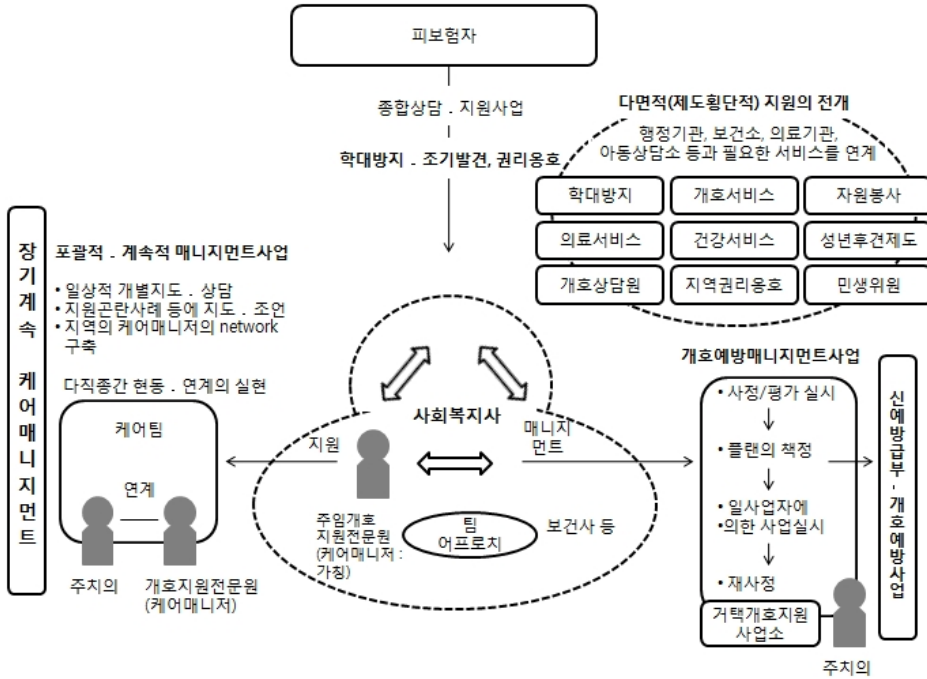
③ 권리옹호사업

- 권리옹호사업은 지역주민, 민생위원, 케어매니저 등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인 고령자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전문적·계속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運営の手引編集委員会, 2008).
- 사업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촉진, 노인복지시설 등 조치지원, 곤란한 사례에 대한 대응지원, 소비자피해방지에 관한 모든 제도의 활용, 고령자의 생활유지 도모

④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

- 포괄적·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치의, 케어매니저와 연계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직종과의 다직종 협동이나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함
- 사업내용은 포괄적·계속적인 케어체제의 구축, 지역사회내의 케어매니저의 네트워크 구축·활용, 케어매니저에 대한 일상적 개별지도·상담, 지역의 케어매니저가 안고 있는 지원곤란사례 등에 대한 지도·조언 등임

<그림 5-1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자료: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運営の手引編集委員会, 2008; 성은미·조추용·권혜영, 2012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금까지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각자 진행되어 오던 각종 생활 안정·개호·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합적·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새롭게 고령세대로 진입한 초기고령자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참여 및 고용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중 효과 창출

4. 일본 치바현 나가레야마시(流山市) 마케팅 사업

□ 추진배경

- 지자체 인구감소에 대응한 리더의 강한 정책 의지
 - 나가레야마 시의 이자키 요시하루 시장(2003년 시장 취임은 지자체 재정이나 도시의 활성화, 세대의 지속성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어린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미래의 나가레야마시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적자원이라고 생각
 - 이에 이주정책의 타깃을 듀크족(Dual Employed With Kids: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으로 좁히고, 지자체 홍보와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동시에 병행 추진
 - 육아세대가 계속해서 시에 살며 세대 순환이 가능하고, 세금 수입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려 타깃을 듀크족으로 선정
- 인구증가를 위해 지자체 행정에 민간 마케팅 전략 도입

□ 추진내용

- “역전 왕복 보육 스테이션” 사업
 - 유치원의 정원을 대담하게 늘려 시의 2개의 주요 역에서 각 유치원으로 버스를 통해 갈 수 있는 허브시스템을 만들어 육아하는 맞벌이 부부의 최대의 걱정거리인 유치원 문제의 해결을 도모
 - 2개의 중심역을 허브로 두고 거기서부터 각 유치원을 왕복
 - 부모는 출근할 때 역까지 아이와 함께 와서 역전에 있는 왕복 보육스테이션에 아이를 맡기면, 그 후 버스가 와서 왕복 보육 스테이션에서 각 곳의 유치원까지 등원을 지원
 - 2013년 기준 버스는 5대가 도입되었고, 이용자는 매일 200명 이상, 이용요금은 1회에 100엔
 - 돌아올 때도 각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역전의 왕복 교육 스테이션에 전달하고 최대 밤 9시까지 맡길 수 있음

<그림 5-13> 왕복버스에 타는 아이들



○ 지자체 최초로 ‘마케팅과’를 설립

- 2004년에 전국 최초로 시청 내 마케팅과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도쿄도 내 주요 역에 ‘육아하기 편한 나가레야마’라는 슬로건의 포스터를 붙여 광고하는 등 이미지 구성에 노력

<그림 5-14> 슬로건 “엄마가 된다면, 나가레야마시”로 육아에 최적의 환경임을 홍보



자료: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4115>)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과거 15년 동안 인구가 약 2만4000명 증가(16.2%), 그중에서도 육아세대와 아이가 현저히 증가
 - 총무성 인구이동보고에 따르면, 치바현 나가레야마시는 2015년 전출보다 전입이 2989명으로 웃돌아, 전국 전입초과 시구정촌 중 19위를 차지
- 뛰어난 정책 입안력과 확실한 실행력을 가진 리더의 역할
 - 민간 싱크 탱크 출신 경험을 살려 지자체 행정예 마케팅 방식을 도입, 지금까지의 행정엔 없었던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냄
 - 그 성과로 나가레야마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고, 상업시설이나 물류거점 등 국내외 기업유치도 성공하면서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세금 수입 또한 5년 연속 증가 중
- 지자체 행정에도 민간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접근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
- 역전왕복스테이션 사업의 경우 젊은 부모들의 자녀 등원 시간을 감축시킴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사업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서 착안한 참신한 아이디어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치원 자녀 등원을 위한 ‘등원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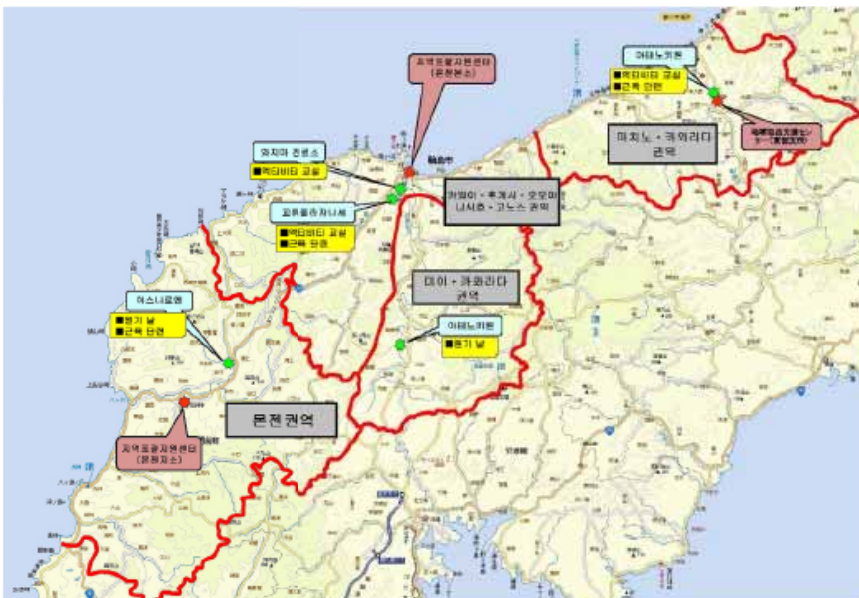
5. 일본 와지마시 고령자 데이 서비스

□ 추진배경

- 와지마시에는 세가지 형태의 노인 보건·복지서비스가 존재
 - 거주형 사업소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방문형 사업소는 재가 노인 등 자택 방문을 중심으로 한 형태

- 통근형 사업소는 노인 1일 방문 등 통근을 중심으로 한 돌봄(개인 간병) 예방 서비스
-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주형, 방문형 외에도 통근형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개호(개인간병)란 단순히 운동기능과 영양 상태 등 개별 요소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과 자기실현을 위한 대책과 활동을 지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생활 습관 개선, 병 예방 등의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 수명을 가능한 한 연장하는 대책이기도 함
- 따라서 ‘아스나로엔’이라는 통근형 사업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

<그림 5-15> 와지마시의 통근형 데이 서비스 센터 위치



자료: 김두환(2014), 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p.61

□ 추진내용

- 통근형 고령자 1일(데이) 서비스 시설 운영
 - 아스나로엔은 고령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와지마시의 보건복지시설로, 고령자의 밝은 생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
 - 폐교된 (구)우라카미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건립
 - 고령자가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간호가 필요한 상태, 즉 요개호 상태가 되기 전의 고령자를 위한 통근형 데이서비스를 제공
 - 아스나로엔의 셔틀버스가 마을에 방문하여 데이 서비스 이용 고령자를 태워오면, 이들은 하루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감
 - 1회 이용 시 고령자 본인 부담금은 1.000엔이며, 나머지 비용은 와지마시가 부담
 - 각 지구별로 시행하므로 각 마을 주민은 한 달에 2~3회 이용

<표 5-10> 아스나로엔의 데이 서비스 이용 스케줄

시간	내용
8:30	- 당일 이용 지구의 고령자를 태우러 셔틀버스가 지구의 각 집락으로 출발
9:30~10:00	- 아스나로엔에 도착 - 혈압·체온 측정 등 건강상태 체크 - 10시까지 담소시간
10:00~10:30	- 10시부터 음악에 맞추어 맨손 체조 시행
10:30~11:30	-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행 - 실내에서 볼 게임, 실외에서 게이트 볼 등
11:30~12:30	- 점심 사(급식)
12:30~13:30	- 점심 식사 후 휴식
13:30~15:30	- 목욕 및 담소
15:30	- 이용자를 셔틀버스에 태워 각 마을로 배웅

<그림 5-16> 아스나로엔의 이용자 활동 모습



① 아스나로엔의 입구와 셔틀버스



②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할 때 사용하는 방



③ 게임을 즐기는 고령자의 모습



④ 식당 모습(안쪽: 조리실)



⑤ 목욕실 모습



⑥ 취미 활동으로 만든 종이 우산

자료: 김두현(2014), 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p.63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아스나로엔의 데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는 한달 2~3회 이용 가능하지만, 이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음
- 한 이용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락에서 벗어나 차를 타고 와서 건강을 체크하고, 담소를 즐기고, 도시락도 먹고, 목욕도 하면서, 작은 여행을 가는 기분을 느끼는 곳”이라고 평가

-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 고령자가 집락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하나의 활력소 같은 중요한 역할 담당
- 즉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 및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활력 재충전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 특히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 등의 측면에도 긍정적 역할 수행

6. 독일 농촌관광 정책²⁷⁾

□ 추진배경

- 독일은 22개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개발이 3가지 우선순위 정책 중 하나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음
- 1960년대 후반부터 농촌관광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바이에른 주의 ‘바이에른 길’ 조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 바이에른주는 자연환경 상 농업이 불리하고 인구가 적아 소농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낙농 및 축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함
-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농가에 대한 일반 보조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와 농민 단체의 긴밀히 협력함

27) 농림축산식품부(2015)를 바탕으로 작성함.

□ 추진내용

- ‘농장에서 휴가를’ 사업은 독일 농촌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농업협회 인증제(DLG 인증제)를 실시하여 숙박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DLG 인증은 독일 국립특허기관(RAL)이 부여하는데 아래 표와 같이 숙박 시설 유형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이 조금씩 다르며 유효기간은 3년임
 - ‘농장에서 휴가를’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3%인 1만 5천호임

<표 5-11> DLG인증 대상 숙박시설 및 주요 평가항목

대상 숙박시설	주요 평가항목
공통	- 안정성, 농장의 전체적 인상, 농장 고유의 레크리에이션 설비, 주변환경
객실형	- 객실, 라운지 대여, 급식시설, 화장실
별채형	-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야영장	- 주변 환경, 휴게소, 취사장, 세탁장, 화장실
아동용 (보호자 미동반)	- 침실, 라운지, 놀이터, 급식시설, 위생시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p.19.

- 식량농업부정보서비스협회는 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밖에 농촌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에 다양한 보조금과 저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투자촉진보조정책과 농업융자정책의 일환으로 개별 농가에게 보조금 지급
 - 저리 융자는 농업신용은행에서 시행하는데 겸업추진농가, 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 및 공간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1960년대부터 ‘농가에서 하룻밤을’ 사업 등으로 꾸준히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쳐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 농업뿐만 아니라 농가 민박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이룰 수 있고 소득 증대효과가 있음
 -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라인스왈더 농촌관광 마을의 경우 지역 포도주 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민박 및 포도주 직거래를 활성화했는데 이 기간 동안 독일 전체 판매량의 25%를 달성함
- 농가의 소득 유지를 통해 농촌 해체를 방지하고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

제 6 장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1절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추진과제

KRILA

제 6 장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1절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1. 기본전제

- 인구감소·뉴노멀시대 메가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접근방식 수용
 -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생산은 동시에 위축되는 반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증가하여 경제가 침체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로 접어들었음(이희연, 2017; 박진경·김상민, 2017)
 - 지금까지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해왔고,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노동력 증가 및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을 경험해왔었음(인구보너스시대, Demographic Bo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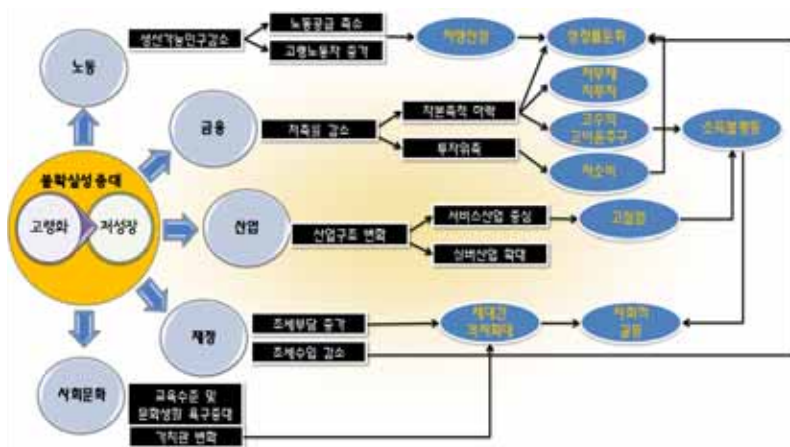
<그림 6-1>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의 특징



자료: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 통계청(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서고,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특히, 우리나라는 '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압축고령화 과정을 거쳐 고령사회로 이행 중
-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하여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등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상시화된 시대를 맞음(SERI, 2010)
-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저성장 기조로 진입
 - 1997년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에 평균 7.5%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1998~2008년)에는 4.4%, 2008년 금융위기 이후(2009~2011년)에는 3.4%로 하락(김선기 외, 2012)

<그림 6-2> 저성장시대의 특징



자료: 김선기 · 박진경 · 김도형(2012), 「저성장 · 고령화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시도로 '17년 기준 1,896,424명인 전남의 총인구는 '45년에 174만명으로 '15년 대비 약 3.1% 감소할 전망(통계청, 2017)
 - 전남과 강원은 각각 '13년, '14년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됨
 - 통계청(2017)은 '17년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32년에는 수도권과 '33년 호남권에서, '41년에는 중부권까지 확대될 전망
- 전남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획기적인 추세 변화가 없는 한 인구감소·고령화·뉴노멀시대 도래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전남은 '아이부터 어른 모두 살맛나는 전남'이라는 인구정책 비전 하에서 '인구 200만 시대 도래'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달성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임

<그림 6-3>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트렌드변화



자료: 조상필(2017),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방안 대토론회,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남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별 여건실태 분석 선행

- 현재 전남은 '00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순천시와 나주시, 광양군과 무안군의 4개 시군에 불과하여 시군별 인구감소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음
 - '00년 대비 '17년에 여수시와 담양군 등 6개 시군은 10% 이상, 곡성군과 신안군 등 10개 군은 20% 이상, 그리고 고흥군은 30% 이상 총인구가 감소하였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목포시와 여수시, 화순군 및 영암군은 사회적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며, 곡성군과 담양군 등의 지역들은 자연감소, 사회감소를 모두 겪고 있어 시군마다 인구감소의 유형이 다르게 발생
 - 총인구증가지역이지만 순천시와 광양시는 사회적 인구감소현상을, 나주시와 무안군은 자연적 인구감소현상을 겪고 있기도 함
 - 전남은 타 시도와 달리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증가를 모두 겪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전남은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인구의 현재상황과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각 시군이 스스로 인구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함

2. 기본방향

□ 인구감소 속에서도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뉴노멀시대 등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의 메가트렌드 변화는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
 - 메가트렌드 변화 속에서 전남 인구정책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전남 인구정책의 목표와 같이 '인구 2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인구증대에 목표를 둘 것인지, 인구는 감소해도 활력 있는 공동체 조성 및 삶의

질 확보에 목표를 둘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기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인구정책’,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창조’에 방점을 둔 인구정책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사결정이 배제되는 화학적 융합이 아니라 기존주민, 귀농귀촌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주체가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만들기 필요
-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이미 경험한 선진국 등에서는 도시쇠퇴 및 축소 현상을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스마트 쇠퇴(smart decline), 현명한 축소(shrinking smart), 창조적 축소(creative shrinkage) 등 지역 재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간주하고 있음(박진경·김삼민, 2017)

□ 인구감소 취약지역 대응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융합추진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위기에 처할 지역들은 대부분 소도시와 농촌지역임
 - 현재 전남은 '00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순천시와 나주시, 광양군과 무안군의 4개 시군에 불과하여 지역의 인구격차 심화
 - 이러한 시군별 인구격차는 농업, 산업 등 부문별 격차와 청년, 고령자 등 계층별 격차와 맞물려 지역의 과소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 지역격차, 부문격차, 계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취약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취약한 지역을 배려해 주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단편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시군별 균형발전정책과 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어디에 살더라도 꼭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 균형발전정책 융합추진

□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지역발전정책이기보다는 출산·양육·보육 등 사회복지정책에 해당함(박진경·김선기, 2017)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야기되는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인구감소의 원인과 현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발생함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문제는 결혼·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출산·보육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나 주거 등 지역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박진경·김상민, 2017)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전남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교육, 복지, 의료 등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 청(소)년, 여성, 고령자 등 생애맞춤형 수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 마련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추진
 - 인구감소로 인한 취약지역 등에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여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등 정책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정책대상을 집중·지원

<그림 6-4> 전남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전략

1. 인구활력 종합계획시스템 구축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활력 종합계획시스템은 먼저 시군이 스스로 인구실태분석을 추진하고, 실태분석에 입각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삶의 질 전반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양육 부문뿐만 아니라 일자리·소득, 귀농·귀촌, 주거,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시군은 인구감소문제와 관련하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한 ‘인구정책비전’을 설정하게 함
 - ※ 전남에서 인구증가지역에 속하는 순천시와 광양시, 나주시와 무안군은 같은 인구증가지역이지만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자는 자연증가로 인한 인구증가, 후자는 사회증가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 과거 거점도시였던 목포시와 여수시의 경우 사회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으로 특히, 20대 일자리 문제 심각
- 과대 추정된 계획인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커뮤니티가 공유할 수 있는 인구정책 수립
 - 모든 지역이 실정과 맞지 않게 인구를 증대시키는 비전을 설정할 수는 없음
- 해당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

-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지역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참가와 협력을 폭넓게 유도

2. 중앙부처의 인구사회정책 및 균형발전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구사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임
 -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보조받는 공동사업은 대부분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이므로 임신·출산·보건·양육지원정책의 경우 공동사업을 최대한 활용·연계하여 추진
- 한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정책은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균형발전정책임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공간정책 속에 인구감소지역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 지자체 연계협력으로 상생·협력 벨트 지정, 마을기업·공동체일자리사업 육성·확대 예정
 - 그러나 균특회계의 특성상 기존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인구감소 지역정책 역시 공간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어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인구정책과 연계
- 또한 전라남도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2010.4.3.)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전남의 시·군 경계지역과 인구취약지역과의 연계 필요

3. 전남형 종합거점시스템 구축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시대, 인구정책 종합계획시스템은 생활권 계획 하에서 종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필요함
 -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 개발사업 시스템 전반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나주시 등 인구증가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과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읍면 생활중심지 여건에 맞는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야 함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읍면 생활중심지를 다수 배후마을에 연계하는 거점마을 조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전라남도에서 읍을 기준으로 상위 인프라 거점을, 면을 기준으로 생활 인프라 거점을 조성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합리화해 나가야 함
 - 충남이나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소멸하는 읍면 등 과소화마을 분석이 필요하며, 시군 중심지와 읍면 거점마을을 연결하는 생활중심지 분석 필요

제3절 추진과제

1. 인구취약지역 진단지표 개발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대상

-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요건은 3년 평균 인구증감율이 -5% 이하이거나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 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위 50%이거나 20-39세 여성인구비율이 하위 50%인 지역임

- 2000-2015년간 인구증감율이 -5% 이하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고령인구비율 20% 이상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2013-2015년 평균 20-39세 여성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전남의 인구취약지역 진단지표 개발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전남의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구증가지역(순천, 광양, 무안, 나주)과 그 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구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남 시군별 인구증감율, 고령화지수 및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충남과 전북의 GIS를 활용한 ‘과소화마을’ 분석>

- 충남과 전북은 인구감소시대, GIS를 활용하여 과소화마을(20호 미만의 마을)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전북의 경우 2016년부터 전라북도 과소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소화 대응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 인구취약지역 재정지원체계 마련

- 현재 전남은 시군 공모사업 위주로 인구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인구취약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마련 필요
 - 균특회계 사업과 별도로 전남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 필요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북은 「동부권발전지원조례」(2006.5.12.) 하에서 특별회계를 설치(2010.11.5)
 - 충남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2007.3.30.) 하에서 당해 특별회계 설치

<표 6-1> 지역별 자체 균특회계의 세입구성

구분	내용
충남	도 보통세 5% 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충북	도 보통세 5% 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5%
전북	도 보통세 4% 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 전남은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2010.4.3.)는 제정하였으나 자체 균특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인 균특회계를 신설하고, 균특회계 상에 인구감소지역발전계정을 신설하거나 전환하는 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 가능

3. 전남형 인구변화대응 종합시책 추진

전남형 인구증대사업 추진

- 제4장과 제5장에서 국내외 인구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결혼·출산·양육 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경우 최대한 국비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한 지역중심의 출산·양육정책 및 지역중심의 정책 수행 위주로 추진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최대한 풀 수 있는 정책 등 자녀와 가족을 응원하는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
 - 여성의 사회진출을 정려하는 시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등
 -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 연계하여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방으로의 이주 및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추진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직과 거주, 생활지원 등 관련 지방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재구축사업 추진

- 전남형의 인구변화대응 종합시책은 보육센터 등 하드웨어 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마을재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프로그램 발굴 등을 함께 추진
- ‘전남형 인구증대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인구사회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업이라면, ‘마을재구축사업’은 균형발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
- 다양한 주체가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주체의 의사결정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습을 통해서 조화로운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
-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재구축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추진
 - 주민들의 교류와 활동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시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중심지나 생활중심지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집중배치하되, 광역기반시설 등은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취약지역의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거점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 광역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재정력을 증가시키며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
 - 전남에서 인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시설 등을 공동설치하게 함으로써 설치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4. 전남형 인구대응 시범사업 실시

- 2018년 현재 전남은 자체적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 중임
 - 공모사업은 임신·출산·양육·보육 부문, 청년 창작지원 부문, 귀농·귀촌 지원부문, 정주여건 개선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총 35건 중에서 임신·출산·양육·보육 부문이 18건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보니 공모사업의 추진내용이나 방식이 기본계획과 일치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기본계획은 청년, 아이, 중장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정책대상뿐만 아니라 정책부문별 시범사업 발굴 필요
- 공모사업 유형설정 및 평가체계 마련
 - ① 인구증가지역 포함여부 선택
 - ② 시군별 인구감소 유형선정 및 인구감소 원인분석
 - ③ 시군의 ‘인구정책비전’ 설정 및 인구정책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유형 마련
 - ④ 인구는 감소해도 활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 유형설정
 - ※ 유형 예시) 전남형 인구증대사업,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재구축사업,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등
 - ⑤ 공모사업 선정방식, 평가체계,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

<예시>

- 유형 II(자연증가, 사회감소, 총인구증가): 순천시, 광양시(20대 일자리, 30~50대 주택문제)
- 유형 III(자연감소, 사회증가, 총인구증가): 나주시, 무안군(주로 주택문제)
- 유형 IV(자연감소, 사회감소, 총인구감소): 장흥군 외(20~30대 일자리, 40~50대 주택문제)
- 유형 V(자연증가, 사회감소, 총인구감소):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화순군(20대 일자리, 30대 이상 주택문제)

- 시군 공모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추진모델 및 경험을 확산하는 계기 마련
 -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이 채택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사례 등을 확산하여 새로운 전남형 인구대응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고승연(2014),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14(13), 현대경제연구원.
- 구형수 외(2016),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권영섭(2013),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국토 378, 국토연구원.
- 김선기·박진경·김도형(2012), 「저성장·고령화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용웅(2011), “인구감소시대를 읽는 법”, 도시정보.
- 금창호·권오철(2016),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정훈(201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쇠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김경미·염명배·정병은(2010), 「세계 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기획재정부.
- 김두환(2014), 「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진(2017), “일본의 고령사회를 둘러싼 지역커뮤니티의 대응 -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07호.
- 김선기·박진경·김도형(201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순은(2016),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6 한일 공동세미나.
- 김정연·마상열(2011),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도시정보, 1(2).
- 김종인·김정섭(2016),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3(2):115-122.
- 김현아(2014),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현호 외(2010),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나주몽(2016),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도시정보, 409.
- 나카이 미키하루(2016), “과소대책의 현황과 새로운 권역조성”, 「한국과 일본의 지역
재생 및 창생」, 2015 한일 공동세미나.
- 농림축산식품부(2014),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 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촌연계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다카다 히로부미(2015. 6), “일본의 지방재생에 대한 대응”, 제11회 한일지방자치제도
연구회.
- 다카다 히로부미(2015. 11), “일본의 지방창생대응”,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2020」.
- 독일연방통계청(2016), 「Older People in Germany and the EU」
- 마상진(2016),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 사례와 시사점”, 「심락농정 포럼 ‘미래농업
인력 육성방안’ 1차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16.3.30. 전북연구원.
- 마상진·김종인(2016), “농업 인력 육성 정책으로서의 귀농 정책”,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촌 발전 정책과 귀농·귀촌: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4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박성재·김강호(2011),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 박세훈 외(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
연구원.
- 박세훈(2013),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 도시인구감소 실태와 대응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 박세훈(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642, 국토연구원.

- 박시현(2010),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출장보고서.
- 박진경(2017),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6월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이소영(2016),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백선정(2016),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61호.
- 변필성 외(2016),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 변창흠(2005),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시민사회포럼.
- 보건복지부(2015a),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 보건복지부(2015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보건복지부(2015c), 「인구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 성은미·조추용·권혜영(2012),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본 노인재가요양지원 센터시범사업의 과제」, 경기복지재단.
- 신동호(2015) “독일 루르지역의 도시재생정책: 오버하우젠시와 겔젠키르헨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제1호, 60-75.
- 야마구치 요시노리(2015. 11), “사가현의 지방창생”,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야마코시 노부코(2016. 9), “지방창생에 관한 총무성의 활동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2015 한일 공동세미나.
- 오은주·박진경(2015), 「청년층 농산업분야 취농·창업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현석·임정빈·김종인(2017), 「EU와 미국의 농업직불제 운영내용과 점검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광희(2017),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전략”, 충북도의회 단양세미나.
-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삼식(2007), “일본의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사례”,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봄호, 22-32.
- 이소영(201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방안”, 도시문제.
- 이소영(2016),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방안”,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이소영·김상민(2017),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김현호(2008), 「지역재생사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오은주·이희연(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왕건 외(2016),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국토연구원.
- 이원섭(2015), “영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정책 추진동향”, 지역과 발전, 제22호, 지역발전위원회
- 이원섭(2016),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지역정책 전망”, 「지역과 발전」, 제25호, 지역발전위원회.
- 이윤석(2015), “최근 일본행정의 이슈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전략”, 행정포럼 148.
- 이정원·이세원(2013),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창수(2015), “일본의 지방창생프로젝트와 환동해연구”. 2015년 HK 국내학술회의,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임상연·변필성(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작은 거점만들기와 향토 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492, 국토연구원.
- 임형백(201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제26호.
- 정명희·김형오(2010), “일본의 보라바이트사례와 청년취업의 시사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00816.

- 장재홍(2009),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장재홍 외(2012),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산업연구원.
- 정윤희(2013), “유럽의 인구변동과 도시정책 방향: 독일 드레스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2013.4. 국토연구원.
- 제현정·이희연(2017)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 주재복·박해육(2015),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2013),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방향」.
- 지역발전위원회(2015), 「우리가 꿈꾸는 지역행복이야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 지역발전위원회(2016), 「주민 스스로 일구어낸 지역희망이야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 지역발전위원회(2017), 「골고루 잘사는 지역발전이야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 지역발전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차미숙(2015),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국토정책 Brief 408, 국토연구원.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전략”, 국토정책 Brief 588, 국토연구원.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555, 국토연구원.
- 채우석(2016),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조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최민정(2015),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2016년 한일공동연구회.
- 해리 덴트(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청림출판.
- 행정안전부(2017),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행정안전부(2017),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Wiechmann & Pallagst (2012) “Urban shrinkage in Germany and the USA: A comparison of transformation patterns and local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6(2):261-80.

I.M. Dieleman (2016) *Liveability in Shirinking Cities*, TUDelft